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The Development Plan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2019. 12.

최일선 | 홍장원 | 이정아 |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최일선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1절, 제3장 제1절, 제3절, 제4장 제1절~제3절 일부, 제5장 제1절, 제2절, 제6장
연구진	홍장원 제5장 제3절 이정아 제2장 제2절~제5절, 제4장 제1절~제3절 일부 장정인 제3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홍성훈 한국잠수협회 사무국장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 이 훈 한양대학교 교수 홍성현 해양수산부 사무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문화·제도적 환경이 변화하고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관광 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국내 총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고성장 분야이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수요나 성장 잠재력에 비해 높은 계절적 집중성과 영세성 등으로 인해 산업적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요자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 실태분석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의견 반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정책 범위를 규정하고 부문별·성장단계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연구가 일반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해양관광, 그 중에서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마리나산업, 수중레저산업, 수상레저산업, 크루즈산업, 레저낚시산업 등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 중 업종이 명시된 신규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연구의 참신성이 돋보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성장단계 및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해양관광산업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종합정책연구본부의 최일선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홍장원 부연구위원, 이정아 전문연구원, 장정인 부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 정책 담당자와 학계 및 연구기관, 산업계 종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문을 통해 완성되었다.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여러 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목차

❖ 요약 · i

❖ Summary · x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용어의 정의	6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7
3. 연구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9

제 2 장 산업정책 개념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13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	13
1. 산업정책의 개념	13
2. 산업정책 주요 선행연구	16
제2절 국내 유관 정책사례 분석	20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동향	20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지원정책 동향	27
제3절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책사례 분석	34
1.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지원정책 동향	34

	2. 다부처 연계 지원정책 동향	44
	제4절 해외 관련 정책사례 분석	51
	1. 관광산업 육성 정책	51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57
	제5절 종합분석	59

제 3 장	해양레저서비스 산업 현황 분석 · 63
제1절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63
1. 분석의 개요	63
2.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64
제2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71
1. 분석의 개요	71
2. 사업체 현황	72
3. 부가가치 및 고용 성장률	76
4.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인	78
제3절 종합분석	79

제 4 장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경영 실태조사 · 81
제1절 조사개요	81
1. 기본방향	81
2.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82
제2절 결과분석	86
1. 사업체 운영 현황 분석	86
2.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 분석	104
3.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분석	109
제3절 시사점	117

제 5 장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 121

제1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설정	121
제2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지원정책	
부문별·성장단계별 추진과제	124
1. 창업지원	124
2. 자금지원	129
3. 수요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지원	133
4. 경영지원	138
5. 인력지원	140
6. 연구기술개발 지원	143
제3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	145
1. 마리나업	146
2. 수중레저업	150
3. 수상레저업	154
4. 크루즈운영업	157
5. 낚시관광업	158
6. 기타사항	159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1

제1절 결 론	161
제2절 정책제언	163

❖ 참고문헌 · 169

❖ 부 록 · 177

1. 설문조사지	178
2. 중소기업벤처부 분야별 지원 사업	186

표 목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산업정책의 개념	14
〈표 2-2〉 산업정책 유형 사례	15
〈표 2-3〉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조항	20
〈표 2-4〉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	21
〈표 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관광산업 지원정책 관련 조항	27
〈표 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현황	28
〈표 2-7〉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현황	30
〈표 2-8〉 관광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32
〈표 2-9〉 연도별 관광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현황	34
〈표 2-1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36
〈표 2-11〉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38
〈표 2-12〉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작 현황	43
〈표 2-13〉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45
〈표 2-14〉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48
〈표 2-15〉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	52
〈표 2-16〉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옵션 개발 현황	53
〈표 2-17〉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분야 지원	53
〈표 2-18〉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분야 지원	54
〈표 2-19〉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지원	55
〈표 2-20〉 국가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범위	58
〈표 3-1〉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	64
〈표 3-2〉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의 분류	71
〈표 3-3〉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 수(2017년 기준)	73

〈표 3-4〉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매출액(2017년 기준)	74
〈표 3-5〉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별 평균매출액 추이(2015~2017)	75
〈표 3-6〉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종사자(2017년 기준)	76
〈표 3-7〉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77
〈표 4-1〉 설문조사 설계	83
〈표 4-2〉 설문구성	84
〈표 4-3〉 응답자 특성	84
〈표 4-4〉 심층인터뷰 설계	85
〈표 4-5〉 인터뷰 대상자	85
〈표 4-6〉 사업체 심층인터뷰 조사 항목	86
〈표 5-1〉 성장단계별 필요한 산업지원 정책	122
〈표 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정책	138
〈표 5-3〉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전문인력사이트 관광인 제공 서비스	142
〈표 6-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제시	16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8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정책 사업 현황	24
〈그림 2-2〉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동향	32
〈그림 2-3〉 연도별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	40
〈그림 2-4〉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전체)	41
〈그림 2-5〉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해양레저관광 분야)	41
〈그림 3-1〉 해양레저관광 경험률	65
〈그림 3-2〉 해양레저관광 방문시기	65
〈그림 3-3〉 해양레저관광 방문지역	66
〈그림 3-4〉 해양레저관광지 방문 목적	67
〈그림 3-5〉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	68
〈그림 3-6〉 해양레저관광 활동 만족도	69
〈그림 3-7〉 국내 1인당 해양레저관광 비용(1회 기준)	70
〈그림 3-8〉 해양수산 레저·관광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78
〈그림 4-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경영실태 조사 기본방향	82
〈그림 4-2〉 사업체 설립 시기	87
〈그림 4-3〉 사업체 소재지	87
〈그림 4-4〉 사업체 조직 형태	88
〈그림 4-5〉 사업체 구분	88
〈그림 4-6〉 벤처기업 인증 여부	89
〈그림 4-7〉 대표자 경영 형태	89
〈그림 4-8〉 대표자 성별 및 연령	90
〈그림 4-9〉 연간 영업기간	91
〈그림 4-10〉 평균 근로자 수	91

〈그림 4-11〉 성수기 근로자 수	92
〈그림 4-12〉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비중	93
〈그림 4-13〉 근속기간	93
〈그림 4-14〉 최근 3년간 인력 수급 여건	94
〈그림 4-15〉 향후 인력 수급 전망	95
〈그림 4-16〉 연평균 매출액 규모	95
〈그림 4-17〉 연평균 영업비용 규모	96
〈그림 4-18〉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96
〈그림 4-19〉 영업비용 중 홍보비 비중	97
〈그림 4-20〉 평균 영업이익 규모	98
〈그림 4-21〉 2019년 순이익 전망	98
〈그림 4-22〉 창업 소요 비용	99
〈그림 4-23〉 창업 자금 조달 방법	100
〈그림 4-24〉 정부 정책자금 활용 시 애로사항	101
〈그림 4-25〉 최근 3년간 자금조달 여건	101
〈그림 4-26〉 향후 자금조달 전망	102
〈그림 4-27〉 사업체 운영 자금 조달 방법	102
〈그림 4-28〉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유형	103
〈그림 4-29〉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	104
〈그림 4-30〉 사업체 성장 단계	105
〈그림 4-31〉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	105
〈그림 4-32〉 과도한 규제 사항	106
〈그림 4-33〉 기업 성장 단계별 경영상 애로사항	108
〈그림 4-34〉 정부의 산업체 지원 사업 경험 여부	109
〈그림 4-35〉 지원받은 사업의 소관 부처	110
〈그림 4-36〉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 인지도 및 지원 경험	110
〈그림 4-37〉 지원받은 분야 및 횟수	111
〈그림 4-38〉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112
〈그림 4-39〉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13
〈그림 4-40〉 현재 해양레저관광 분야 기업체 중 정부 지원 대상 단계	114

〈그림 4-41〉 향후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부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단계	115
〈그림 4-42〉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115
〈그림 4-43〉 기업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116
〈그림 4-44〉 향후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	117
〈그림 5-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방향	123
〈그림 5-2〉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기업지원센터	127
〈그림 5-3〉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128
〈그림 5-4〉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유형	131
〈그림 5-5〉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투자 전용관	132
〈그림 5-6〉 부산해양레저관광 상품 마케팅 ‘하나로 패스’ 사례	135
〈그림 5-7〉 국내 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사례	136
〈그림 5-8〉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 전문인력 사이트 관광인	142
〈그림 5-9〉 국내 요트대여업 공간(좌, 중)과 해외 마리나업 공간(우)	147
〈그림 5-10〉 국내 마리나업 상품(좌)과 해외 상품(우) 비교	149
〈그림 5-11〉 일본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수중레저사업장	152
〈그림 5-12〉 국내 해변 서핑서비스 공간과 해외 서핑대여 공간(일본)	155
〈그림 5-13〉 해외 수상레저기구 영업공간·구역과 기상 정보(미국)	156
〈그림 5-14〉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15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 국내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수요자의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및 수요에 비해 산업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정책 과제 제시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관광 부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자(연도): 류광훈·김희수(2018) 연구목적: 관광산업 내 사업체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관광사업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지원정책 검토 및 사례분석 기업규모별·성장단계별 관광사업체 현황 관광사업체 성장요인 실증분석 관광사업체 및 관광벤처기업 실태조사 관광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관광 창업기업 육성 방안 연구자(연도): 안희자(2015) 연구목적: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동향 및 창업 실태 분석을 통하여 관광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조사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창업기업 관련 이론적 논의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관광 창업기업 실태 및 정책 요구도 분석 관광 창업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자(연도): 김덕기·김현주(2013) 연구목적: 관광산업 분야의 업종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자료 분석 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조사 해외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 생태계 개념 및 구조 분석 관광산업 특성 및 주요 업종별 생태계 구조 분석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 추진 사례 분석 관광산업 환경 변화 전망과 구축 방안 마련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구는 일반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큰 차별성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정책 개념 및 동향 분석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현황분석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경영실태 분석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과제 및 지원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 중 마리나산업, 수중레저산업, 수상레저산업, 크루즈산업, 레저 낚시산업 등 업종이 명시된 신규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을 ‘해양레저관광을 수용 또는 촉진하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산업정책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산업정책 관련 동향 분석,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 설정과 성장단계 및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창업·기술·인력·수출·내수·기타 등 7개 분야에 지원정책을 추진함. 내수와 창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 내용의 전문성이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융자지원,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 자금을 지원하고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창업을 지원함.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는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을 제시함. 기금 부재로 지원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미흡함
- 해외 주요국의 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규제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클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 해양레저관광 경험률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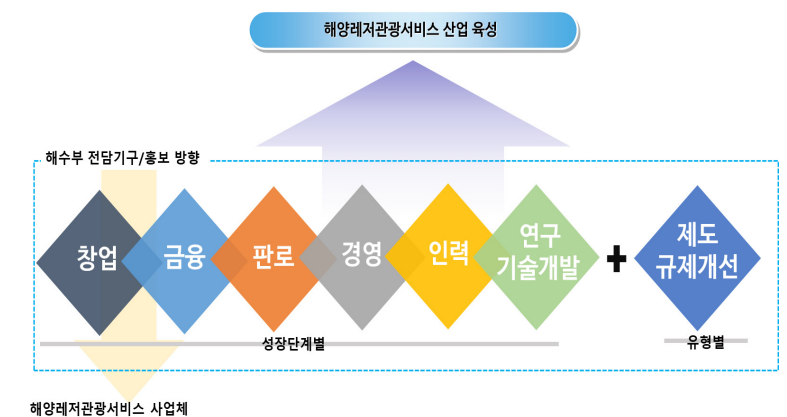
균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별 매출액은 연평균 15.9~42.6%의 성장률을 보임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은 고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60% 이상이 매출액 1억 미만이고, 평균 상용근로자도 1.6명에 불과해 정부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 해양레저서비스 산업은 초기 성장기로 높은 계절성으로 인한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며, 산업지원 정책 활용 경험 이 낮고 사업체 성장단계별로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가 다소 상이함
 - 창업 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한 비율은 11.3%에 불과한데, 이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 특성상 장비 구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고가 장비에 대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데서 기인함
 - 정부의 산업체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23.7%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정보 부족이 50% 이상이었으며, 지원받은 사업은 금융지원과 시설 및 공간지원에 집중되어 다양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함
 - 사업체 경영 시 공통적으로 과당경쟁과 정부규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에는 자금조달, 초기 성장기에는 상품개발과 인력수급, 초기 성장기와 쇠

퇴기에는 판로확대와 경영지식,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에는 과당경쟁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석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부문별, 사업체 성장단계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업 방안 모색,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자료: 저자 작성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문·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자금, 수요확대 및 판로개척, 경영, 인력, 연구 기술개발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함
 -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통계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창업지원 자금 확보, 창업 관련 경영 상담 및 공간 지원, 창업 매뉴얼 제작·배포, 창업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금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자금의 활용성 제고 및 기금 신설 방안 모색,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단위 자금지원이나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한 레저장비의 담보 방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키플레이어 기업 등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수요확대 및 판로지원을 위해 판로 마케팅,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마케팅 및 브랜드화,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성장단계 기업 등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영지원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컨설팅 제도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멘토링 제도 및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아카데미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 인력지원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방안 모색, 관련 학과 개설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취업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이 필요함
- 연구기술개발 지원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R&D 과제 발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방향 설정 및 R&D 추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브랜딩 및 경영 컨설팅 등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산업유형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마리나업, 수중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 크루즈운영업, 낚시터·낚시선박운영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함
 - 마리나업은 마리나업 등록기준 개선 및 마리나선박 탑승자 서비스 공간 확보, 야간항행규정 마련 등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수중레저사업은 어촌 유희시설 공동 활용, 기초 인프라 확충

- 및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함
- 수상레저사업은 서비스 제공 및 장비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와 영업 절차 및 기상정보 제공, 수상레저 영업공간 확보가 필요함
 - 크루즈운영업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홍보 강화, 국내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지원, 국적크루즈선사 육성이 필요함
 - 낚시터·낚시선박운영업은 낚시 활동자 및 낚시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문화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낚시 활동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함
 - 또한 정부는 해양레저관광활동 행태 및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창업 시 산업분류 및 관련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부처 협력·통합회의를 정례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국가차원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산업지원 정책 수립·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정책 추진 및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산·관·학·연·정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표 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구분		내용
부문별· 성장단계별 산업 지원 정책	창업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업종 분석 및 산업분류체계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 전담팀 신설
		정책자금 확대 및 민간 투자유치 방안 마련
		기업 상담 창구 상시 운영을 통한 경영지원 전략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거점 공간 확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자금지원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 및 융자방안 마련
		고가의 레저장비 담보설정 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실시
	판로지원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투자홍보(IR)기회 마련
		홍보 및 예약시스템 채널 마련
		지역 해양레저관광 상품 브랜드 개발 지원
		정부 인증 전국단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브랜드 개발
		국내·외 산업박람회 확대 개최 및 참가 지원
	경영지원	전문 경영 컨설팅 제도 마련
		강소기업(우수 해양레저관광기업)의 멘토링 제도 마련
	인력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아카데미 운영
		산·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정규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방안 마련
		지역 대학 인턴십 제도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취업 포털사이트 구축
유형별 산업지원 정책	연구기술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R&D 개념 및 정책 영역 설정
		산업계 R&D 수요조사 실시
		산·관·학·연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기업체 대상 해양레저관광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수행
	마리나업	•마리나업 등록 기준 개선
		•마리나항만 공유선석 확보
	수중레저업	•마리나업 창업공간/서비스 공간 정비
		•마리나선박 항행규정 정비
		•서비스인력 확보
		•수중레저 기반시설 확충
		•수중레저공간 정비

구분	내용
수상레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 서비스공간 확보 수상레저 활동공간 및 안전정보 제공
크루즈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개편 크루즈 홍보사업, 연안 크루즈상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낙시관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시관광 사업자 교육(서비스/안전 교육), 낙시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낙시관광 캠페인: 낙시안전/수산자원 보호/바다낙시대회 확대 지원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레저활동 트렌드 변화 및 신규 해양레저장비 기구 정보 제공 신규 해양레저서비스 창업 관련 규제 정보 및 창업 안내 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본 보고서는 수요 및 성장 잠재력이 높고 업종 신설 및 분화 등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부문별·성장단계별 산업지원 방안으로 창업, 금융, 판로,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으로 산업 유형별 창업 및 서비스 활동 공간, 인력 및 자격기준, 안전관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개념 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화 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 발굴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 및 적실성을 제고함

The Development Plan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1. Purpose

- Korea's policies regarding the marine and leisure tourism industry have primarily focused on invigorating the experience and uses of the industry by consumers. Compared to high national interest in the marine and leisur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high consumption rates, i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extremely low.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ise a number of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ine and leisure industry befitting to its high growth potential. To achieve this, the pres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rvice industry were first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policies for industrial support reflecting the features of marine and leisure

tourism companies.

-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invigora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in Korea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industry and proposing customized policy tasks.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in contents
Major preceding studies	1	<p>Title: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p> <p>Researcher (year): Ryu Gwang-Hun, Kim Hee-Soo (2018)</p> <p>Objective: Seek industrial policies to develop companies within the tourism industry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p>	<p>Literature review</p> <p>Analysis of foreign cases</p> <p>Survey on tourism companies</p>	<p>Review of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nd case analysis</p> <p>Present status of tourism companies by size and by developmental stage</p> <p>Empirical analysis on growth factors of tourism companies</p> <p>Research on the status of tourism companies and tourism ventures</p> <p>Prepare measures to construct a support system for the tourism industry</p>
	2	<p>Titl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tartup Businesses in Tourism</p> <p>Researcher (year): Ahn Hee-Ja (2015)</p>	<p>Literature review</p> <p>Survey based on in-depth interview</p> <p>Survey targeting</p>	<p>Theoretical discussion relevant to tourism startups</p> <p>Trends and implications of</p>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in contents
This study	Objective: Provide policy measures to vitalize and promote tourism startups by analyzing policy trends for supporting startups in Korea and overseas	startup companies Consultation with experts	policies for supporting startups in Korea and overseas Analyze the status of tourism startups and policy demands Directions and tasks of policies for promoting tourism startups
	3 Title: Building an Ecosystem for the Advancement of the Tourism Industry Researcher (year): Kim Deok-Ki Kim Hyun-Joo (2013) Objective: Analyze the ecosystems of the tourism industry by business type and suggest measures to induce high added value of the tourism industry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value chain and network structure of stakeholders In-depth interview with stakeholders Analysis of foreign cases	Analyze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ecosystem of the tourism industr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structure of the ecosystem by type of business Analyze cases of implementing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cosystem in the tourism industry Forecast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prepare construction measures
	Existing studies were focusing on industrial policies for the general tourism industry, falling short of support policies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Survey In-depth	Concept and analysis of policy trends in the tourism industry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in contents
	<p>to promote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p> <p>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pres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Based on this analysis it intends to suggest direction for promo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as well as customized policy tasks.</p>	<p>interview</p> <p>Analysis of foreign cases</p> <p>Survey on experts</p>	<p>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p> <p>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p> <p>Derive task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p>

Data: Written by authors.

2) Feature

- As st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cope of this research includes new fields from the laws legislated to promote marine leisure and tourism activities, including the marina industry, the underwater leisure industry, the water-related leisure industry, the cruise industry and the recreation fishing industry.
- The subject and scope of this study are clearly specified in this study by defin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as ‘businesses in pursuit of provision and arrangement of services that accommodate and/or facilitate marine leisure tourism’. Following this, it carried out a study on the concept of industrial policies and major preceding studies, analysis on the trends relevant to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al policies, analysis on the use and trends of marine leisure tourism and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of businesses in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rvice through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Through these endeavors, this study establish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while extracting implementation tasks per developmental stage and industrial type.

3. Results

1) Summary

- Korea’s policy to the promotion of tourism has been mainly driven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l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ve led the policy related to marine leisure and tourism.
-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rolled out support policies in 7 areas such as finance, startups, technology, manpower, export, domestic demand and others targeting SMEs, startups and venture capitals

etc. While the support has been concentrated on boosting the domestic demand and startups, policy targets are fragmented with highly specialized support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 Tapping into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provided support financing, building the foundation for invigorating tourism, and aiding starting a new business via projects for supporting tourism ventures. Since the Ministry is focusing on providing fund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support policies taking the business cycle into consideration.
- Based on the 1st and 2nd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and Fisheries,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Maritime and Fisheries and the National Tourism Strategic Meet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ve suggested policy directions and support projects. However, the absence of relevant funds has faile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project supports, while lacking the momentum for driving mid-to-long term projects.
- Major countries' policies to the promotion of th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concentrate on creating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by improving regulations and developing new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cluding crowd funding. In addition, countries are focusing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by establishing a statistical foundation for marine and leisure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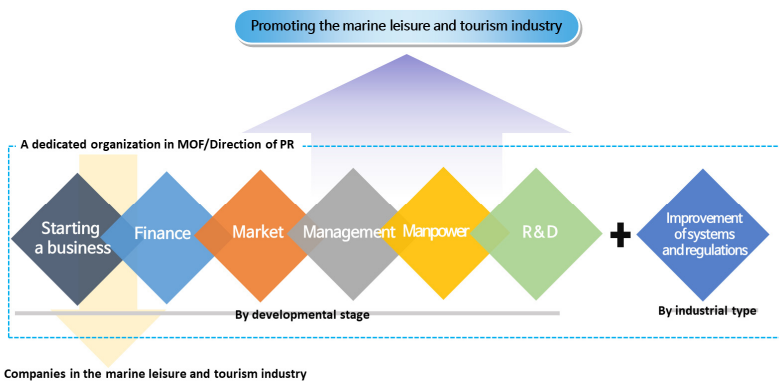
- The demand and supply of marine leisure tourism in Korea has expanded as both its experience rate and annual average sales of companie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have steadily increased. However, the industry itself has fallen far behind compared to the rapid growth of demand.
- The experience rate of marine tourism has been steadily increased from 80% in 2015, 82.7% in 2016 further to 86% in 2017. Moreover, average sales of companies engaging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have shown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15.9~42.6%.
- Despite being a high growth industry, 60% of the companie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have generated less than 100 million KRW in sales, with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standing at 1.6 people per organization. Hence, the industry requires governmental measures to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in Korea is at the early stage of growth, with the industry typically characterized by small size businesses as a result of being highly affected by seasonality. While the industry lacks experience of utilizi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the challenges and the demands of utilizing support policies var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stage of companies.

- The ratio of companies utilizing government policy funds was a mere 11.3% when starting up a business. This is because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use expensive equipment as collateral despite a lot of money must be spent on purchasing equipment.
- Only 23.7% of companies hav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industrial support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More than 50% of companies responded that a lack of information was a major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in such policies. Since proj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re concentrated on financial and spatial support, a variety of support polici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 Companies face common challenges including excessive competition,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limitations to financing during business operations. The biggest challenges per developmental stage are as follows; financing at the start-up stage, product development and securing manpower at the early growth stage, expanding markets and business knowledge at the early growth and decline stage and excessive competition at the start-up and early growth stage.
- It is necessary to extract support measures customized to the type of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al stage

and business type in order to foster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In addition, multi-layered promotional measures are required including seeking cooperation measures with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preparing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and system improvements etc.

Figure 1.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Source: Written by authors

- Policies for suppor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should be implemented in 6 areas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and growth stage. It includes starting up a business, finance, expanding the demand and discovering new markets, management, manpower an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start-up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a statistical system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curing start-up support funds, business consulting relevant to start-ups and providing spatial support, developing and distributing start-up manuals and preparing PR measures.

-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by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existing policy funds while seeking new measures to create a new fund. Other measures are also necessary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t the project leve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holding leisure equipment as collateral utilizing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nd strengthening support to companies at the growth stage including key player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 In order to expand the demand and support markets, this study suggests market research for discovery of new sources of sales, while marketing and creating a brand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a region. In addition, releva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build networks through holding and participating in industrial exhibi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customized to businesses at the developmental stage and especially to companies currently at the growth stage.
- Management support should include establishing a

specialized consulting system reflect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building networks. In addition, oper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is necessary with the utilization of a business academy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for companies.

- Manpower support can be realized through training programs catered towards professional worker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rvice sector as well as measures for connecting it with employ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open up relevant departments in universities, operate internally stable internship programs, and establish a portal site for job employment.
-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or supporting R&D; discovering industrial R&D tasks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tting up a direction for support through a demand survey and supporting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branding and business consulting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 Policies for promo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are suggested centering on the following 5 areas classified by type of industry: the marina business, the underwater leisure business, the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the cruise operation business and fishing spot and fishing vessel operation

business.

- The marina business requires improving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business, securing service spaces for passengers of marina ships, diversifying tourism programs by preparing navigational regulations at night, training service manpower and improving its qualification standards.
- The underwater leisure business needs a joint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in fishing villages, while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by reinforcing basic infrastructures and designating maritime landscape conservation zones.
- The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requires securing spaces for servicing and storing equipment and providing business procedures and weather information. In addition, the business also needs securing spaces for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es.
- The cruise operation business is in need of expanding programs of nurturing cruise professionals, strengthening P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ourism products for domestic coastal cruise and fostering national cruise companies.
- The fishing spot and fishing vessel operation business requires education and campaign for improving the usage culture targeting anglers and those engaging in the recreation fishing busin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duce online service contents for the

convenience of anglers.

-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which allows the analysis of behaviors and changing trends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activities so that a new startup can be included into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and relevant businesse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old a multi-department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eeting reg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n order to promote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In addition, the MOF should establish an agency dedicated to supporting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within the Ministry.
-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executing effective supports for the industr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provide legal grounds for promoting policies to support the marine leisure tourism industry and securing funds.
-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ounter for collecting a variety of policy suggestions by holding a regular meeting with experts in the industry, the government,

the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and discussing regulatory and system improvements.

Table1. The Development Plan of the Marine Leisure & Tourism Service Industry

Classification		Contents
Industrial support policy by business type and developmental stage	Support for starting a business	Analyz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and preparing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ing a new team dedicated to startup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Expanding policy funds and devising measures to attract investment
		Setting up managerial support strategies through regular operation of business consulting counters
		Securing spaces for the base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 manual for starting a business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Preparing PR measures for the current system of supporting startups
	Financial support	Devising investment and loan measure at the project level
		Developing measures for holding expensive leisure equipment as collateral
		Creating a fund for promo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Holding consulting sessions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Crowdfunding by opening an online platform
		Providing IR opportunities targeting small hidden champions
	Market support	Arranging a channel for PR and reservation system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brands for marine leisure and tourism products
		Developing a business brand for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at the national level certified by the government

Classification		Contents
	Management support	Expanding the size of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al exhibitions and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Introducing professional business consulting system
		Devising mentoring system of small hidden champions (excellent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Operating an academy for marine leisure and tourism companies
	Manpower support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linking the industrial, the governmental and the academic circles
		Devising measures for opening education curriculums in regular institutions
		Planning an internship program in local universities and devising incentive measures
		Building a portal site for employment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R&D support	Setting the concept and policy scope of R&D in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sector
		Conducting a survey on R&D demand in the industry
		Discovering and carrying out joint research tasks with the industry, the government, the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Developing products and brands for marine leisure tourism targeting companies
Industrial support policy by type	Marina business	Improving the registration standards of the marina business Securing shared berths in marina ports Maintaining spaces for starting up a business/providing service in the marina business Improving navigation standards of marina ships Securing service manpower
	Underwater leisure business	Expanding infrastructures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Improving underwater leisure spaces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Securing spaces for water-related leisure services Providing spaces for water-leisure activities and safety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ntents
	Cruise business	Improving and expanding projects for nurturing cruise experts Conducting cruise PR projects and projects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astal cruise products
	Recreation fishing business	Supporting the training of recreation fishing operators (service/safety train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ecreation fishing contents Recreation fishing campaign: fishing safety,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expanding and supporting ocean fishing competition
	Others	Providing information on changing trends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and new marine and leisure equipment Offering information on regulations relevant to startups in the marine leisure service sector and startup guide information

Source: Written by author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This study specifies the necessity of policies for suppor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in which businesses are divided or newly created with high demand and growth potential. By suggesting measures for supporting the industry by sector and developmental stage, it derived support policies for business startups, finance, market, management, manpower and R&D. Furthermore, it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systems and regulations including securing spaces for startups and service activities, manpower and qualifications and the

environment for safety management.

- This study clearly states policy targets by first defining the concept of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while seeking policies for supporting the industr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n this field. Through these endeavors, the study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preciseness of policies for promo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2019년 4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하여 관광산업 지원정책을 기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¹⁾ 그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다른 국가의 관광산업보다 뒤쳐져 있음을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기술, 인력,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지원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고도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발전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내수시장 확대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재편으로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 11. 2)’을 발표하고 제2의 벤

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9. 4. 2)

처창업 붐을 위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자금의 증대’, 재투자·재도전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2018년 벤처기업의 수는 3만 7,000개, 벤처투자액은 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²⁾

우리나라 전 산업 대비 중소기업 기업체수는 99.9%이며, 인구의 87.9%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다.³⁾ OECD 회원국에서도 중소기업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60~70%의 일자리 마련, 부가가치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⁴⁾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주도개발 및 고도성장 정책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영세한 경영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이다.⁵⁾ 이렇듯 중소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고용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이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안정과 사회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분야는 사업체의 85.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이며, 종사자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⁶⁾ 정부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2) 벤처확인·공식시스템(검색일: 2019. 10. 30)

3) 안승구 외(2018), p. 1.

4) OECD(2000), p. 1.

5) 임소진(2012), pp. 1~2.

6) 문화체육관광부(2018a), p. 40.

더욱 부각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역시 종사자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⁷⁾

한편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시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관광객 규모는 13억 명,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⁸⁾ 또한 2018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10.4%, 전체 일자리의 10%(3억 2천만 개)가 관광산업을 통해 창출되고 있으며, 성장률은 전년대비 3.9%로 동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는 등 관광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⁹⁾

국내 관광시장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여행경험률은 90.1%, 이동총량은 4.8억 일이다.¹⁰⁾ 해양레저관광은 국내 전체 관광시장의 50% 수준으로 여행경험률은 86%로 나타나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¹⁾ 특히 해수욕장, 낚시 등 기존 전통적인 강세 분야와 함께 레저보트, 스킨스쿠버, 크루즈 등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해양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¹²⁾

OECD 해양경제 중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7) 해양수산부(2019a), p. 14.

8) UNWTO(2018), p. 1.

9)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홈페이지(검색일: 2019. 5. 30)

10) 문화체육관광부(2018b), p. 41.

11) 해양수산부(2019b), p. 71.

12) 해양수산부(2019b), pp. 73~74.

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¹³⁾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4%이며, 이 중 해양레저관광업이 해양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나타나¹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의 규모 측면에서는 사실상 발전하고 있지 못한 산업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에 부합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마련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활동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업종이 분화되고 전문분야가 신설되었으나 신규 진입을 위한 정보 부족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 성장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분야의 신설된 업종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첫째, 마린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2017년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기타 마린나 관련업 등 다양한 마린나 업종을 신설한 바 있다. 둘째, 국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7년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중레저사업을 신설하였다. 셋째, 크루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밖에 신규업종은 아니지만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법률 및 업종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내 낙시터업, 낙시어선업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수리업, 해양치유 전

13) OECD(2016), p. 14.

14) 2014년 기준 해양수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액은 86조 8,509억 원이며, 이중 해양레저관광업은 5조 8,465억 원으로 10개로 분류된 사업 중 7위를 차지함. 해양수산부(2018), p. 17.

문인력 양성 등 신규 업종과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이에 대비한 관련 정책 근거 및 구체적인 산업정책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수요 확충 및 기반시설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편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시장 성장 잠재력에 부합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국내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용 활성화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산업 측면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성장 잠재력에 부합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해양레저관광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용어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 ‘해양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레저의 개념은 일의 영역 외에 여가시간 내에 일어나는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유사하며, 순수관광의 형태와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여가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관광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특정 목적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그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의 일상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풍토의 확산 등은 레저와 관광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은 지역주민의 일상과 관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상적인 레저와 관광의 경계가 더욱 모호한 분야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저관광’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범위와 정책제안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정의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 객체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유·무형의 서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이란 ‘해양레저관광을 수용 또는 촉진하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연구의 대상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령 중에서 업종이 명시되어있는 신규 또는 신설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마리나산업, 수중레저산업, 수상레저산업, 크루즈산업, 레저낚시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 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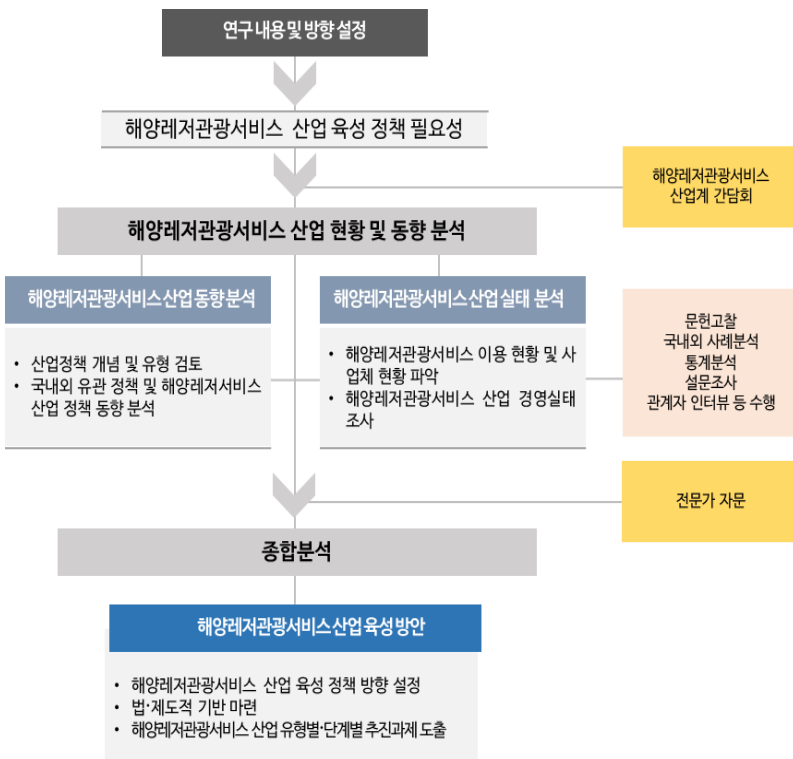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산업정책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고, 국내외 산업정책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국내 해양레저관광 수요를 파악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을 2차 자료로 분석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살펴보고자한다. 4장에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현황, 경영상 애로사항,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과 성장단계 및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산업정책 및 주요 국가의 관광 산업정책을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2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수요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경영상태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자 심층 인터뷰와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내 해양레저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였다. 종합적인 연구의 추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관광분야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류광훈·김희수(2018)의 연구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관광산업 내 사업체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을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산업지원 정책의 검토 및 사례분석, 기업규모별·성장단계별 관광 사업체 현황 분석, 관광사업체 성장요인 실증분석, 관광사업체 및 관광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상 어려움, 필요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여 관광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희자(2015)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기업이라고 분석하고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동향과 창업 실태를 분석하여 관광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광 창업기업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고, 국내외 창업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관광 창업기업 실태 및 정책 요구도 분석을 통하여 관광 창업기업 육성 정책 목표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부처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원 정책 확대, 기존 관광사업체와 연계한 창업기업 지원, 관광 분야 산학 연계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민간 영역과의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육성 지원 정책 등이다.

김덕기·김현주(2013)의 연구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기존 관광산업 정책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분야의 업종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

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관광산업의 특성 및 주요 업종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산업육성 정책 담당 부처로 그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이 대표적이며, 해외 주요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생태계 구축방향은 크게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시장의 잉여제고,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외부효과 극대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 관광산업정책은 일반적인 내륙 관광 범위에 한정하여 분석 및 제안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유형별 정책제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여행업,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제안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처 협업 방안에 있어서도 해양레저관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일반 관광산업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단계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지원 정책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세부 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류광훈·김희수(2018) • 연구목적: 관광산업 내 사업체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해외사례분석 • 관광사업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정책 검토 및 사례분석 • 기업규모별·성장단계별 관광사업체 현황 • 관광사업체 성장요인 실증분석 • 관광사업체 및 관광벤처기업 실태조사 • 관광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관광 창업기업 육성 방안 • 연구자(연도): 안희자(2015) • 연구목적: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동향 및 창업 실태 분석을 통하여 관광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심층인터뷰 조사 •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창업기업 관련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관광 창업기업 실태 및 정책 요구도 분석 • 관광 창업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 연구자(연도): 김덕기·김현주(2013) • 연구목적: 관광산업 분야의 업종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분석 • 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조사 • 해외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생태계 개념 및 구조 분석 • 관광산업 특성 및 주요 업종별 생태계 구조 분석 •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 추진 사례 분석 • 관광산업 환경 변화 전망과 구축 방안 마련
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정책 개념 및 동향 분석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구분	세부 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연도): 최일선 외(2019) • 연구목적: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육성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구분: 기본과제 (K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인터뷰 • 해외사례 분석 • 전문가 조사 	<p>현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경영실태 분석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과제 및 지원 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제 2 장

산업정책 개념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 및 주요 선행연구

1. 산업정책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특정 경제 부문의 활동 방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¹⁵⁾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 국민경제의 보다 효과적인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시장실패를 조절하고자 하는 공공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율하는 경쟁정책이 대표적이다.¹⁶⁾ 이밖에 광의의 개념에서 산업정책은 지역균형 발전정책, 규제 개혁, 제품안전 규제 등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정책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즉, 협의의 산업정책은 특정

15) Oxford Dictionary of Economics(검색일: 2019. 5. 8)

16) 산업연구원(2019), p. 154.

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 우대나 지원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자극하여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¹⁷⁾

이 외에도 기관의 특성이나 학자에 따라 산업정책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OECD(1975)는 산업정책을 “산업 성장 및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정의하였고, European Commission(2002)은 산업정책을 “본질적으로는 수평적인 정책이며 생산성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⁸⁾ Beath(2002) 역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특정 기업 및 산업 부문을 겨냥한 정책을 협의의 산업정책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거나 좌우하는 모든 국가 정책을 광의의 산업정책으로 설정하여 개념화하고 있다.¹⁹⁾

〈표 2-1〉 산업정책의 개념

구분	내용
OECD (1975)	산업 성장 및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정책
European Commission (2002)	본질적으로는 수평적인 정책이며 생산성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
Beath (2002)	협의의 개념: 특정 기업 및 산업 부문을 겨냥한 정책 광의의 개념: 국가의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거나 좌우하는 모든 정책
Rodrik (2004)	특정 활동을 자극하고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산업을 포함
Aiginger & Sieber (2005)	유럽 경제 전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제조업에 대표적임
Pack & Saggi (2006)	경제 성장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하여 어떤 유형의 선택적인 개입이나 정부의 정책

자료: Warwick(2013), pp. 14-15를 참고하여 재작성

17) 산업연구원(2019), p. 156.

18) Warwick(2013), p. 14.

19) Warwick(2013), p. 15.

이와 같은 산업정책에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은 수평적 정책과 수직적(또는 선택적) 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수평적 정책은 인적자원 개발, R&D 투자, 경쟁력 영향 분석, 정부 조달 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을 의미하며, 수직적 정책은 특정 산업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²⁰⁾ 즉, 수평적 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범위가 다수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고, 수직적 정책은 특정 분야로 대체로 단일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평적 정책과 수직적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여러 부문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수평적 정책도 특정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수직적 정책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 2-2〉 산업정책 유형 사례

구분	수평적 산업정책	수직적(선택적)산업 정책
제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및 독점금지 • 간접세 • 제품시장 규제 • 환율 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대표기업 육성 • 국유화/민영화 • 산출 보조금/주정부 보조금 • 수출 촉진 • 가격 규제 • 무역 정책

20) Pelkmans(2006), p. 4.

구분	수평적 산업정책	수직적(선택적)산업 정책
노동/기술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교육 정책 • 훈련 보조금 • 임금 보조금 • 소득세 및 고용세 • 경영 자문 서비스 • 노동시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적 기술 정책 • 수습직 정책 • 부문별 자문 서비스
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보증 • 법인세/자본금 • 거시경제 안정화 • 금융시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투자 기금 • 긴급 대출 • 국가차원 투자은행 • 내부 투자 촉진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계획 규제 • 토지 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구 • 클러스터 정책 • 인프라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세금 감면 • 과학예산 • 지적재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술 • 선도시장 •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 특허출원 • 전문기술 센터
시스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 정신 함양 • 시나리오 계획 • 정보 배포 • 전반적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 계획 • 예측적 이니셔티브 • 부문별 경쟁력 전략 • 클러스터 정책

자료: Warwick(2013), p. 27을 참고하여 재작성

2. 산업정책 주요 선행연구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성장단계별 또는 기업의 유형별 지원정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 European Commission, OECD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정책의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재개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²¹⁾ 2011년 3월

에는 “Fostering New Sources of Growth: Is there a role for Industr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21세기에도 산업정책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OECD 산업혁신위원회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특징 및 경험, 집행과정 등이 소개되었다.²²⁾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심들을 배경으로 산업정책의 정책수단과 접근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OECD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R&D 지원, 공공조달, 자본시장 개입, 클러스터 및 지역 단위 정책, 국가 산업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²³⁾ Aiginger(2014)²⁴⁾의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역에서 경쟁력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가 산업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 교육 및 연구개발, 대중 인식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경종수·이보형(2010)²⁵⁾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별, 기술별, 지역별, 기업성장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업성장단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이를 제품개발단계, 초기 생산·마케팅 단계, 안정적 시장확보단계,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 개발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도출하였다. 김용재·염수현(2014)²⁶⁾의 연구에서도 벤처

21) Aiginger(2014), p. 2.

22) 김기준(2011), p. 2.

23) 류광훈·김희수(2018), p. 16.

24) Aiginger(2014), pp. 1~33.

25) 경종수·이보형(2010), pp. 57~79.

26) 김용재·염수현(2014), pp. 1~16.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별하여 지원정책을 투자, 네트워킹, 멘토링·컨설팅, 시설지원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기존 지원체계가 자본 및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어 멘토링,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박상원(2012)²⁷⁾의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구성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정보화, 창업,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특히 지원의 겹침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상욱(2011)²⁸⁾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을 비판하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모색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금융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는 대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해 정부주도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지원이 없다면 민간 분야의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김상욱(2011)²⁹⁾은 직접적 지원 방식을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세금감면, 프로젝트 금융지원, 저작권 담보에 의한 융자 및 투자, 보험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7) 박상원(2012), pp. 1~187.

28) 김상욱(2011), pp. 23~42.

29) 김상욱(2011), pp. 36~37.

서비스산업의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다룬 김경아(2014)³⁰⁾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특허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정책이 있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조세감면제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정책이 있으며, 직접 지원으로는 정부의 R&D 사업 참여, 정부기술 지원 및 지도 등이 있다. 또한 간접지원으로 기술정보제공,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지원,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마케팅 지원이 있다.

또한 변대호(2018)³¹⁾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서비스 경제화를 위한 각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기존 국내 서비스산업 정책은 서비스와 제조업 간 세제 및 공공조달, 벤처인증, 산업 간 융복합 촉진, 서비스 R&D 기반구축, 인력양성, 해외진출 개척 등의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 간 규제완화, 수출주도형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하여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는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산업적 특성에 맞춘 법제도적 지원 등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의 중복 현상이나 직접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

30) 김경아(2014), pp. 215~238.

31) 변대호(2018), pp. 73~81.

등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 정부 전략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국내 유관 정책사례 분석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동향

1) 추진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성장·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을 법률적 기반에 의거하여 담당 및 추진하고 있다.

〈표 2-3〉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9. 5. 8)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7개(금융·창업·기술·인력·수출·내수·기타)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활동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융 분야, 창업 확대와 재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두는 창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개발 및 보호 등에 중점을 둔 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인력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인력 분야가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 분야,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판로를 지원하는 내수 분야가 있으며, 이 외에도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분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류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다.³²⁾

〈표 2-4〉 중소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금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매출채권보험, 재도약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성공불용자(생활혁신형 창업사업 연계), 재도전특별자

32) 류광훈·김희수(2018), pp. 26-27.

구분	주요사업
	금,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협약보증, 플러스 모바일 보증, 장기분할상환해지 협약보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대한민국 창업리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청소년비즈쿨,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K-스타트업,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재도전성공패키지,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육성,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메이커문화 확산, 아이디어 온라인 멘토링,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애인창업육성,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예비창업패키지, 포스트 팁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창업에듀, 실전창업교육,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상권정보시스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기술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역량제고, 뿌리기업 지원사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_기술보호 상담·자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_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_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역량강화_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역량강화_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지원,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지원, 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장애인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바우처, 소공인제품·기술 가치향상, 뿌리기업지원사업_뿌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1), 뿌리기업지원사업_뿌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2), 뿌리기업지원사업_뿌리기업자동화·첨단화지원, 재도전기술개발사업_사업전환R&D
인력	전국여성CEO경영연수, 여성경제인DESK운영,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여성최고경영자과정, 여성기업지원 전문인력매칭 플랫폼

구분	주요사업
수출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One-stop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전자상거래수출 시장 진출지원,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내수	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TV홈쇼핑판매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나들가게육성,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소공인제품판매촉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중기간 경쟁제품·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조합추천 소액 수익계약, 공공구매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마케팅역량강화, 정책매장운영, 온라인시장진출, 오프라인기획전, 중소기업공동A/S지원, 중소기업소재 자재 납품기업지원, 공영홈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 지역특화산업육성,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혁신제품 유통플랫폼(아임스타즈)운영, 마케팅대전,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공동기반시설구축·운영,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백년가게육성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영바우처지원, 희망사업프로젝트(특성화시장), 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지원 및 운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타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이노비즈 확인제도, 메인비즈 확인제도,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중소기업움부즈만 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소상공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거래공정화,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개방형플랫폼 구축·운영, 벤처기업확인제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중소기업희생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경영교육, 역량Jump-up프로그램,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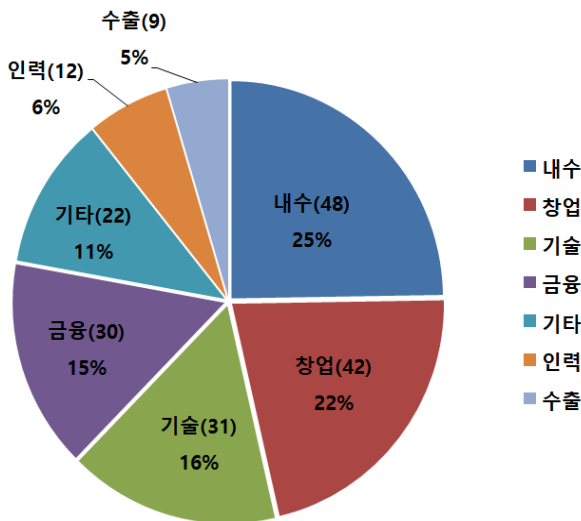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검색일: 2019. 5. 8)

현재 금융·창업·기술·인력·수출·내수·기타의 정책 분야에 따라 총 194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³³⁾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수분야와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각각 48개(25%), 42개(22%)로 가장 많은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으로 기술분

33)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 5. 8)

야 31개(16%), 금융분야 30개(15%), 기타분야 22개(11%), 인력분야 12개(6%), 수출분야 9개(5%)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정책 사업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검색일: 2019. 5. 8)

2)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³⁴⁾

(1) 금융분야

30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분야 지원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자금 및 대출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34) 분야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고.

이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금융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창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창업분야 지원정책은 42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인력양성’ 분야의 지원사업과 창업·기업을 유도 및 발굴하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기업의 지속성과 가능성에 대해 지원하는 ‘성장 및 활성화’ 분야의 사업이 있다. 또한 ‘재창업’ 분야의 지원사업들은 사업체 전환 및 폐업위기의 기업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3) 기술분야

기술분야에서는 31개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인데,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같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R&D 및 협력연계 지원’과 같이 산학연 또는 다양한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사업,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하는 ‘뿌리기술’ 분야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및 신기술 지원’과 같이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및 혁신형 신기술에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4) 인력분야

인력분야에서는 상담·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제 및 주택공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지원’ 사업,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업의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유입 촉진’ 관련 사업 등 총 12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5) 수출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수출 지원 정책은 총 9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및 제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진출 사전지원’ 사업과 이를 발판으로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등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이 시행 중이다.

(6) 내수분야

내수분야 지원 정책으로는 국내 중소기업 시장의 수요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입찰·계약 지원’, ‘기반 및 인프라’ 등과 관련된 총 4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7) 기타분야

이 외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제고, 역량강화를 위해 ‘상담지원’과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상담지원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법률적 자문과 전문가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립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확인증 발급제도 및

선정제도나 기업 간 공유 플랫폼 등을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련하였다.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지원정책 동향

1) 추진 개요

국내 관광분야의 산업정책 및 지원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관광사업³⁵⁾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하여 관광산업 지원정책에 필요한 개발·홍보·지원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표 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관광산업 지원정책 관련 조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9. 5. 8)

35)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관광숙박업 등과 같이 관광객을 위해 운송·숙박·오락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2) 주요 지원 사업

(1) 자금지원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조성·운용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관광분야의 산업정책 및 지원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세목 중 기금 운영비 및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사업비 항목을 통해 관광사업체 운영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항목으로 총 9,67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융자사업비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융자지원 사업이 4,920억 원이고 경상사업비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기반확충 사업이 1,310억 원, 관광산업육성 사업 1,160억 원, 외래관광객유치 사업 2,2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50억 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 9,967억 원 중 융자사업비 4,950억 원, 경상사업비 5,017억 원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운용할 계획이다.

〈표 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사업비	1,111,288	1,075,236	1,121,365	966,999	996,697
융자사업비(%)	613,193 (55.2)	620,000 (57.7)	610,000 (54.4)	492,044 (50.1)	495,000 (49.7)
관광산업융자지원	613,193	620,000	610,000	492,044	495,000
경상사업비(%)	498,095 (44.8)	455,236 (42.3)	511,365 (45.6)	474,954 (49.1)	501,697 (50.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계획
관광진흥기반확충	99,862	116,997	170,184	131,213	33,991
관광산업육성	98,099	93,997	129,493	115,953	261,804
외래관광객유치	300,134	244,242	211,688	227,788	205,902
기금운영비	454	441	634	516	625
정부내부지출	2,019	57,853	63,472	65,804	66,262
여유자금운용	307,791	372,397	402,982	60,957	173,427
합계	1,421,552	1,505,927	1,588,453	1,094,276	1,030,4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pp. 50~51; 문화체육관광부(2018d), pp. 247~319; 기획재정부(2019), p. 43을 참조하여 연구자 재작성

특히 기금 사업비의 절반(2018년 기준, 50.9%)을 차지하는 용자사업비는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용자지원을 해주는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용자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 용자규모는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약 2,750억 원이 운용될 예정이다. 2017년 관광기금 용자 지침과 관광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만큼³⁶⁾ 신설된 관광사업체인 ‘관광지원서비스’를 용자 대상에 포함하여 관광시설 용자지원을 확대·추진한다. 또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³⁷⁾으로 구분하여 관광사업체 운영 및 확충(공사·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한해 용자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운영자금 524개소, 시설자금 228개소 등 총 752개소 사업체를 지원했다.

36) 류광훈·김희수(2018), p. 54.

37) ‘운영자금’은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관광사업체의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건물·구축물·기계장비 및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2018e), pp. 1~3.

〈표 2-7〉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융자지원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523	724	288	524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257	280	280	228
계		780	1,004	568	7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c), p. 348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융자사업비를 통한 융자지원 외에도 경상사업비를 활용해 관광진흥기반확충 사업, 관광산업육성 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민공동체 주도 관광두레를 조성하거나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산업기반 확충 지원 등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관광기업 지원 투자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 창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형 관광사업 발굴과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공모전을 통해 IT 자체가 수익모델인 IT기반형의 기업뿐만 아니라 시설 또는 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기반형,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나 체험 중심의 체험창조형 기업 등 창의적인 관광사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이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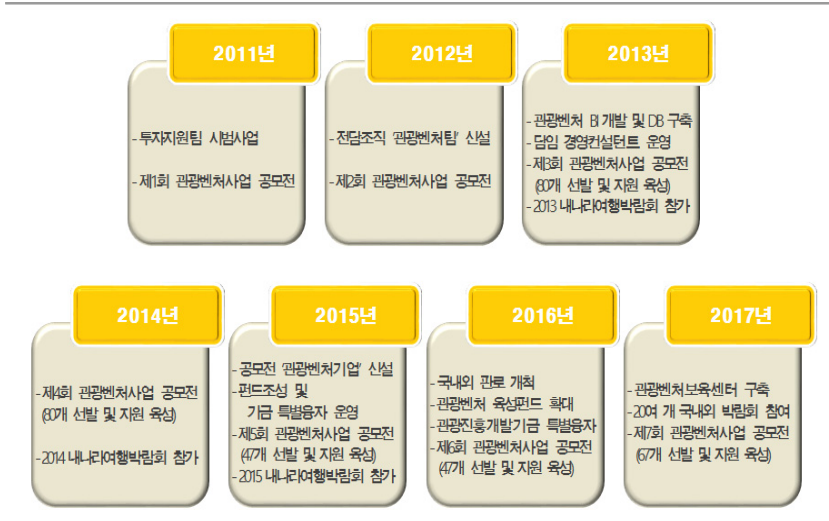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초창기(2011년)에 제 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

1·2차 공모전 수상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공모전에서 상금의 90%를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의지가 있는 80개 예비 업체를 선발해 지원하고 벤처기업 전담 경영 컨설턴트를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협약사업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단계별 가속화 지원을 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예비 관광벤처기업 외에 앞서 개최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벤처기업들을 관광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공모전 선발에도 관광벤처기업 부문을 신설하는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³⁸⁾하기 위해 대상을 세분화 및 확대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관광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7년에는 20여 개의 국내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추진하였다.

38) 최근에도 '3~7년차' 창업기업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있다.

① (예비~3년) 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② (3~7년)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 지원, ③ (재창업~7년) 사업전환 자금,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지원.

〈그림 2-2〉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동향



자료: 관광벤처사업 홈페이지(검색일: 2019. 5. 8); 류광훈·김희수(2018), pp. 24~5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아이템 개발비, 인프라 지원비 등의 항목에 대해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5%)하고 있으며 답십컨설팅, 전문컨설팅 등의 전담 컨설팅 지원,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공간 지원, 내·내·여행박람회 등 박람회 참여 기회 지원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관광사업체뿐만 아니라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표 2-8〉 관광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사업자당 2,250만 원~4,000만 원 (자부담 25%) • 지원항목: 아이템 개발비, 아이템 고도화비, 인프라 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구분	지원 내용	
컨설팅 지원 (컨설팅 랩어카운트)	효과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컨설팅(사업실행계획 작성, 수익모델 발굴 등 초기단계 종합컨설팅), 전문컨설팅(IT 분야 등과 같은 전문컨설팅), 관광멘토제도, KTO-커넥트 프로그램, 가속화지원 프로그램 등
네트워크 공간 지원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한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모·선발을 통해 맞춤형 장소(사무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예비)관광벤처기업 • 지원공간: 관광벤처보육센터 내 스마트워크 공간, 독립공간, 공용공간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최대 2년 6개월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홍보(광고, 기획기사 등) 및 국내 관광활성화 캠페인에 관광벤처기업 홍보 • 내나라여행박람회, 한중우호교류행사 등 국내외 관광전시박람회 참여기회 제공
교육 지원 (관광벤처 아카데미)	전문 창업 지식 및 기술 등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교육, 관광상품 및 서비스개발 실무, 관광마케팅, 창업지원 유사제도, 투자유치 및 융자신청 방법, 해외관광마케팅 등

자료: 관광벤처사업 홈페이지(검색일: 2019. 5. 8); 류광훈·김희수(2018), pp. 24~57를 참고하여 정리

시범사업을 포함해 2011년부터 9년째 진행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은 2011년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는데, 이후 예비관광벤처기업(421개)과 관광벤처기업(98개), 상생협력기업(29개) 등 현재까지 총 548개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했다.³⁹⁾ 2019년에는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5개에 관광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계획이다.

39)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업체 수는 <표 2-9>를 참고하여 작성한 2018년 기준의 누계치임.

〈표 2-9〉 연도별 관광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현황

단위: 억 원,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3,500 (만 원)	43	40	38	24	22	22	20.9
지원기업 수			10	80	80	80	73	67	72	86
관광 벤처 기업*	예비관광벤처		10	80	80	80	44	45	38	44
	관광 벤처	신규	-	-	-	-	3	2	6	15
		승급	-	-	-	-	26	20	13	13
	소계			10	80	80	80	73	67	57
상생협력기업**			-	-	-	-	-	-	15	14
소계			-	-	-	-	-	-	15	14

주: *관광벤처기업을 예비관광벤처기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관광벤처기업&3년 이내의 관광사업체)과 관광벤처기업(기존 예비관광벤처기업 중 공모전을 통해 신규 및 승급으로 선발된 기업)으로 분류하여 모집·지원

**상생협력기업은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공동 발굴한 해양관광벤처기업 및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희망하는 관광기업 중 유관조직 추천 등으로 추가 선발한 기업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내일신문(2019. 2. 21) (모든 자료 검색일: 2019. 5. 8)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제3절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책사례 분석

1.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지원정책 동향

1) 추진 경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정책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지만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중장기 정책 추진 방

향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해양레저관광 분야 계획을 구체화하는 정책계획이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10)’의 21개 정책과제 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들 수 있다.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전국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해양과학관 건립,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진흥, 크루즈관광 및 해상호텔 산업 육성,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 2010 세계 박람회(해양엑스포) 개최 등 6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 해양수산벤처산업의 육성,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등의 추진과제에도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2004~2010)’에서는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해양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해양자원 개발, 해양문화·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확충, 해양문화·관광 발전여건 조성 등 4개 정책과제를 배치했다. 한편 이들 과제 외에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육성에도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 및 정비,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1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00~2010)	해양수산 벤처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실용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수산 벤처기술 개발 지원, 해양수산기술센터 설치·운영 • 해양수산 벤처창업보육센터 육성: 창업 활성화, 창업비용 절감, 정보교환, 경영·관리지도, 자문 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육성
	해양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 개발잠재력이 높은 해안도시를 선정하여 해양관광시설 집중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진흥: 마리나 시설 확충 및 레포츠 기반 조성,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 해양레포츠 연수시설 건립 • 크루즈관광 및 해상호텔산업 육성: 크루즈 항로 개발, 전용 크루즈항만 건설 •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 해중공원 조성, 해상낚시터 개발
수정계획* (2004~2010)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정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 및 어촌 관광 정보화 지원을 통해 관광 정보 제공
	해양레저·스포 츠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레포츠 연구시설 건립,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해양관광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맞춤형 해양관광정보 제공 • 법·제도 정비: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담부서 설치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2011~2020)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공간 조성, 장비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세제 개선, 사업체 육성 및 관련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마련 • 크루즈관광 육성방안 마련: 전문인력 양성 • 해수욕장·바다낚시 활동 고품격화: 낚시 공간 조성, 다양한 선박을 활용한 바다낚시 방안 마련
	해양관광자원 의 보전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기반 구축: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기반 구축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의 구축: 주요 거점별 국가마리나 확충,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서비스산업 유치 추진, 해중공원사업 추진

구분	주요 내용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항만 건설을 통한 크루즈 인프라 구축: 크루즈 전용 부두, 터미널, 부대시설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마련: 마리나시설 배후에 해양레저장비의 개발·보관·수리·교육 등을 수행하는 복합레저산업단지 조성 • 해양문화관광도시의 조성: 해안별, 거점별 해양 종합 레저센터 건립 추진
	해양관광 자원 활용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해양관광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 •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 해양관광의 복합 산업화: 우수 사례 발굴 및 지원, 해양레저관광 관련 첨단장비 산업 육성 지원

주: *수정계획은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중 추가된 사항만 정리

자료: 해양수산부(2000); 해양수산부(2004); 해양수산부(2010)를 참고하여 정리

해양관광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03~2013)’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관광사업 지원, 레저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수중레저스포츠 활성화, 레저낚시 활성화, 해양관광 관련 법제 개선, 해양관광 관련 기능 강화, 해양관광 정보시스템 등 7개 단위사업을 설정했다. 이어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표 2-11〉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제1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해상교통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관광사업 지원: 크루즈 항로개발, 크루즈 전용부두 확보,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마리나 확충, 보급형 레저선박 개발 및 건조지원 • 수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중경관지구 지정·육성, 해양스포츠 제전 활성화 • 레저낚시 활성화: 낚시어선 건조지원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관련 법제개선: 해양관광 관련 법 제정, 기존 법령 정비 • 해양관광 정보시스템: 해양관광 자원 DB 구축, 관련 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법 제정, 해중 전망탑 조성, 해중레저 공간 조성, 다이빙 센터 건립 추진
	마리나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마리나서비스업 법적 근거 마련, 창업지원 가이드북 제작,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레저선박 제조업체 수출보증제도 도입, 국제 보트쇼 참가 지원 •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 강화: 마리나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마리나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거점 마리나 개발, 마리나 편의시설 분양 및 회원제 도입, 주요 해양관광지 및 어항 내 소규모 계류시설 설치
	동북아 크루즈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 관광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기항 매력도 제고: 크루즈 터미널 인근 복합관광단지 조성, 선용품·선박수리 등 관련 산업 육성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국민 크루즈 여행 대중화

구분	지원 내용	
	관련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정비 및 규제완화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 마련
	해양관광 정보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 통합 DB 구축 및 개발 기반 마련 • 해양관광포털 구축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해양수산부(2013)를 참고하여 정리

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1·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흐름을 살펴본다.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항은 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모두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은 1차에 비해 2차 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마리나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2차 계획에 이르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정보기반 구축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2) 주요 지원 사업⁴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 공간 확충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법·제도 정비, 인력 양성, 규제 완화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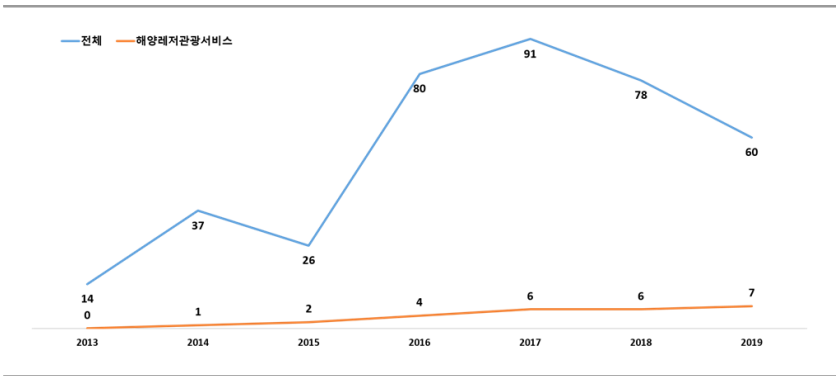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정책 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에 게시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은 총 386건이었다.⁴¹⁾ 시기별로는 2017년에 91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40) 분야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고.

가장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80건, 2018년 78건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지원 사업 중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의 비율이 33.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비율이 32.4%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원 사업으로는 금융 지원 8.8%, 경영 지원 7.5%, 내수 지원 6.7%, 창업 지원 6.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지원 사업 중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은 2013년 0건에서 2019년 5월 기준 7건으로 사업 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 연도별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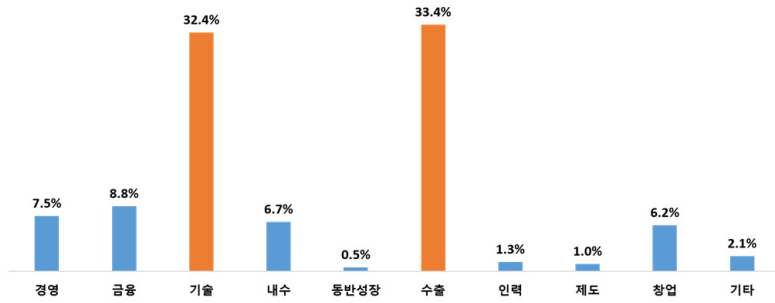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9. 5. 8)

4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조회 후 재공고 제외한 결과(검색일: 2019.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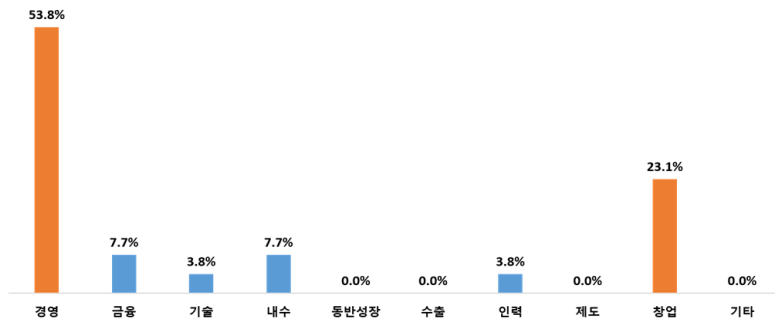
〈그림 2-4〉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전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9. 5. 8)

같은 기간(2013년~2019년 5월) 동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은 해양수산부 전체 지원 사업 중 6.7%인 26건이 추진되었다. 분야별로는 경영 지원이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해양수산부 전체 지원 사업 중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창업 지원이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 지원과 내수 지원이 각각 7.7%로 집계되었다.

〈그림 2-5〉 해양수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야(해양레저관광 분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9. 5. 8)

(1) 경영분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지원 사업에서 경영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지원 사업은 유망 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맞춤형 컨설팅은 각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 및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금융분야

금융분야 지원 사업은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중 7.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수산부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기업투자자료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해양 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사업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3) 창업분야

창업분야는 경영분야 다음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양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컨설팅·멘토링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시 사업화 자금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5년 농수산물식품 분야에 한정해 개최되었던 창업 콘테스트는 2018년 해양 및 수산 분야로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하여 매년 10개 수상작을 선정해 총

3,100만 원의 시상금을 제공하는 등 대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양레저관광 분야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2〉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작 현황

구분	내용
2015년 (2건)	제주툰청(입선), 민물고기 곰탕(입선)
2016년 (2건)	김부각(입선), 큐브형 천연조미료(입선)
2017년 (2건)	배스(유해어종) 업사이클 반려동물 영양보충제(우수상), 명태치킨(입선)
2018년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저요오드 해조류 가공식품(대상), 해파리 원료 대체 플라스틱, 관상어용 컨테이너 스마트 양식장(최우수상), 천연물질 유래 어병 예방제, 해양 적조 방제 스마트 로봇(우수상) 사업화: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대상), 굴껍질을 이용한 수소흡장 항산화 바이오 원료물, 성게 산업화(최우수상), 수산질병 해결의 새로운 솔루션, 스노클 이용한 수중 유압브레이커(우수상)

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였으나, 2018년 수산 창업 콘테스트, 2019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로 사업명을 변경함

자료: 201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검색일: 2019. 7. 22)

(4) 기술분야

기술분야 지원 사업은 3.8%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해양레저관광 분야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는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실용성이 높은 기술분야, 이미 개발된 기술 중 실용화, 제품화, 사업화가 용이한 기술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5) 기타분야

경영, 금융, 창업, 기술분야 외에도 해양레저관광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력 및 내수분야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마리나서비스업이나 수중레저업 등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 기초정보 파악을 위해 해양관광 관련 DB와 통계기반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ICT를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포털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 다부처 연계 지원정책 동향

1) 추진 경과

정부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이라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을 위한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7년 12월에 개최되었는데, 본 회의를 통해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비전으로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특히 8개 핵심과제 중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을 통해 해양관광을 비롯한 전체 관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14개 부처가 참

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외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해양레저관광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해양레저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해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하드·소프트웨어 구비,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신설하고 신규 마리나 창업자의 의무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중레저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자원 개발 및 시설 정비, 콘텐츠 개발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대 국가전략관광회의(2019. 4)에서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해 방한 및 국내관광 수요 확대,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5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관광스타트업 발굴,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금융지원 확대, 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관광기업지원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3〉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국가관광전략 회의 (2017. 12. 18)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 크루즈 중국인 개별관광객 무사증 관광상륙허가 허용
	방한시장 고부가가치· 고품격화	•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콘텐츠 개발: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육성, 지역 특화 해양 웰니스관광 산업 육성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관광 고부가화 및 국적크루즈 취항기반 조성: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국내 모항 출항 크루즈 유치, 크루즈 부두 및 여객터미널 인프라 확충 • 마리나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의무보험료 인하 등 규제완화, 비즈센터 타당성 조사, 국내 마리나 맞춤형 코스 조성, 국제 마리나 코스 조성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업 발굴·지원: 기업 발굴·역량 강화,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 등 관광산업 진흥 법적 근거 마련 • 일자리·기업지원 허브 조성 •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강화: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강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 정보 제공 등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관광위성계정 작성 및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 관광플랫폼 활성화: 관광플랫폼 기업과 관광콘텐츠 기업 간 협업 지원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 융자대상 다양화, 소액지원 활성화 • 지역상생 관광활성화 규제 발굴·개선 추진
제2차 국가관광전략 회의 (2018. 7. 11)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수리·정비업 신설,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의무보험료 인하 등 창업기반 조성,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국제보트쇼 참가 지원, 규제 합리화,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지원 등 • 해양치유산업 육성: 해양치유 R&D를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레저관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해양관광벤처공모전 선정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전문가 지정·관리, 우수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조성: 안전점검 및 운항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보험요율 차등화
	추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계 구축: 산업규모, 이용통계, 자원조사 등 연도별 통계조사 추진

구분	주요 내용	
확대 국가관광전략 회의 (2019. 4. 2)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 7대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해양치유 산업화 지원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한 크루즈 유치 확대, 체험상품 개발, 국내 모항 운항 확대 등 크루즈 수요 창출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스타트업 발굴: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창업·경영 전문가 양성, 전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에 관광분야 포함 •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 전략업종 지정·집중 관리, 기업 간 융복합 사업소재 등을 개발하는 관광 프로젝트 지원, 혁신바우처 지원 •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 지원, 프로젝트 단위 융자 신설, 소규모 관광업체 융자조건 개선,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 크라우드펀딩 지원 확대 등 • 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관광 기술벤처 선별·지원 •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취업단계별 관광인력 양성 • 관광기업지원기반 조성: 관광기업 지원센터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지원범위 확대: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 규정, 산업 중심 진흥체계로 전환 • 업종 신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규 여행업, 국제회의 일반시설업 등 신설 • 기업·지자체 애로 해소: 여행업 창업 시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 관광산업 통계 정비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7. 12. 1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8. 7. 1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9. 4. 2)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관광 부문 진흥에 방점을 두고 유관 정부 부처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한 국가관광전략회의 외에 2019년 5월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은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을 비전으로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육성, 교

육·체험 확대를 통한 친수문화 정착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표 2-14〉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6차 경제활력대책 회의 (2019. 5. 14)	우수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콘텐츠 상품화, 해양관광벤처기업 지원, 예비창업자 등 자금지원과 교육·컨설팅 제공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 해양치유벤처 지원 및 펀드 조성, 인바운드 관광시장 개척 지원, 사회보장보험 체계 편입 등 •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조성, 마리나 정비업 신설, 대형요트 건조기술 확보,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연장, 레저선박 지방세 감면 등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및 기존 인프라 보강, 관광상륙허가제(비자면제) 운영 연장 및 제도화 협의, 보안검색 절차 완화,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및 해양진흥공사 저리자금 지원 등 국제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선용품 업체 간 비즈니스 미팅 추진 •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지원: 해중경관 우수지역 선정, 수중레저 시설 조성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5. 14)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2) 주요 지원 사업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일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사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은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와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언급되어 정책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와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중 본 연구의 대상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분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사업자 중 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크루즈선사 출범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해양치유벤처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의 사업이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2) 창업분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관련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창업 지원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등 기관 설립, 마리나 수리·정비업 등 신규 업종 신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마리나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한 의무보험료 인하, 해양관광벤처기업 지원, 해양관광벤처공모전 선정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전문가 지정·관리,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거나 레저선박 지방세 감면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

센터브 제공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3) 기술분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는 해양 치유 R&D를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대형요트 건조기술 확보 등 신규 해양레저관광 분야 육성을 위한 기초 연구와 레저선박을 비롯한 해양레저장비 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4) 기타분야

금융, 창업, 기술분야 외에 마리나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분야 지원 사업과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보트쇼 참가 지원, 크루즈 선용품 업체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해양레저관광 관련 안전점검 및 운항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ICT 도입을 통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규제 합리화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산업통계 구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크루즈 부두·터미널, 마리나, 수중레저 경관지구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4절 해외 관련 정책사례 분석⁴²⁾

1. 관광산업 육성 정책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크게 금융분야, 기술분야, 인력분야, 제도개선 분야, 통계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별 구체적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분야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환경의 복잡성이라는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여타 산업군과 다른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관광사업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등 거시적 경제 환경, 국제적 사건, 소비자 환경, 글로벌 경쟁 환경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의 성과 및 관광서비스 수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경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시드머니 및 소액대출 승인 등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관광 사업체에 시설 투자 자금과 운전 자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광 기업체에 대해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첫째, 관광 사업체에 낮은 금리

42) 본 절은 류광훈·김희수(2018), pp. 57~65; OECD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로 대출을 제공하고 보증서를 발행하는 정책, 다음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 및 용자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관광 분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표 2-15〉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

국가	내용
캐나다	• 관광 분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중소기업을 정부 기관으로 전환하여 외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출 보증을 제공
슬로베니아	• 국가 관광청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용자 프로그램인 '슬로베니아 경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마케팅 및 판촉활동 지원
그리스	• 투자 및 운전 자금과 대출 보증을 위한 저비용 대출 제공 • 그리스 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관광 업체에 최대 3만 유로까지 저금리 대출 제공
이탈리아	• 1,270만 유로의 자금을 네트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
뉴질랜드	• 지역관광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던 지역중소관광시설기금(Mid-sized Tourism Facilities Grant Fund)을 확대해 관광 인프라 펀드(Tourism Infrastructure Fund)를 조성하고 고품질 방문자 경험을 제공
호주	• 관광 분야 투자 시 다수 기관에서 여러 건의 승인을 취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관광투자 프로젝트의 승인을 지원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pp. 57~5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각국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본 구조를 강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자산 기반 금융, 크라우드 펀딩, 하이브리드 금융 등의 비은행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

〈표 2-16〉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옵션 개발 현황

국가	내용
뉴질랜드	• 뉴질랜드 증권법 개혁을 통해 P2P(peer-to-peer) 대출, 자본 시장에 대한 자본금 도입이 시행되면서 관광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성공
오스트리아	• 「Alternative Financing Act」 마련으로 대안적 형태의 자금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관광업계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we4tourism' 설립
기타	• Travelstarter는 관광 부문 중소기업의 시드머니 조달을 위한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활용)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pp. 57~5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2) 기술분야

ICT의 발전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광 부문의 디지털화는 데이터의 개방, 스마트 관광 및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등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 2-17〉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분야 지원

국가	내용
프랑스	• 개방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Data tourisme project 추진, France Tourisme Lab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멕시코	• 관광 부문에 신기술 도입을 통해 방문객 증감 및 이동 경로, 서비스 제 공업체와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 추진
스페인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의 디지털화인 'Smart Destination' 프로젝트 추진
스위스	• 2017년부터 관광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절차 및 모델의 디지털 전환 촉진 • 2019년까지 스위스 관광청이 운영 중인 웹 플랫폼(MySwitzerland)을 보완해 관광객 요구를 충족할 계획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p. 6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대표적으로 스마트 관광을 위해 관광정보 통합 포털을 구축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문객의 흐름을 파악하여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성별·연령대 등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해 관광지를 추천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인력분야

고용, 교육 및 훈련 등 관광 전문가 양성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관광 분야 일자리의 매력을 높이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과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양질의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제공, 둘째,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셋째, 국가 표준 및 전문자격 제도 개발, 넷째, 관광산업 숙련 전문인력 수요 조사사업 등이다.

〈표 2-18〉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분야 지원

국가	내용
그리스	•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비자격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광 가이드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 일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오스트리아	• 교육부가 주도하여 협력 업체 및 학교에 대한 직업 안내, 인턴십(연수생 및 강사, 기업) 지원, 연수생 대상 대회 개최, 직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벨기에	• 민간, 공공, 관광 이해관계자 및 플랑드르 교육부와 협의의 통해 전문 자격 개발
터키	• 직업훈련을 위한 국가표준(33개)과 자격제도(24개) 개발
독일	• 인구통계적 변화로 인한 관광 산업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숙련 노동력 필요성에 대한 조사 지원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pp. 61~6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4) 제도개선 분야

각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운영 및 투자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잉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거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거나 규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19〉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지원

국가	내용
브라질	• 관광 관련 법률의 현대화를 위하여 118개 대안 검토
슬로바키아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연구를 수행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
그리스	• 국내외 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규제 저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이탈리아	• 2014년 관광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 세금 공제 제도(Art Bonus Decree)를 2020년까지 4억 6,000만 유로 규모로 재도입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pp. 62~6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5) 통계기반 구축

각국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상품 제공 및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위성계정 구축 등 통계시스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통계청의 관광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2017-18년부터 5년간 1,36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관광위성계정의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코는 인바운드 관광 관련 통계 데이터를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인바운드 관광 조사 및 분석이 포함된다.

6) 기타분야

금융, 기술, 인력, 제도개선, 통계기반 구축 외에도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도입, 숙박 공유 플랫폼의 제도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목적지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프랑스와 체코는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관광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인 'Qualit Tourisme Label'의 현대화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코 지역개발부(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는 EU의 Structural funds와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중소기업이 관광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관광산업과 ICT가 결합하면서 기존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숙박공유 플랫폼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관광 숙박시설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숙박 공유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공정한 경쟁, 경제 발전의 지속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Digital Republic(2016. 10. 7)'과 '주택 부족 지역의 가구 임대등록(2017. 4. 28)' 등 법률을 마련해 공유경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사회적 의무를 규정했다. 독일도 2018년

중 숙박 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유경제의 역할 연구 및 온라인 숙소 예약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민간 숙박업에 대한 법률 신설을 통해 개인 숙박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일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기술, 인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해양레저관광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통계기반 구축과 제도 개선에 대한 각 국가의 구체적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계기반 구축

일반 관광산업과 구분하여 해양레저관광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양레저관광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국가해양경제프로그램(NOEP: National Ocean Economics Program)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관광 및 여가(coastal tourism & recreation)’ 활동으로 분류하고, ‘오락 및 여가 서비스’, ‘보트 판매업’, ‘식음료업’, ‘호텔 및 숙박업’, ‘마리나’,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및 캠핑장’, ‘수상관광투어’, ‘스포츠 용품 소매업’,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을 하위 분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해양수산업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에 해당되며 ‘여가낚시(Recreational fishing)’, ‘크루즈 여행(Cruise ship travel)’, ‘해변관광 및 여가(Costal tourism and recreation)’ 등이 포함된다.

한편 뉴질랜드는 활동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활동적 측면에서 낚시, 해변 및 해양관광, 크루즈, 마리가 포함되며, 공간적 측면에서 레저보트 임대, 음식점, 숙박업,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보트 중개업, 해양장비 소매업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표 2-20〉 국가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범위

국가	항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및 여가서비스 • 보트판매업 • 식음료업 • 호텔 및 숙박업 • 마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리에이션 차량 주차 및 캠핑장 • 수상관광투어 • 스포츠용품 소매업 • 동물원 및 수족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낚시 • 크루즈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관광 및 여가활동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낚시 • 해변 및 해양관광 • 크루즈 • 레저보트 서비스 •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마리나 • 보트 중개업 • 해양장비 소매업

자료: NOEP(2016), p. 19; NAICS(검색일: 2019. 5. 8); Stats NZ(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정리

2) 제도개선 분야

각국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기존 규제 및 신규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거나 규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발견되면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고, 해양레저관광 부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Red Tape Challenge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제5절 종합분석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 관광산업 육성 관련 정책 사례와 해양레저관광 부문 산업 육성 사례, 국외 관광 및 해양레저관광 부문 산업 육성 사례에 대해 검토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지원정책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집행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육성·성장·보호 정책을 통해서도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은 크게 자금지원과 창업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지원정책에 필

요한 개발·홍보·지원사업 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관광사업체 운영에 관한 용자지원과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인 관광벤처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창업·기술·인력·수출·내수·기타 등 7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지원 및 창업지원 정책보다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 내용의 전문성도 높다. 비록 내수분야와 창업분야에 전체 지원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기술, 금융, 인력,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다. 지원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사업은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책 수혜자인 창업자 및 관광사업체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자금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로 관광객 이용시설의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용자 형태로 지원되어 담보제공이 용이한 숙박시설에 용자가 편중되고 있다. 또한 관광서비스 혁신 R&D 사업은 단위 사업당 지원 금액이 적어 원천기술 개발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까지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벤처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 초기단계 지원에

머물러 기업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1·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제1·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해양레저관광 부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계획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1차 계획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성격을 가진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타 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정책 중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 부문 정책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관광 부문 정책과 유사하게 경영, 금융, 창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 부문과 관련된 지원 사업 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7년 동안 총 386건으로 연평균 55건 수준이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19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반 관광 분야의 약 30% 규모이며, 특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지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원 사업 수는 더욱 적어져 같은 기간 동안 총 26건에 불과하고 연평균 3.7건 수준이다. 지원 사업 분야별로는 경영 지원이 전체 사업 중 53.8%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창업 지원이 23.1%를 차지해 이들 2개 분야가 76.9%로 사업 4개 중 3개가 경영 지원과 창업에 편중되어 지원 사업 분야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관광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해양레저관광 산

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일반 관광산업 지원 정책에 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이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부재해 해양수산부에서 운용 중인 기금과 타 부처 소관 기금 중 해양수산부에서 부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부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어려워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해외 각국의 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역시 국내 정책과 유사하게 금융, 창업, 기술, 인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호주와 같이 정부가 창업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창업 시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관광 부문에 특화된 크라우드 펀딩 등 전 세계적인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관광 및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은 관광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찍부터 해양레저관광 통계기반을 구축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3 장

해양레저서비스 산업 현황 분석

제1절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1. 분석의 개요

이번 장에서는 기존 해양레저관광의 이용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해양레저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은 기존 전국단위로 조사된 해양레저·관광 실태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분석에 활용한 2차 자료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1〉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

기준연도	출처	활용 항목
2010년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2011	•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
2015년	홍장원 외, 『해양레저관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해양레저관광 경험 유무 • 해양레저관광 목적 •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
20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레저 실태조사』, 한국어촌어항협회(발주처), 2016	• 해양레저관광 경험 유무 / 시기 • 해양레저관광 목적 • 해양레저관광 활동 만족도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 실태 자체조사(내부자료)』, 2017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이용실태조사』, 2018	• 해양레저관광 경험 유무 / 시기 • 해양레저관광 목적 •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 • 해양레저관광 활동 만족도 • 해양레저관광 활동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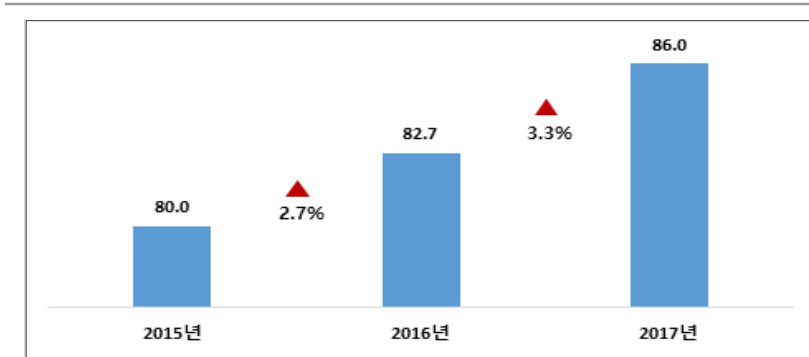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해안지역으로의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라 접근성 개선 및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양레저관광의 경험률을 계속해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 경험률을 분석해보면 2015년 80.0%에서 2016년 2.7%포인트가 증가한 82.7%, 2017년에는 86.0%로 나타나 연평균 약 3%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그림 3-1〉 해양레저관광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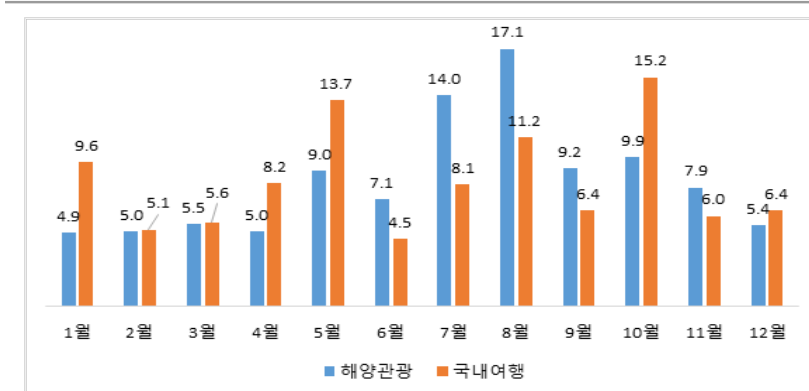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전망 분석 활용 자료(〈표 3-1〉)로 연구자 재구성

해양레저관광의 방문시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8월에 17.1%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월로 나타나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해양레저관광 방문시기

단위: %



주: 국내여행의 월별방문은 참가횟수로 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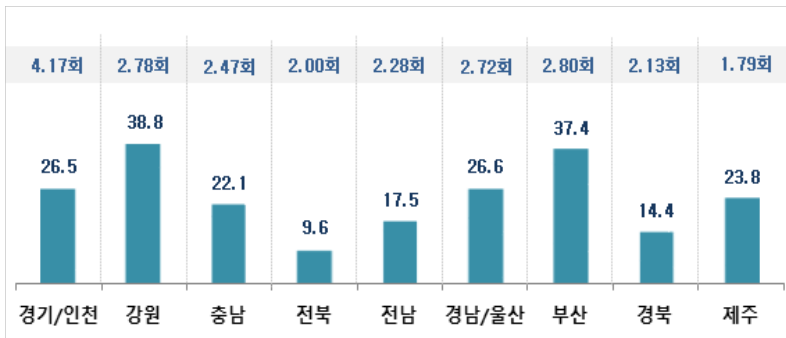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표 3-1〉); 문화체육관광부(2017), p. 56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7~8월 성수기 외에 10월 9.9%, 9월 9.2%, 5월 9.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동기간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10월(15.2%)과 5월(13.7%)에 가장 많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관광과 일반 국민여행과의 방문시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하계 휴가철 중심의 계절적 편중이 극심한 관광행동의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또한 매출의 불균형, 고용 불안 등이 나타난다.

해양레저관광 방문지역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강원지역이 38.8%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산지역이 37.4%, 경남/울산지역이 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 횟수를 비교해보면 경기/인천이 4.17회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2.80회로 나타나, 국내 해양레저관광은 동해안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해양레저관광 방문지역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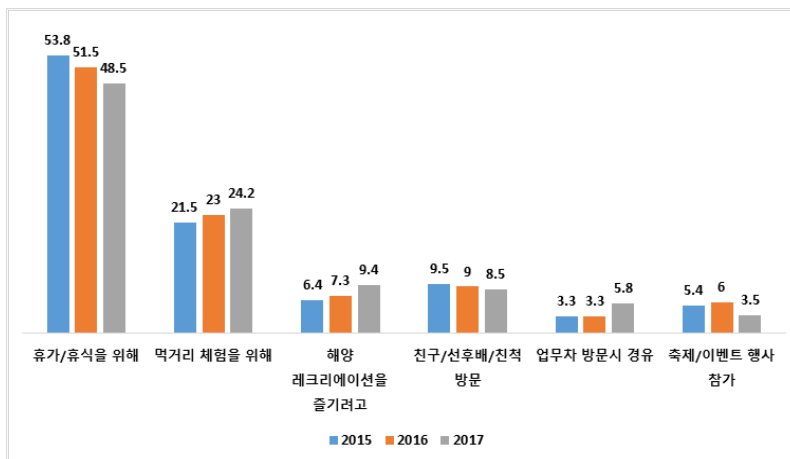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표 3-1〉)로 연구자 재구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양레저관광지 방문 목적을 분석한 결과 '휴가/휴식을 위해서'가 2017년 기준 4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먹거리 체험을 위해서'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목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휴가/휴식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거리 체험을 위해'와 '해양레크리에이션을 즐기려'는 목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4〉 해양레저관광지 방문 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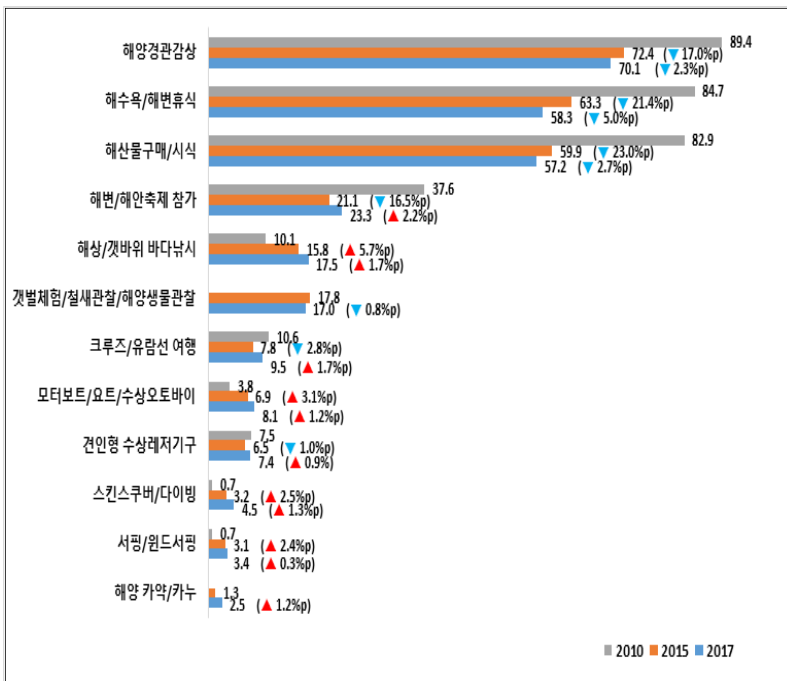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표 3-1〉)로 연구자 재구성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우선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양경관감상 활동이 70.1%로 나타나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해수욕/해변휴식이 58.3%, 해산물 구매/시식이 57.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변/해안축제 참가는 23.3%로 나타났으며, 바다낚시 활동과 갯벌체험/철새관찰/해양생물

관찰이 각각 17.5%, 17.0% 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견인형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다이빙, 서핑/윈드서핑 등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해양레크리에이션은 2~8%대의 응답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

단위: %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활용 자료(〈표 3-1〉)로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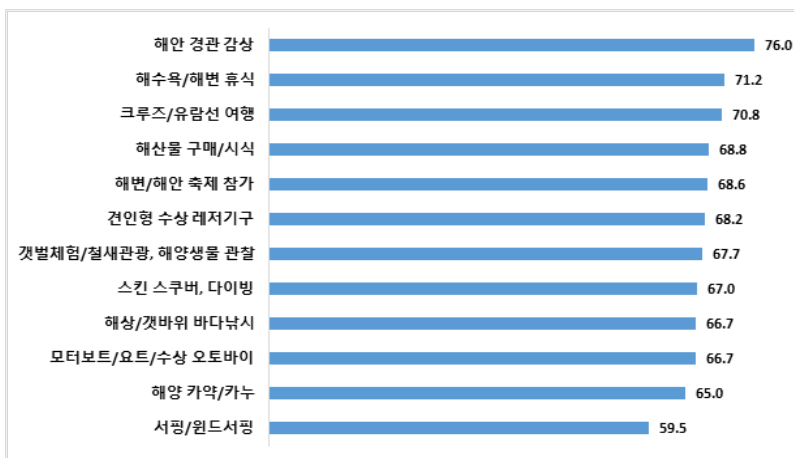
해양레저관광 활동 유형별 참여율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해양레저관광 활동인 해양경관감상, 해수욕 등의 활동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과 2015년

사이 이들 활동은 약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바다낚시,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에 대한 참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 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해안경관감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76.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수욕/해변휴식이 71.2점, 크루즈/유람선 여행이 70.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핑/윈드서핑에 대한 만족도가 59.5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 해양 카약/카누,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해상/갯바위 바다낚시 등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동적인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이 산업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3-6〉 해양레저관광 활동 만족도

단위: 100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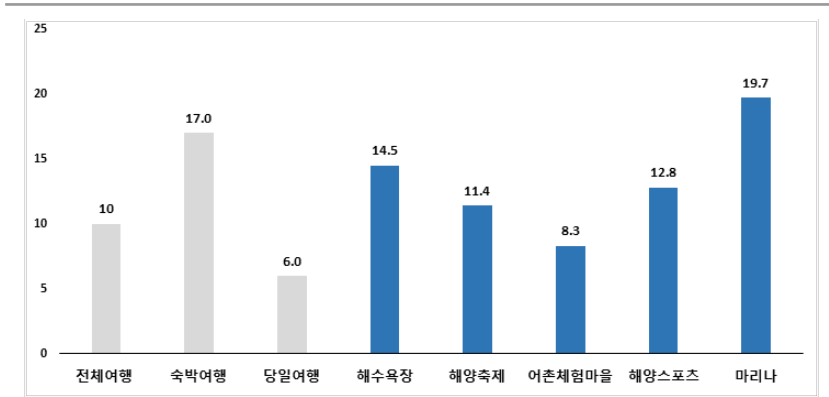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전망 분석 활용 자료(〈표 3-1〉)로 연구자 재구성

마지막으로 국내 1인당 해양레저관광 비용을 국내 일반여행 관광 비용과 비교·분석하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관광 비용은 숙박여행이 17만 원, 당일여행이 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평균 1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양레저관광의 평균 비용은 13.34만 원으로 일반 관광비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마리나 관련 활동이 19.7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활동이 14.5만 원, 해양스포츠 관련 활동이 12.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활동은 8.3만 원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 평균 비용뿐 아니라 국내 일반관광의 평균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7〉 국내 1인당 해양레저관광 비용(1회 기준)

단위: 만 원



자료: 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및 전망 분석 활용 자료(〈표 3-1〉)와 문화체육관광부(2017), p. 45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제2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절에서는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통계를 분석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8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 산업은 해양레저·관광업과 수산레저·관광업으로 구분되고, 해양레저·관광업은 레저시설업과 관광시설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 특수분류체계에 정의된 해양수산레저·관광업 사업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⁴³⁾

〈표 3-2〉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의 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의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해양수산레저관광업	해양레저시설업	마리나선박대여업/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요트장업	(91239)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139)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수중레저업	(91239)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139)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수상레저업	(91239)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해양관광시설업	유람선 운영업	(50121)내항 여객 운송업 (50201)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크루즈 운영업	연안크루즈업/국제 크루즈업

43) 다만 해양레저관광업의 일부 분류를 좀 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기존 분류에서 해양레저시설업의 기타 해양레저시설 운영업을 수중레저업과 수상레저업으로 세분화하고, 해양관광시설업의 유람선 및 크루즈 운영업을 유람선 운영업과 크루즈 운영업으로 세분화함.

소분류	세분류	정의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수상 탐승기구, 게임장, 쇼, 휴식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놀이시설을 갖춘 유 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90221)박물관 운영업 (90222)사적지 관리 운영업
	해양수족관 운영업	해양수족관 및 아쿠아리 움 운영업	(90231)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해양자연공 원 운영업	해양자연공원 운영업	(90232)자연공원 운영업
수산 레저 관광업	낚시터 운영업	유료 낚시터, 실내 낚시장 등	(91231)낚시장 운영업
	낚시선박 운영업	낚시선박 운영업	(50130)기타 해상운송업 (50209)기타 내륙 수상운송업 (91239)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수산 레저관광업	어촌체험마을, 수련시설 등	(91239)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자료: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2018년 기준)의 해양수산레저·관광업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수

2017년 기준 해양수산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수는 약 2,392개소로 추정된다. 낚시터 운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으며(916개소, 38.3%) 다음으로 수중레저업(451개소, 18.8%)과 수상레저업(363개소, 15.2%) 순으로 사업체수가 많았다.

〈표 3-3〉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 수(2017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사업체수	비중
합계	2,392	100.0%
마리나업	79	3.3%
수중레저업	451	18.8%
수상레저업	363	15.2%
유람선업	178	7.5%
크루즈업	4	0.2%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2	1.4%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95	4.0%
해양수족관 운영업	24	1.0%
해양자연공원 운영업	53	2.2%
낚시터 운영업	916	38.3%
낚시선박 운영업	166	6.9%
기타수산레저관광업	31	1.3%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발간예정)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매출액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약 6,98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업체 수 분포와 달리 매출액의 경우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18.6%), 해양수족관 운영업(17.2%), 유람선업(14.2%), 수상레저업(12.9%) 순으로 컸다.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60.5%가 매출액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낚시터 운영업과 낚시선박 운영업, 수중레저업의 경우 업종 내 사업체의 79.8%, 72.6%, 61.8%가 이 구간에 해당했다. 해양수족관 운영업은 30억 원 이상 연매출 기업의 비중이 30.5%로 가장 높았다.

〈표 3-4〉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매출액(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매출액		평균매출액	매출 구간별 사업체 비중		
	금액	비중	금액	1억 원 미만	1억~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합계	698,478	100.0		60.5	38.2	1.4
마리나업	22,745	3.3	288	42.9	57.1	0.0
수중레저업	54,060	7.7	120	61.8	37.7	0.6
수상레저업	90,023	12.9	248	42.1	56.6	1.3
유람선업	98,960	14.2	554	35.5	59.7	4.8
크루즈업	8,598	1.2	2,018	0.0	100.0	0.0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8,259	4.1	870	34.7	55.6	9.6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130,105	18.6	1,373	20.3	73.2	6.5
해양수족관 운영업	120,252	17.2	4,979	0.0	69.5	30.5
해양자연공원 운영업	45,481	6.5	865	21.4	78.6	0.0
낚시터 운영업	75,301	10.8		79.8	20.2	0.0
낚시선박 운영업	21,704	3.1		72.6	27.4	0.0
기타수산레저관광업	2,989	0.4		80.0	20.0	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발간예정)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별 평균 매출액 추이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자료로 분석해보면 수중레저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이 42.6%로 나타나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수상레저업이 40.5%, 마리나업이 15.9%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유람선업과 크루즈업은 각각 -19.5%, -3.8%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⁴⁾

44)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별 평균 매출액 추이는 2015년, 2016년 자료와 비교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 3-5〉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별 평균매출액 추이(2015~2017)

단위: 백만 원, %

구분	평균 매출액			
	2015	2016	2017	CAGR
마리나업	214	301	288	15.9%
수중레저업	59	111	120	42.6%
수상레저업	126	279	248	40.5%
유람선업	855	938	554	-19.5%
크루즈업	2,181	2,491	2,018	-3.8%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7; 2018; 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고용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의 총 종사자수는 약 8,272명으로 추산되며, 낚시터 운영업(21.4%), 수상레저업(14.7%), 수중레저업(11.6%),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11.6%)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형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상용근로자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용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업종은 해양수족관 운영업, 크루즈업, 해양자연공원 운영업 등인 반면 수중레저업, 낚시터 운영업, 낚시선박 운영업 등은 사업체 평균 상용근로자수가 1명이 채 되지 못했다.

〈표 3-6〉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종사자(2017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 종사자수		평균 종사자수	고용형태별 평균종사자수		
	명수	비중	명수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8,272	100.0	3.46	1.60	0.52	0.30
마리나업	237	2.9	3.00	1.14	0.71	0.14
수중레저업	961	11.6	2.13	0.22	0.45	0.33
수상레저업	1,215	14.7	3.35	1.37	0.79	0.20
유람선업	874	10.6	4.89	3.57	0.18	0.06
크루즈업	66	0.8	15.50	14.50	0.00	0.00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88	3.5	8.86	6.68	1.12	0.03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 운영업	959	11.6	10.12	6.36	2.70	0.00
해양수족관 운영업	624	7.5	25.85	24.65	0.00	0.00
해양자연공원 운영업	845	10.2	16.07	12.45	2.89	0.00
낚시터 운영업	1,771	21.4	1.93	0.30	0.19	0.43
낚시선박 운영업	352	4.3	2.12	0.33	0.32	0.47
기타수산레저관광업	80	1.0	2.53	1.38	0.15	0.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9(발간예정)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부가가치 및 고용 성장률

한국은행이 작성한 투입산출표(2010~2015년, 국산거래표, 기초가격표)를 활용하여 국내 해양수산업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규모의 추세 변화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총 부가가치의 연평

균 성장률(CAGR)인 5.8%보다 높은 연평균 8%의 성장세를 보였다. 해양수산업이 최근 6년간 -1.9%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전 산업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단위: %

부문	부가가치	
	CAGR	그룹 분류
수산물 생산	-3.5%	↓
수산물 가공	8.6%	↑
수산물 유통	8.9%	↑
해운	5.4%	↑
항만	6.2%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15.6%	↓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7.2%	↑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6.4%	↑
해양레저관광	8.0%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4.4%	↑
해양수산 전체	-1.9%	-
전 산업	5.8%	-

주: 1) 2010~201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용. 해양수산업 중심으로 분석. 산업전체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5.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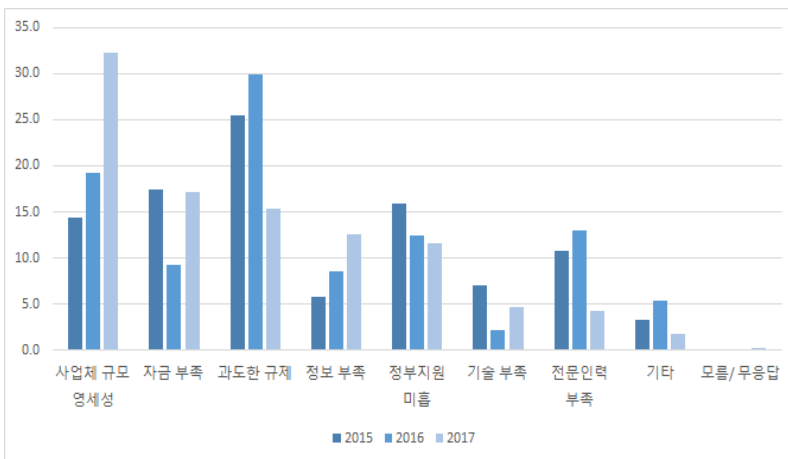
- 2) ↑는 고성장 추세 그룹(전산업 GAGR보다 높은 산업), ↑는 성장 추세 그룹(전산업 GAGR보다 낮지만 양(+)인 사업), ↓는 하락 추세 그룹(GAGR이 음(-)인 산업)

자료: 장정인 외(2019. 8), p. 10

4.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 사업체들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과 과도한 규제를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요인은 자금부족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세부 분야별 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8〉 해양수산 레저·관광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7; 2018; 201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제3절 종합분석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수요측면인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이용실태와 공급측면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운영 실태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명 중 8명이 해양레저관광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해양레저관광 참여 활동 유형은 해수욕장, 경관감상 등의 활동은 감소한 데 반해 바다낚시와 마리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 수중레저활동과 크루즈 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산업지원 정책과 함께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은 여름철 수요의 집중과 초기 교육비용, 장비 구매·대여 비용 등으로 인해 내륙관광보다 높은 관광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지원 정책과 연계한 관광객 지불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현황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5~2017년)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의 사업체별 평균매출액은 15.9~42.6%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 총액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60% 이상이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상용근로자는 1.6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낚시터/낚시선박 운영업 등의 평균 상용근로자는 0.22~1.37

명으로 나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양수족관 운영업(24.65명)이나 크루즈업(14.50명) 등과 비교하면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 수요의 급속한 성장세에 비해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해양수산업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전 산업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고성장추세 그룹으로 분석된다.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해양레저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4 장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경영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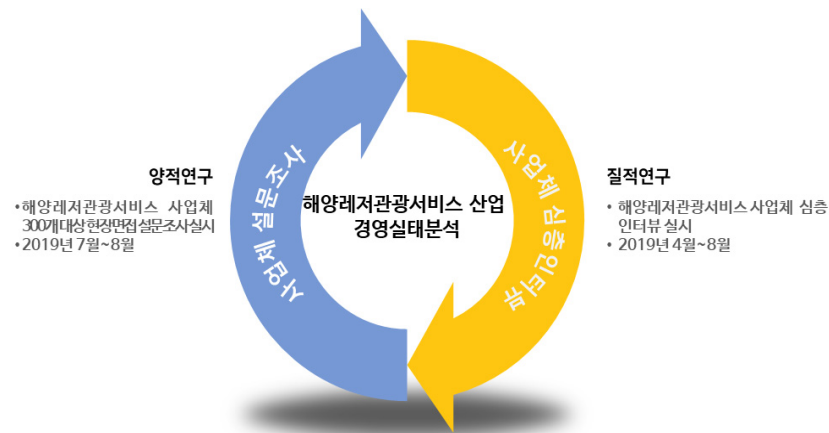
제1절 조사개요

1. 기본방향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통합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혼합적 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은 질적형식과 양적형식을 함께 활용하여 결과를 통합해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경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업체 운영현황,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해양레저

서비스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운영현황, 인력현황, 경영 애로사항, 국가지원 사업 경험 등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림 4-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경영실태 조사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산업분류에 따라 등록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약 300개소이며, 조사 시기⁴⁵⁾

45) 조사 시기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는 계절적 특성이 강해 비수기에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양레저 장비 판매업 등의 업종 전환이 나타나므로, 본 설문조사는 업체의 경영여건 반영 및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7월부터 8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는 2019년 7월 22일에서 8월 1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담당했으며, 적절한 사전 교육을 거친 면접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장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표본 수	300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4.94\%$ point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조사 기간	2019년 7월 22일(월)~8월 14일(수)

자료: 저자 작성

본 조사는 크게 사업체 운영 현황,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사업체 운영 현황 부분은 사업체 일반 현황과 조직의 형태, 경영 형태, 대표자 특성, 종사자 현황, 자금 조달 현황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여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은 사업체 경영 시 각 부문별(자금조달, 상품개발, 인력 수급 등) 어려운 점과 정부규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부분은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유무와 경험의 형태, 만족도, 향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표 4-2〉 설문구성

구분	내용
사업체 운영 현황	조직형태, 경영형태, 대표자 특성, 인력현황, 연간 영업기간, 자금조달 현황 등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 정부 규제 등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국가지원 사업 인지도, 경험 유무, 경험 형태, 만족도, 필요 지원 정책 등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96개로 32.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수중레저업이 83개(27.7%), 낚시선박운영업이 52개(1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산업분류	마리나업	9	3.0
	수중레저업	83	27.7
	수상레저업	96	32.0
	유람선운영업	22	7.3
	크루즈운영업	3	1.0
	낚시터운영업	13	4.3
	낚시선박운영업	52	17.3
	기타 수산레저관광업	22	7.3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사업체 유형

별, 지역별 안배를 거쳐 고르게 선정하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표 4-4〉 심층인터뷰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조사 방법	면대면 심층인터뷰
조사 기간	2019년 4월 ~8월

자료: 저자 작성.

〈표 4-5〉 인터뷰 대상자

사업체 유형		일시
1	마리나업 A	2019. 4. 2
2	수중레저업 B	2019. 4. 15
3	수중레저업 C	2019. 4. 15
4	수중레저업 D	2019. 5. 15
5	수중레저업 E	2019. 5. 15
6	수중레저업 F	2019. 5. 16
7	수상레저업 G	2019. 6. 3
8	마리나업 H	2019. 8. 1
9	마리나업 I	2019. 8. 1
10	수상레저업 J	2019. 8. 1
11	수상레저업 K	2019. 8. 13
12	수상레저업 L	2019. 8. 14
13	여행업(해양레저관광전문) M	2019. 8. 14

자료: 저자 작성

인터뷰를 통해 사업체 운영현황(기업 개황, 연간 매출액, 수익구조, 경영 애로사항, 마케팅 전략 등), 국가지원 사업 참여경험, 정책적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표 4-6〉 사업체 심층인터뷰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사업체 운영현황	사업체 현황(창업, 매출액, 수익구조 등), 연간 이용객 규모, 마케팅 전략
국가지원사업 참여경험	국가지원사업 참여유무(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인지/참여유무
건의사항	정책적 건의사항(제도개선, 법률정비), 창업전망 등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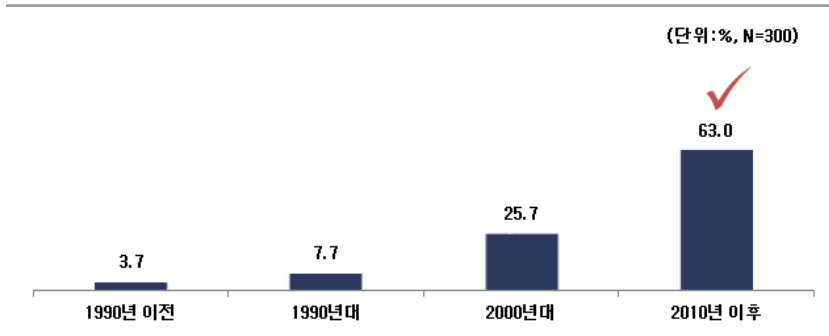
제2절 결과분석

1. 사업체 운영 현황 분석

사업체별 설립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사업체 중 63.0%가 2010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 설립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5.7%, 1990년대 설립된 업체가 7.7%로 분석되었다.

한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에 종사한 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 시작 시기와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설립 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에 최초 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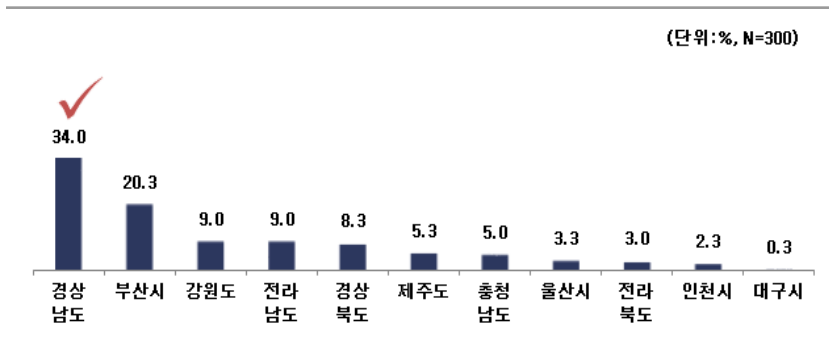
〈그림 4-2〉 사업체 설립 시기



자료: 저자 작성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20.3%,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각 9.0%, 경상북도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제주, 충남, 울산, 전북, 인천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사업체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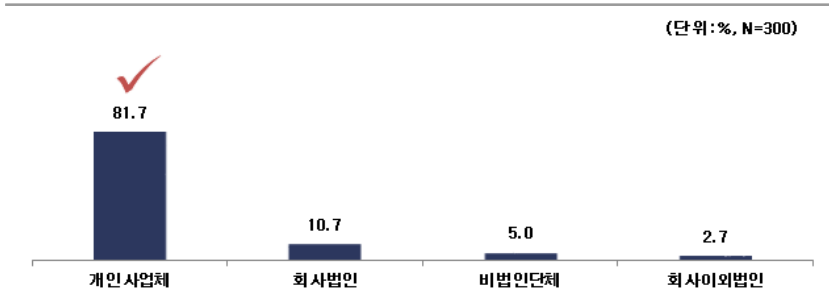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사업체 조직 형태로는 개인 사업체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 사업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의미

한다.⁴⁶⁾ 다음으로 회사법인 형태가 10.7%, 비법인단체 5.0%, 회사이외법인 2.7%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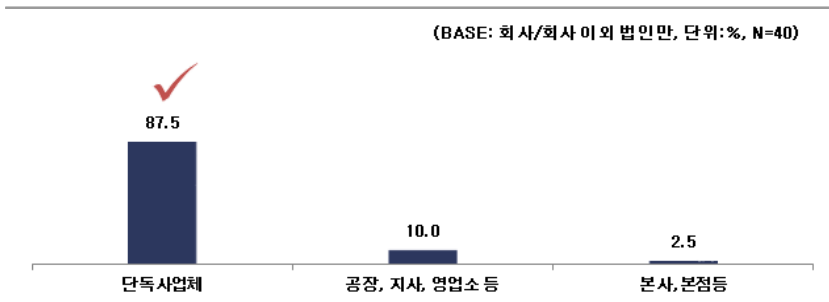
〈그림 4-4〉 사업체 조직 형태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사업체 조직 형태가 법인 형태인 회사법인과 회사이외법인인 경우 다른 장소에 본사, 본점 또는 공장,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의미⁴⁷⁾하는 단독사업체가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공장이나 지사, 영업소 등의 사업체는 10.0%, 본사나 본점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2.5%로 나타났다.

〈그림 4-5〉 사업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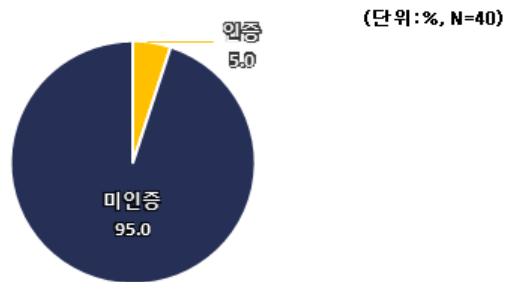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6)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개인사업체'(검색일: 2019. 9. 20)

47)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단독사업체'(검색일: 2019. 9. 20)

사업체 조직 형태가 법인 형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95.0%로 거의 대부분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증을 받은 기업은 5.0%로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수상레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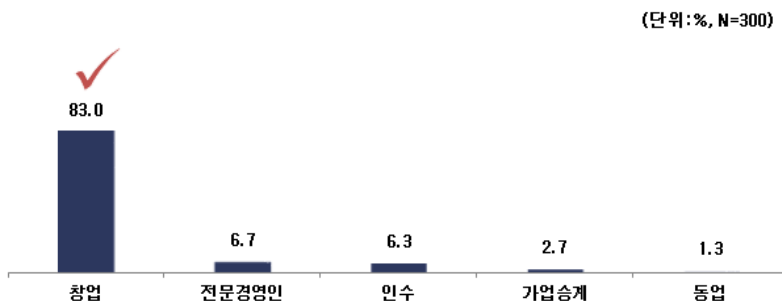
〈그림 4-6〉 벤처기업 인증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대표자 경영 형태로는 창업이 8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경영인이 6.7%, 인수 6.3%, 가업승계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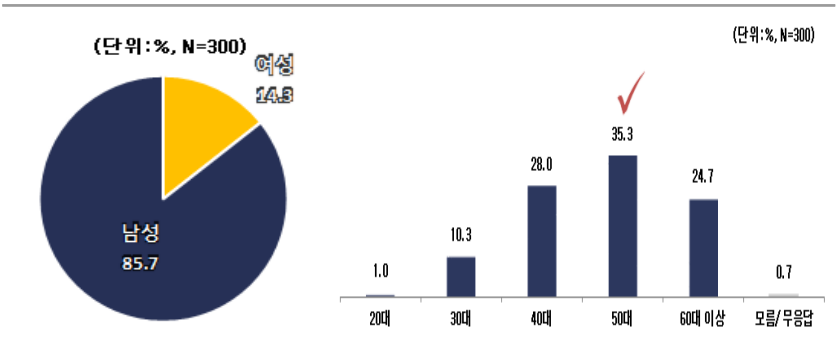
〈그림 4-7〉 대표자 경영 형태



자료: 저자 작성

사업체 대표자는 남성이 85.7%, 여성이 14.3%로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여성 대표자에 비해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은 50대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8.0%, 60대 이상이 24.7%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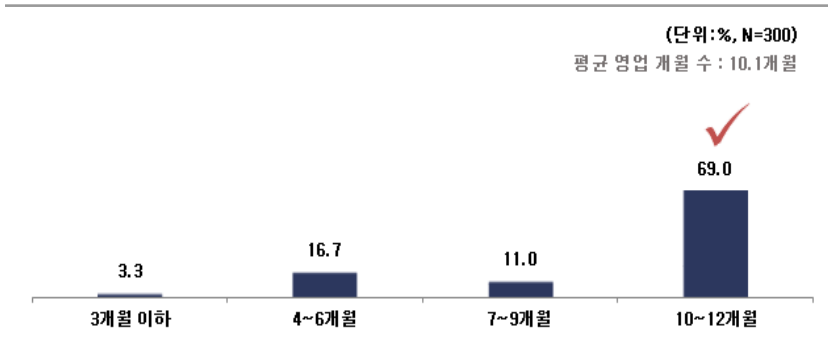
〈그림 4-8〉 대표자 성별 및 연령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은 7~9월 여름철에 활동이 집중되는 강한 계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설문에 응답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연간 영업기간은 10~12개월이 6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6개월이 16.7%, 7~9개월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3개월 이내로 영업한다는 응답도 3.3%로 조사되었다. 사업체들의 평균 영업 기간은 연간 10.1개월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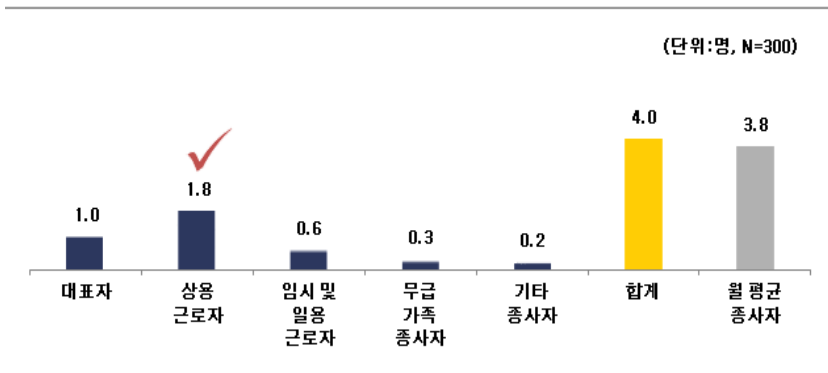
〈그림 4-9〉 연간 영업기간



자료: 저자 작성

사업체의 연간 평균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 1.8명, 임시 및 일용 근로자 0.6명, 무급 가족 종사자 0.3명 등을 합해 4.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8명 외에 임시 또는 무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체의 규모가 상당히 영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평균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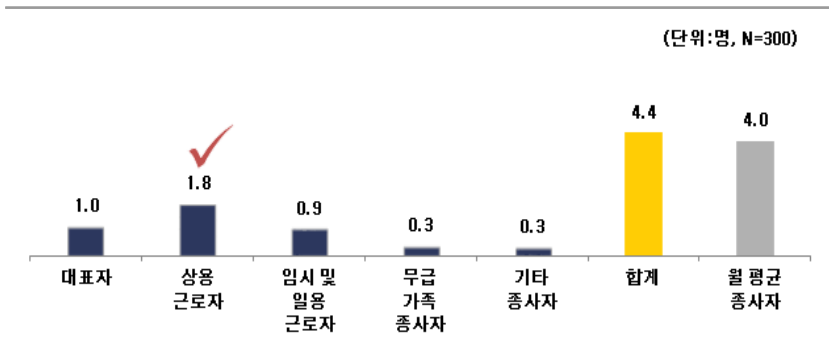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성수기 평균 총 근로자 수는 4.4명으로 평상시나 비성수기의 평균 근로자 수인 4.0명보다 0.4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용근로자 1.8명, 임시 및 일용 근로자 0.9명, 무급 가족 종사자 0.3명, 기타 종사자 0.3명으로 구성된다. 상용근로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수는 평상시와 성수기가 동일하나 임시 및 일용 근로자와 기타 종사자가 각각 0.3명, 0.1명 증가해 여름철 성수기 동안 임시 및 일용 근무자를 고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의 성수기가 7~8월에 집중되어 계절적 편중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심층 업체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우리업체의 종사자 수는 17명 정도인데 이 중 4명만 상시이고, 모두 아르바이트 형식의 고용임. 해양레저관광은 시즌상품 성격이 강하다보니 거의 대표자 혼자 정직원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수상레저업체 G).”

〈그림 4-11〉 성수기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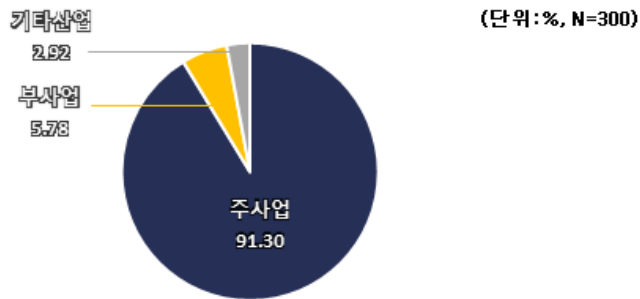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인터뷰를 통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의 계절적 편중현상의 특성상 비수기 대책으로 타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그

러나 이러한 실태에 대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사업체는 주 사업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9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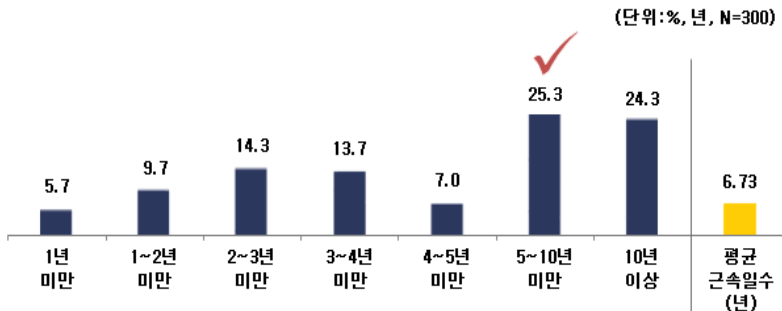
〈그림 4-12〉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비중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73년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5~10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24.3%,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50.4%로 나타났다.

〈그림 4-13〉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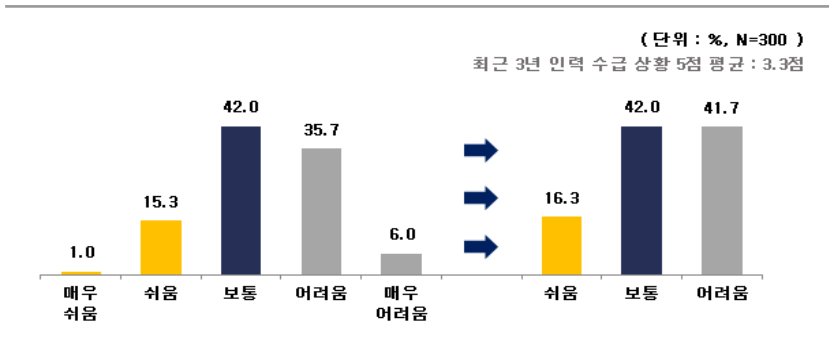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018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 근속기간은 73개월(6년 1개월)이었는데,⁴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최근 3년간 인력 수급 여건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았으나, 어렵다는 응답도 41.7%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4〉 최근 3년간 인력 수급 여건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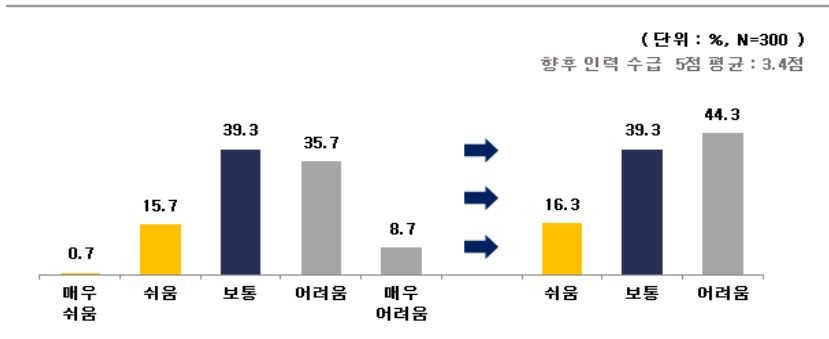
한편 앞으로 인력 수급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도 39.3%로 나타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관계자들은 향후 인력 수급 전망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로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 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을 들었다.

“관심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의 실재상황이랑 견해차이가 많음. 특히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나 교육

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8 기준(검색일: 2019. 9. 20)

이 필요 없는 인력을 고용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임(마리나업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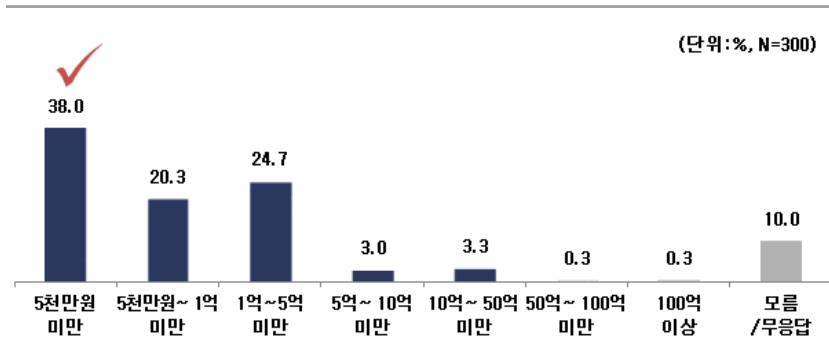
〈그림 4-15〉 향후 인력 수급 전망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5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5억 원 미만인 업체 24.7%,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 20.3%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의 약 60%가 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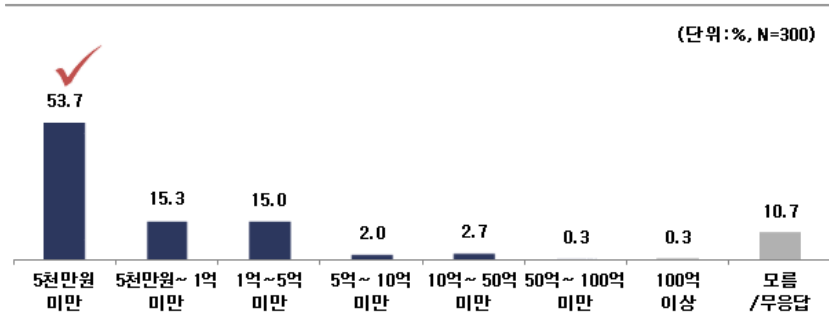
〈그림 4-16〉 연평균 매출액 규모



자료: 저자 작성

연평균 영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3.7%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15.3%, 1억~5억 원 미만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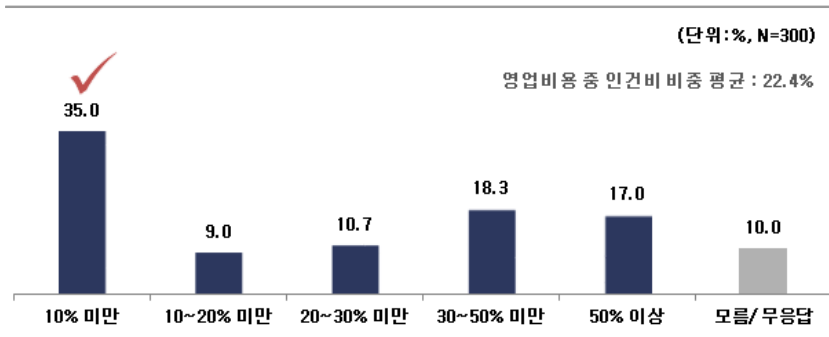
〈그림 4-17〉 연평균 영업비용 규모



자료: 저자 작성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50% 미만이라는 응답이 18.3%로 나타났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평균 22.4%로 분석되었다.

〈그림 4-18〉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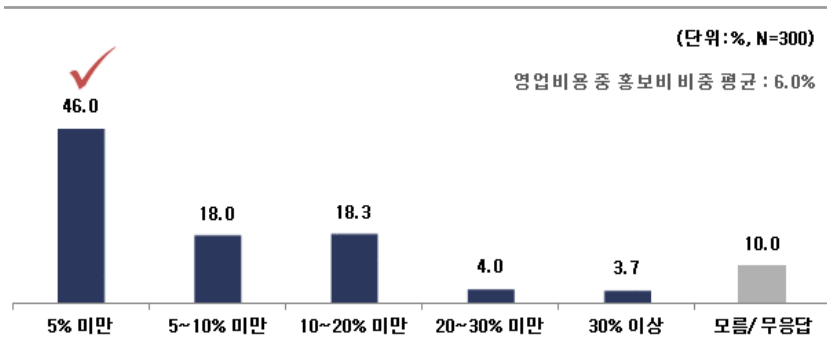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영업비용 중 홍보비 비중이 5% 미만이라는 응답은 46.0%로 응답자의 약 절반에 가깝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20% 미만이 18.3%, 5~10% 미만이 18.0%로 영업비용 중 홍보비가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82.3%로 조사되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영업비용 중 홍보비 비중은 평균 6.0%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온라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나 여행사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홍보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지인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음. 예전에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도 많이 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재는 활발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수증레저업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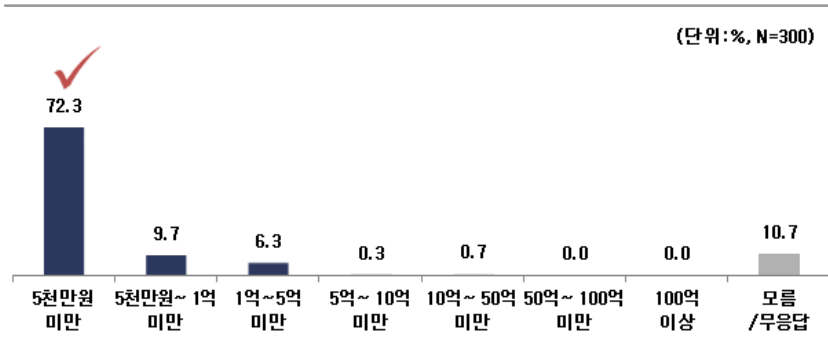
〈그림 4-19〉 영업비용 중 홍보비 비중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9.7%, 1억~5억 원 미만 6.3%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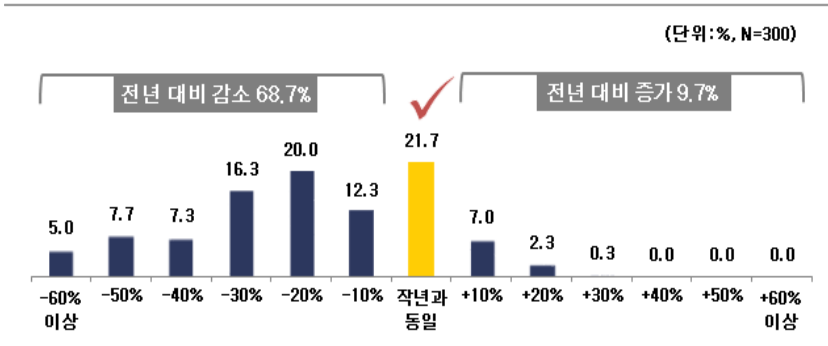
〈그림 4-20〉 평균 영업이익 규모



자료: 저자 작성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8.7%로 전년 대비 2019년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2018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그림 4-21〉 2019년 순이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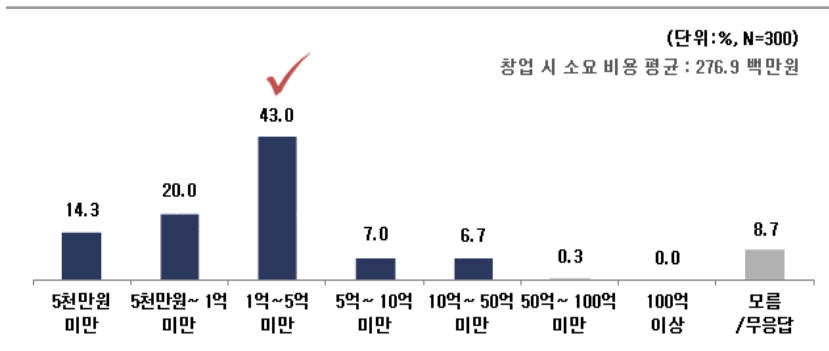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018년에 비해 2019년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 중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30% 감소가 16.3%, 10% 감소가 12.3%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 중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0%, 20% 증가로 예상한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창업 시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평균 1억~5억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5천만 원~1억 원 미만 20.0%, 5천만 원 미만 14.3%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5억 원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평균 소요 비용은 2억 7,690만 원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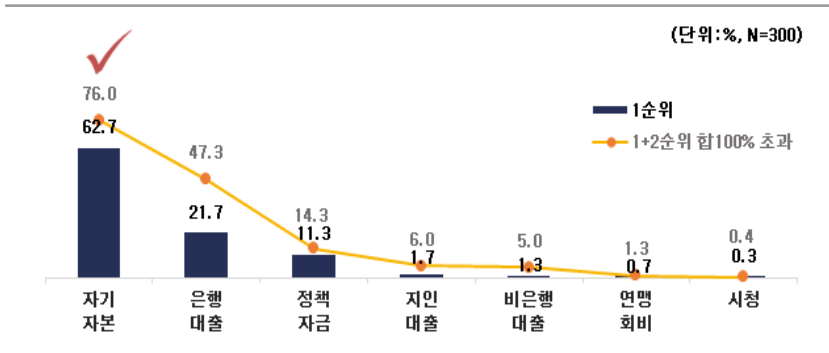
〈그림 4-22〉 창업 소요 비용



자료: 저자 작성

창업 자금 조달 시 자기 자본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은행 대출 21.7%, 정책자금 1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도 동일하게 자기 자본 활용이 76.0%, 은행 대출 47.3%, 정책자금 14.3%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창업 자금 조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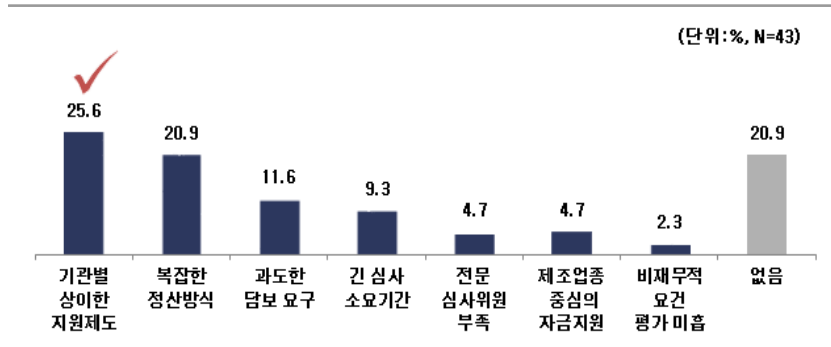
창업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한 응답자에게 정책자금 활용 시 애로사항을 질문한 결과, 기관별 상이한 지원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잡한 정산방식(20.9%), 과도한 담보 요구(11.6%), 긴 심사 기간(9.3%) 등이 정책자금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의 복잡함과 담보 요구 등에 대한 부분은 업체 심층 인터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작년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음(수증레저업 B).”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지만 담보가 없으면 안되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음(마리나업 A).”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정책자금이 창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업력이나 창업자 연령 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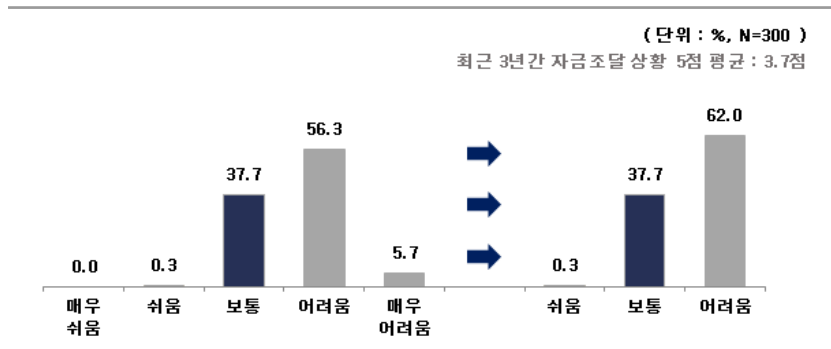
〈그림 4-24〉 정부 정책자금 활용 시 애로사항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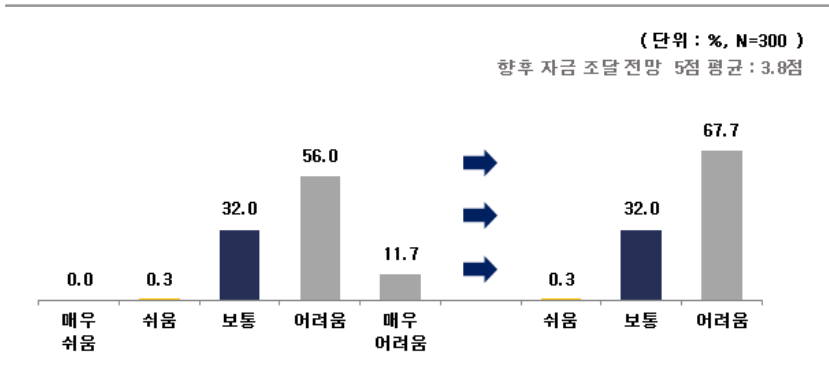
최근 3년 동안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 응답자의 62.0%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자금조달 전망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7%로 향후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림 4-25〉 최근 3년간 자금조달 여건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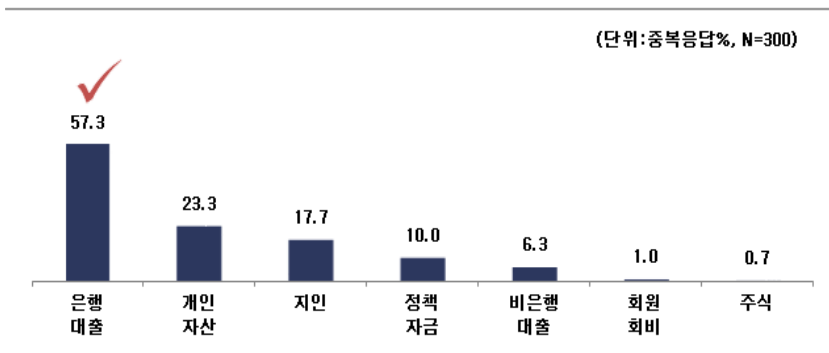
〈그림 4-26〉 향후 자금조달 전망



자료: 저자 작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자산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3.3%, 지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다는 응답이 17.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책 자금을 활용해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는 응답도 10.0%로 나타났다.

〈그림 4-27〉 사업체 운영 자금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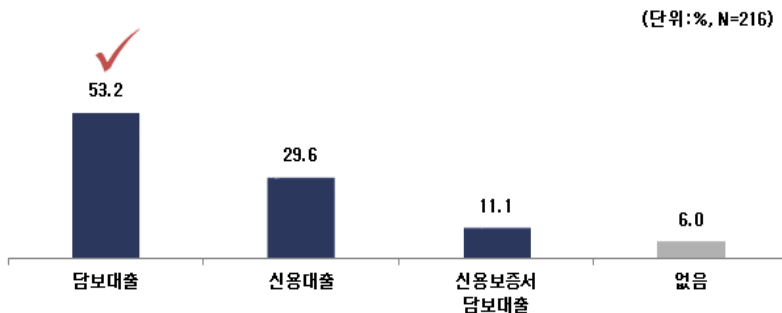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외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53.2%는 담보대출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9.6%가 신용대출, 11.1%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저선박 등 해양레저장비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재산가치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현재 레저선박은 아직 은행권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아 자금 확보가 많이 힘든 상황임. 단계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레저선박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다보니 다음 투자를 받기가 힘들고 결국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음 (마리나업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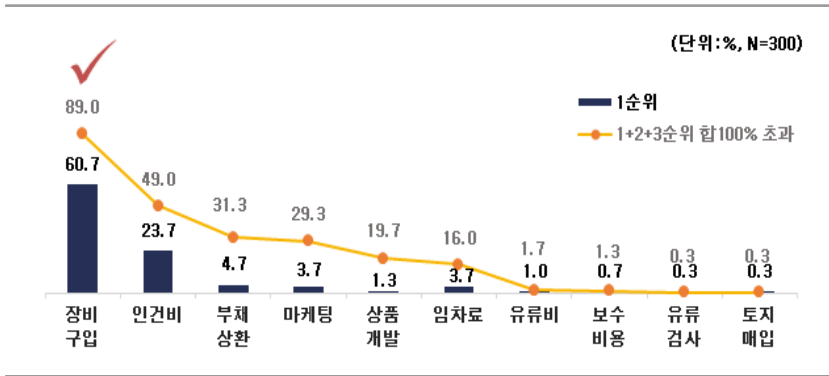
〈그림 4-28〉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유형



자료: 저자 작성

조달한 자금은 장비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23.7%, 부채 상환 4.7%, 마케팅 3.7% 등의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복응답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장비 구입을 위해 투입한다는 응답이 89.0%, 인건비 49.0%, 부채 상환 31.3%, 마케팅 29.3% 순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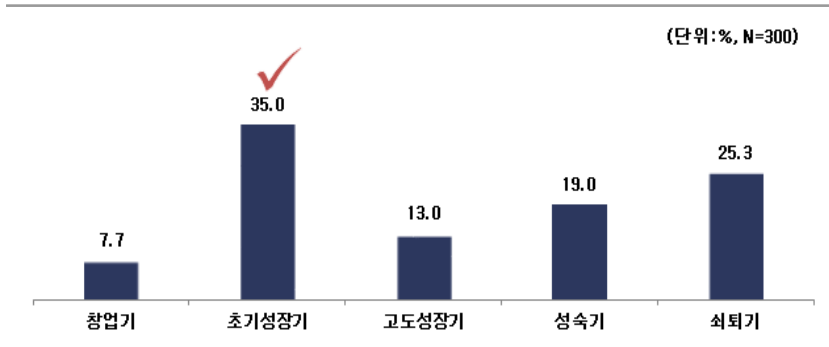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체 경영 애로사항 분석

설문에 응답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중 35.0%는 현재 초기 성장단계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나, 25.3%는 쇠퇴기라고 응답했다. 201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중 시장 진입 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성장기라는 응답이 10.6%, 성숙기 또는 안정기 30.0%, 쇠퇴기 47.8%, 폐업 및 업종 전환고려기 4.6%로 나타난 바 있다.⁴⁹⁾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성장 단계에 비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종은 창업기와 초기 성장단계, 고도 성장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성숙기와 쇠퇴기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업종에 비해 낮았다.

49)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2013년 기준(검색일: 2019.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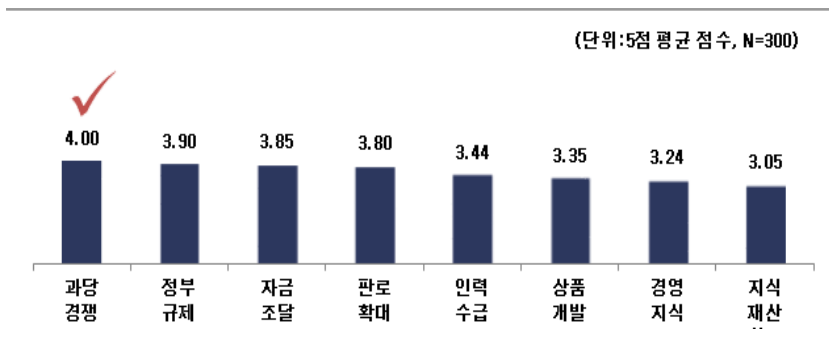
〈그림 4-30〉 사업체 성장 단계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경영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응답자들은 과당 경쟁(4.00점)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오기 전에 폭발적 성장이 나타나 많은 업체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가격 및 서비스 하락과 낮은 안전의식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림 4-31〉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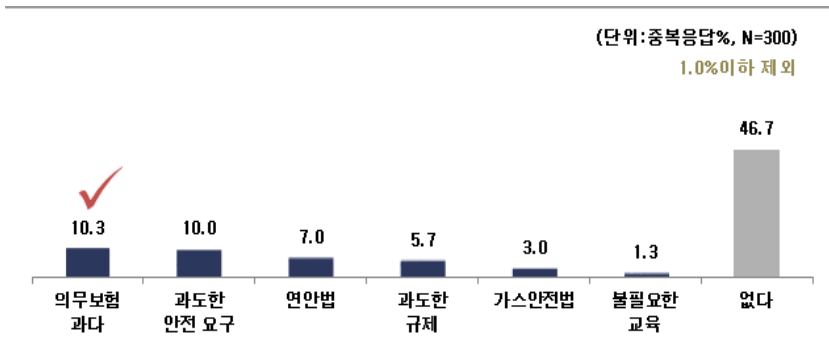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정부 규제(3.90점), 자금 조달(3.85점), 판로 확대(3.80점) 등을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경영 지식(3.24점)이나 지식 재산 확보(3.05점)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사업체 경영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중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의무 보험제도가 적용되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10.3%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도한 규제가 10.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도한 규제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응답도 46.7%로 절반에 가깝게 조사되었다.

〈그림 4-32〉 과도한 규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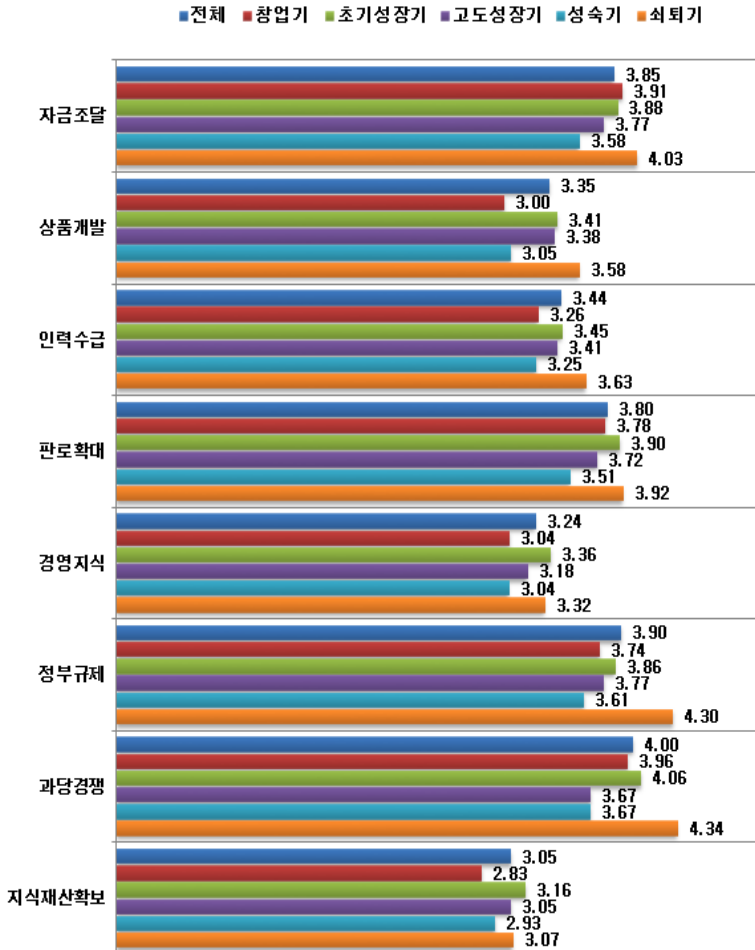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업체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의 유형별 규제사항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중레저업체의 경우 우리나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은 해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거나 해외 교육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

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상레저업은 국내 민간 수상레저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마리나업의 경우에도 고액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인배상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한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교육 의무 수강, 레저선박 운항 인력의 의무 승선경력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전반적으로 쇠퇴기 단계 기업의 애로사항이 높게 나타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대한 업종 전환 등 활로 모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목별로 보면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창업기(3.91점)와 쇠퇴기(4.03점) 단계에 있는 기업체가 다른 기업체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개발과 인력수급은 초기 성장기(3.41점, 3.45점), 고도 성장기(3.38점, 3.41점) 단계에 있는 기업체가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판로확대와 경영지식에 대해서는 초기 성장기(3.90점, 3.36점), 쇠퇴기(3.92점, 3.32점) 기업체가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부 규제는 쇠퇴기 단계 기업체(4.30점)가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했다. 과당경쟁과 관련해서는 창업기(3.96점), 초기 성장기(4.06점), 쇠퇴기(4.34점) 단계 기업체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기업 성장 단계별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5점 평균 점수, 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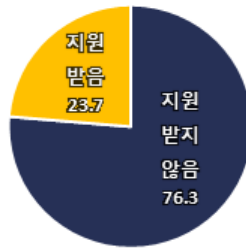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국가지원 사업 참여 경험 분석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76.3%의 응답자가 지원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3.7%가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정부의 산업체 지원 사업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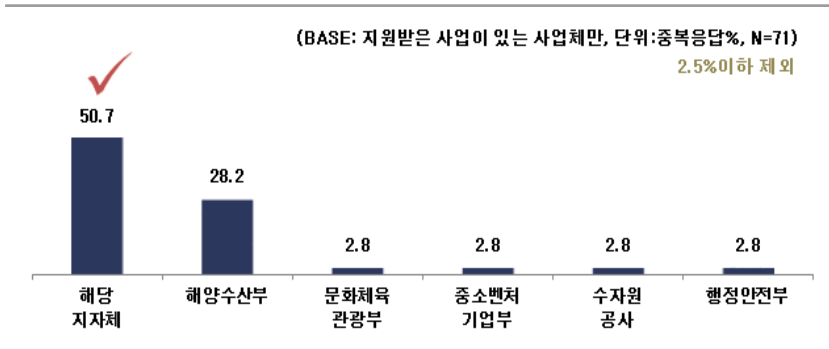
(단위: %, N=300)



자료: 저자 작성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주관한 부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자체가 주관했다는 응답이 50.7%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가 28.2%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수자원 공사, 행정안전부 등은 각 2.8%로 낮은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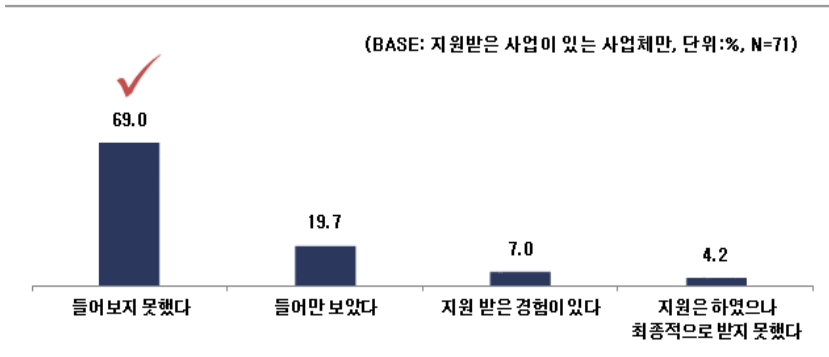
〈그림 4-35〉 지원받은 사업의 소관 부처



자료: 저자 작성

특히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는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에 대해 들어보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69.0%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해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7.0%), 지원은 하였으나 최종 선정은 되지 못한(4.2%) 경우는 11.2%로 나타났다.

〈그림 4-36〉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 인지도 및 지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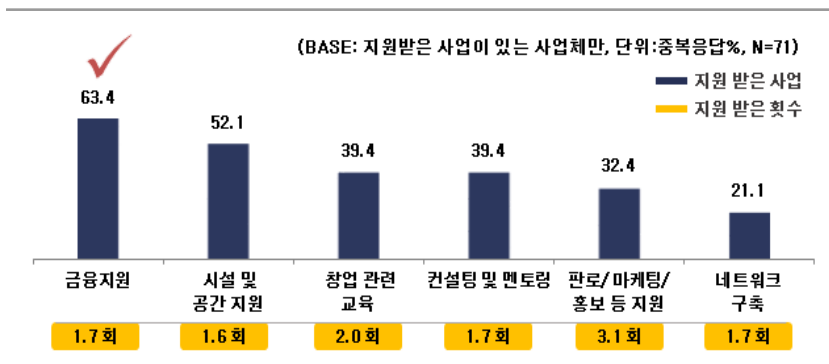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정부의 산업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분야로는 금융지원 분야가 63.4%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및 공간지원이 52.1%,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및 멘토링이 각각 39.4%, 판로/마케팅/홍보 등 지원이 32.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균 지원 횟수로는 판로/마케팅/홍보 등 지원이 3.1회, 창업 관련 교육 2.0회, 금융지원과 컨설팅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이 각 1.7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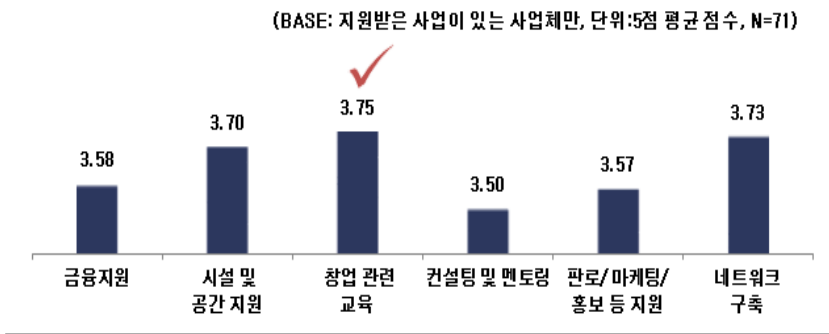
〈그림 4-37〉 지원받은 분야 및 횟수



자료: 저자 작성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창업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3.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3.73점, 시설 및 공간 지원이 3.70점, 금융 지원이 3.58점, 판로/마케팅/홍보 등 지원이 3.57점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지원 분야 모두 5점 만점에 3.50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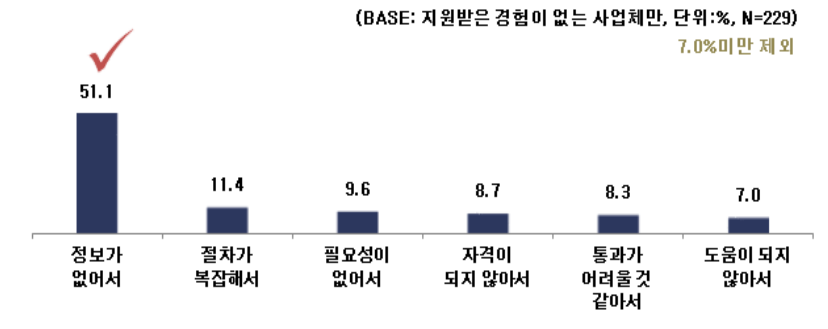
〈그림 4-38〉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정부의 산업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11.4%),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8.7%), 선정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8.3%) 등의 이유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굳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9.6%), 지원 사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7.0%)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밖에 현재 정부 지원정책이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분야 비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인한 행정 착오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9〉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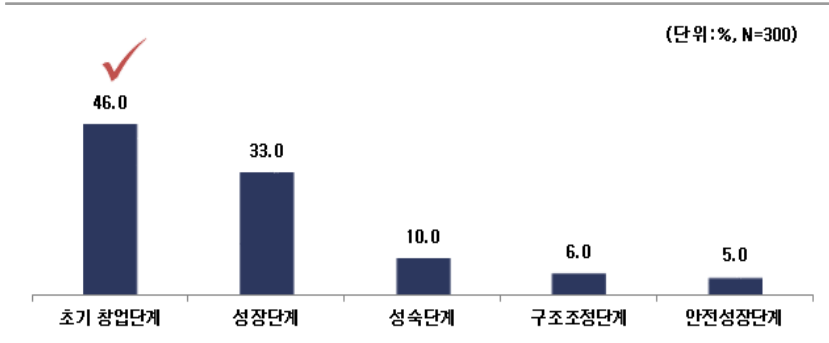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현재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초기 창업단계 사업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장단계라는 응답이 33.0%, 성숙단계라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 심층인터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현재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은 창업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속화 단계의 지원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 지원 시 자격 요건으로 짧은 업력, 업체 대표의 연령 제한 등을 설정해 지원정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해양관광 정책은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속화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부족함(마리나업 A).”

“창업 초기에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이, 대출, 업력 등 장벽이 너무 커서 힘든 상태임(수중레저업 E).”

〈그림 4-40〉 현재 해양레저관광 분야 기업체 중 정부 지원 대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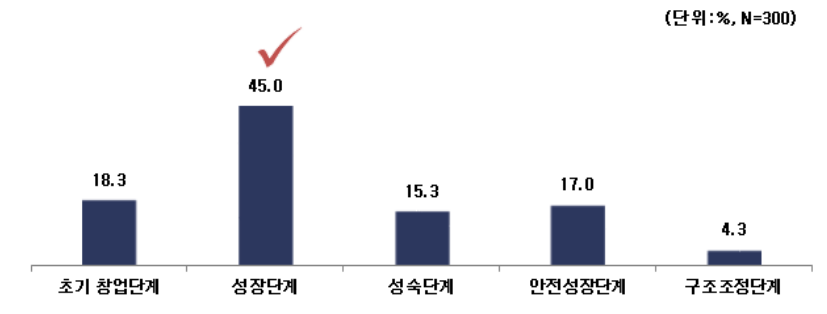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향후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초기 창업단계 (18.3%), 안전성장단계(17.0%), 성숙단계(15.3%)라는 응답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기하였던 현재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성장단계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업체는 현재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함.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 (... 중략 ...) 성장기에 있는 업체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산업이 육성될 것임(해양레저관광전문 여행업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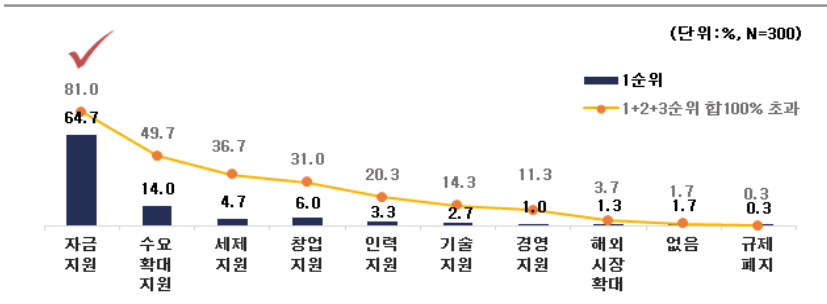
〈그림 4-41〉 향후 해양레저관광 분야 정부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단계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들은 사업체 운영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자금 지원을 꼽았다. 1순위 기준으로는 64.7%, 3순위까지 확대할 경우 81.0%의 응답자가 자금 및 대출 지원, 보증지원 등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수요확대(판로) 지원 정책(14.0%), 창업지원 정책(6.0%)이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3순위까지 확대할 경우에도 자금 지원(81.0%), 수요확대 지원(49.7%),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36.7%)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나 1순위 기준 결과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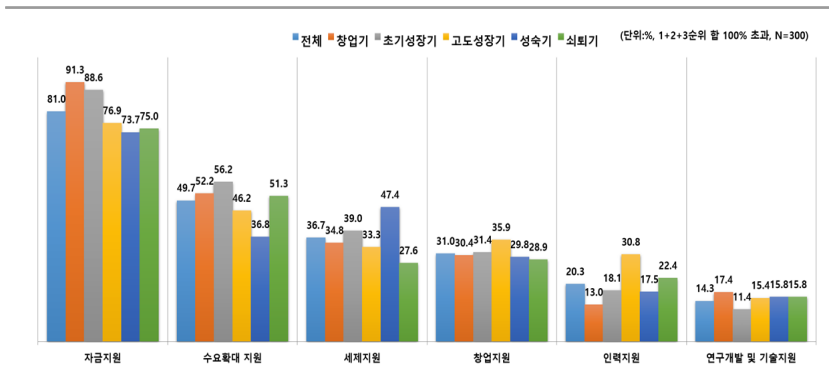
〈그림 4-42〉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설문에 응답한 각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창업기(91.3%)와 초기 성장기(88.6%) 단계 기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확대 지원은 초기 성장기(56.2%)와 쇠퇴기(51.3%) 기업이,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성숙기(47.4%) 단계 기업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고도 성장기(30.8%) 단계 기업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상이하므로 단계별 맞춤 정책 지원 방안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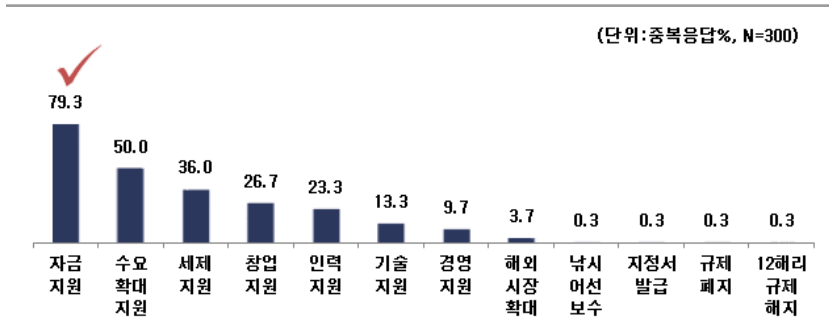
〈그림 4-43〉 기업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향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로는 자금 지원이 79.3%로 가장 높았으며, 수요확대 지원(50.0%), 세제 지원(36.0%), 창업 지원(26.7%), 인력 지원(2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13.3%), 경영 지원(9.7%), 해외시장 확대 지원(3.7%) 등은 비교적 응답률이 낮았다.

〈그림 4-44〉 향후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시사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사업체 형태는 개인·단독사업체의 창업을 통한 운영이 특징이다. 이는 소규모 자기자본을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으로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체의 연간 평균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가 2명 이하로 나타나 사업체의 영세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의 계절적 편중 현상으로 인한 임시 근무자 고용 비율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경우 고용 창출효과와 함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영세기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체는 영업비용 중 인건비, 홍보비 지출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몇몇 업체는 지역 관광공사 및 여행사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의 자금 사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창업 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한 경우는 전체 응답의 11.3%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행정절차, 담보설정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 정책에 마리나업, 수상·수중 레저업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업종이 포함되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자금이 해양레저장비 구입에 투입되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고가 장비에 대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과당경쟁과 정부 규제,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체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조달은 창업기 단계에 있는 기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품개발과 인력수급은 초기 성장기, 판로확대와 경영지식은 초기 성장기와 쇠퇴기, 과당경쟁은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체가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체 유형에 따라 관련 법안이 상이하므로 사업체 유형별로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또한 사업체의 성장단계·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산업체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 중 23.7%로 나타났는데, 이 중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었고, 28.2%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정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원받은 사업이 대부분 금융지원과 시설 및 공간지원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력지원, 판로지원, 기술지원, 일반 경영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지원정책의 개발 및 확대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산업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성장단계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이와 함께 정책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업 방안 모색,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제1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설정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국내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한 정책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용 활성화 측면을 중시하거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접근하여 산업을 공급하는 사업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성장 잠재력에 비하여 산업의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의 증대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해양레저서비스 산업은 초기 성장기,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은 타 해양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지원 정책은 크게 자금, 수요확대, 창업, 세제 및 인력, 연구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성장단계별 필요한 산업지원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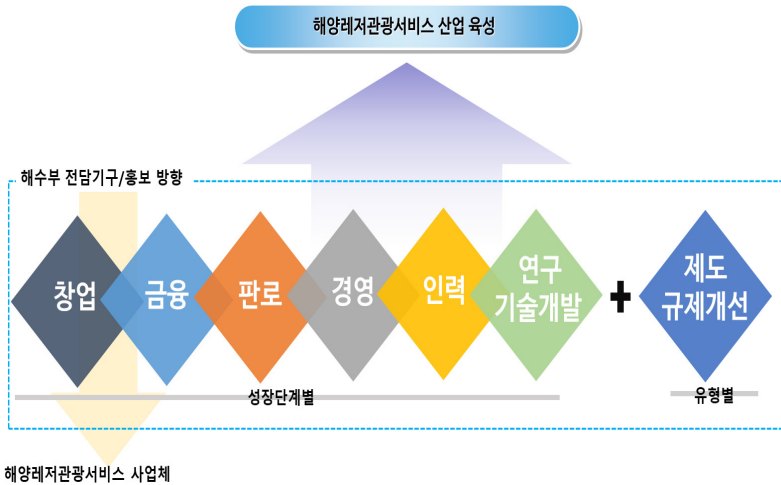
구분	필요한 산업지원 정책						
	자금지원	수요확대 지원	창업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해외시장 확대지원
전체	64.7	14.0	6.0	4.7	3.3	2.7	1.3
창업기	60.9	21.7	8.7	4.3	4.3	0.0	0.0
초기성장기	72.4	11.4	6.7	5.7	1.9	1.0	1.0
고도성장기	64.1	20.5	5.1	2.6	0.0	5.1	0.0
성숙기	52.6	8.8	8.8	7.0	7.0	1.8	5.3
쇠퇴기	64.5	15.8	2.6	2.6	3.9	5.3	0.0

자료: 저자 작성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기에서는 창업지원과 수요확대 지원이 다른 단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숙기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수요, 창업, 세제 등 대부분의 항목이 균일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산업지원 정책 방안을 각 산업지원 정책의 부문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각각의 성장단계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5-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자료: 저자 작성

각 산업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지원 정책을 틀로 삼아 창업지원 정책, 자금지원 정책, 판로지원 정책, 경영지원 정책, 인력지원 정책, 연구기술개발 지원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업체의 유형별 규제사항,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유형별 제도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지원정책

부문별·성장단계별 추진과제

1. 창업지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재편으로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며,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융자, 창업사업화자금, 창업지원 시설 및 공간 제공, 창업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은 창업 이후 3년 미만에 폐업하는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⁵⁰⁾ 등 창업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교육·컨설팅·멘토링 지원, 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 부분은 지난 7년 동안 10개 사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정책은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역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관광벤처 공모전 내에 해양관광벤처 부문으로 편입되면서

50) 창업진흥원(2013a), p. 1.

해양레저관광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일반관광 분야에 지원하거나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공모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마리나산업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업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해양관광벤처기업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방안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통계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 방안, 자금확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관련 새로운 업종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업종체계를 분석하고 유연한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해양레저관광 지원 서비스업, 신규 육성분야 및 전문인력 등을 편입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산업지원의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통계작성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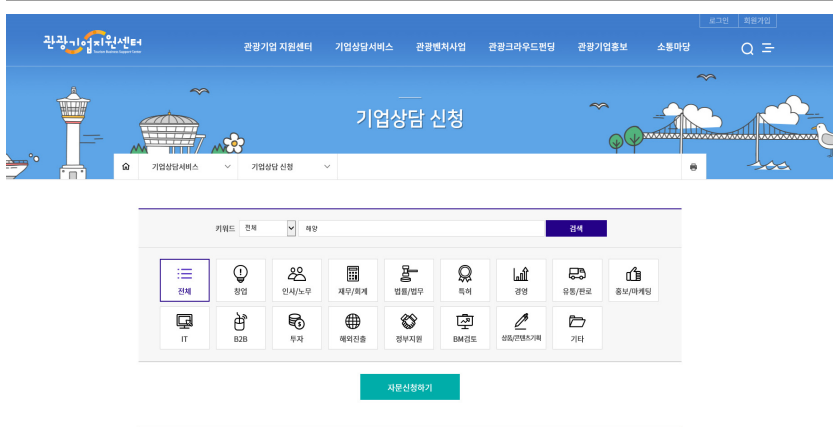
둘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 확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창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관리·지원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분야의 창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중앙부처 간 공유하고 해당 분야의 창업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창업지원을 실시하는 부서는 수산분야와 해양수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부처 간 협업 및 민간 지원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창업지원과 관련한 자금은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에서 사업화자금으로 사업자당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사업을 통하여 주어지는 혜택은 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지원, 사업자 간 네트워크 등이다. 물론 경영지원 정책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초기단계에 진입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자금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의 경우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에 의존하거나 지인을 통한 투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책자금을 통한 투자, 대출 등의 방안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영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그간 해양레저관광 창업기업은 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지원 등을 중심으로 경영지원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1년에 한번 운영되는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내외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기업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누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창업과 관련한 경영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5-2〉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기업지원센터



주: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해양', '해양관광', '해양레저'와 관련한 기업의 자문신청은 전무한 실정임

자료: 관광기업지원센터(검색일: 2019. 10. 17)

또한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교육 및 컨설팅, 초기 자금지원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거점 공간 확보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B2B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안내소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3〉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부산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로 관광과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19년 10월 기준 관광스타트업 30개사, 융복합 스타트업 2개사,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9개사 등 총 45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자료: 부산관광공사 보도자료(2019. 8. 13)

다섯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법률, 창업의 절차, 업의 특성 등을 소개하여 해당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해양레저관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마리나업에 대한 창업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 창업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창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확대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업종체계 분석 및 산업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통계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지원 전담팀 신설
- 자금확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부각 및 민간투자 활성화 마련
- 경영지원 전략: 기업상담 창구 상시 운영,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거점 공간 확보 (향후, 여행정보 제공 및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안내소 역할 수행)
- 창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현재 운영 중인 창업시스템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2. 자금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자금지원 정책은 가장 중요한 산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지원은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양 분야의 자금지원 정책으로는 해양모태펀드를 활용한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모태펀드를 활용하여 해양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95억 원 규모,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을 마련하였다.⁵¹⁾ 그러나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분야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51) 해양수산부(검색일: 2019.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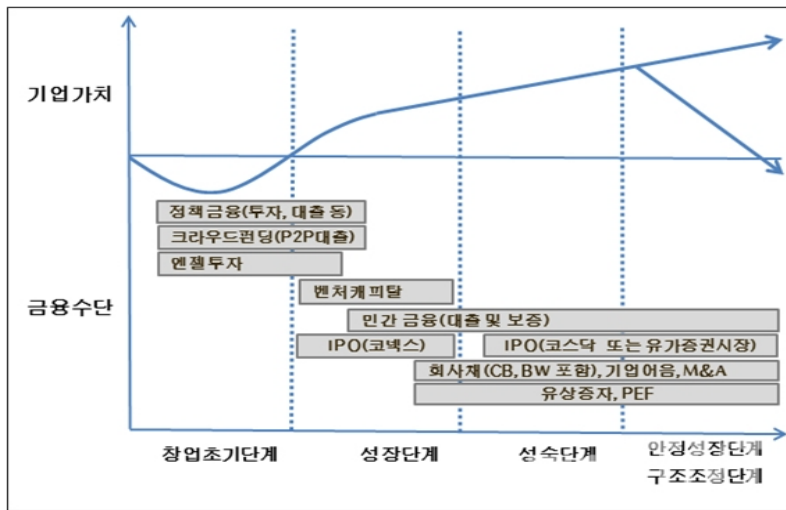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지원
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중레저
업, 마리나업 등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업종이 포함되었으나
제3장의 내용 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활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가 가능한
대형호텔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의 상태에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
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자금을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산업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부처 간·부처 내 차원에서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운용되는
정책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 및 융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자
금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
다. 특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 고가의 레저장
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대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 산하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 등에서 레저장비의 담보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자금
지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양레저환경세나 지속
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낚시면허제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정책 및 유형은 다른 것으로 분
석되고 있어 적절한 성격의 자본공급과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투자시장을 마련해야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단

계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엔젤투자 등이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유형이다.

〈그림 5-4〉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유형



자료: 창업진흥원(2013b), p. 11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에 민간 펀드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지원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전담팀이 엔젤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에게는 투자유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기업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이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 등을 진행할 수 있

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5〉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 투자 전용관



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 투자 전용관을 마련하여 민간과 기업 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자료: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검색일: 2019. 10. 18)

한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들은 현재 국내의 자금지원 정책이 기업생애주기상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성숙기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정책을 통하여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업 투자홍보(IR)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선정된 스타트업 53곳 중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는 총 3곳으로 이 중 1곳은 제조업인 것

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 벤처기업 공모전과 함께 기업투자 홍보회, 상담회 등 민간과 산업이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투자라는 선순환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 및 융자 방안 마련
- 고가의 레저장비에 대한 담보 방안 마련: 해양진흥공사 등 활용
- 자금조성: 해양레저환경세, 낚시면허제 등을 통한 확보 방안 모색
- 민간 펀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투자상담/홍보회, 기업상담창구 플랫폼 개설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3. 수요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위하여 ①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③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④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⑤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⑥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⑦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⑧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

홍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의 판로지원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일반관광분야로 해양레저관광벤처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첫째, 정부 차원에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에서 당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기업상당 창구 온라인 플랫폼 정보망을 구축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 실태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는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비용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통합 홍보 및 예약시스템 채널을 마련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홍보 모바일 앱을 개발하거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관광공사에서 지역 관광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관광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해양레저관광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및 브랜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등이 협력하여 부산 해양관광상품을 결합한 ‘하나로패스’ 브랜드를 개발한 바 있다. 이는 지역의 요트투어, 크루즈, 서핑, 해상케이블카 등의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향후에는 통합 예약 및 결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림 5-6〉 부산해양레저관광 상품 마케팅 ‘하나로 패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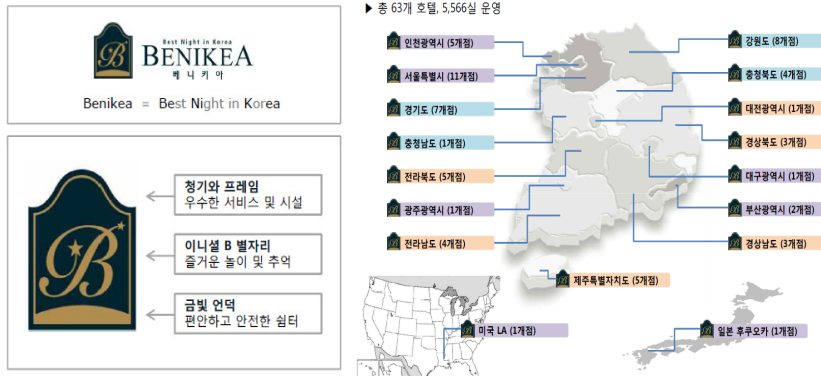
구분	내용
마리나업	요트홀릭 외 10개 업체
크루즈업	자갈치 크루즈 외 3개 업체
수상레저업	서프홀릭 외 2개 업체
케이블카	송도해상케이블카
총 19개 업체 대상	

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블로그(검색일: 2019. 10. 21)

이러한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상품의 브랜드화는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의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사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사업체와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와 지역의 모범 식음료, 숙박서비스 업체 등과의 제휴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해양레저관광의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질적 제고를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7〉 국내 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사례



주: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표준화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베니키아 비즈니스 호텔 체인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베니키아 브랜드로 선정되면 경영지원, 영업 및 마케팅, 홍보, 서비스 품질평가, 직원 교육 지원 등의 산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베니키아 Best Night in Korea BENIKEA HOTEL(검색일: 2019. 10. 25)

셋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다.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은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해양레저워크, 국제보트쇼 등으로 특정산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통합적인 해양레저관광산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박람회의 확대 및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산업 박람회는 기업과 기업(B2B)의 네트워크 공간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직접 사업체를 설명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기업과 고객(B2C)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서비스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개최

해야할 것이다.

한편 현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해외관광객은 지역의 관광 공사 차원에서 홍보를 담당하거나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하여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방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차원의 인바운드 정책 진흥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의 해외 산업박람회 참가 시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해외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야할 것이다.

판로지원은 기업의 모든 성장단계에서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단계는 시장에서 검증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개발하였지만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장기 기업들은 국내 판로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을 것이고 고도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추진과제〉

- 기업상담 창구 온라인 플랫폼 정보망 구축 홍보: 통합 홍보 및 예약시스템 채널 마련
- 지자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브랜딩 개발 지원
- 전국단위 해양레저관광 브랜드 개발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기존 박람회 확대 및 통합, 해외 산업박람회 지원, 해외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등

4. 경영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영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경영지원은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경영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실태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체는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크, 일반 경영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몇몇 업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양레저관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소상공인컨설팅 제도는 전문가가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소상공인의 경우 국비지원이 90%, 위기진단컨설팅 신청자의 경우 100%를 지원받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교육 내 재무, 회계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영지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정책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전문가 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만 지원 •1회에 4일 지원 •1일 4시간 이상 지원 •자부담금: 30천 원/1일 •연 4,800만 	컨설팅트 비용: 300천 원 /1일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역량 점프 업 프로 그램	위기 진단 컨설팅	▶소상공인의 현장진단 및 분석	•전년대비('17년 대비 '18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년 연속('16년 대비 '17년, '17년 대비 '18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 1회(2일)만 지원 •1일 4시간 이상, 300천 원 지원	무료
	연계 지원	▶위기진단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위기진단컨설팅 수진업체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	•연 1회만 지원 •협약기간 2개월 •최대 400만 원 지원	정부 지원금의 10% 및 부가 가치세 본인 부담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검색일: 2019. 10. 21)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분야의 전문 컨설팅 제도를 마련하여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및 영업, 재무 및 회계 분야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체가 컨설팅을 신청할 시 각 분야에 대하여 매칭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지원 기업이 자기부담금을 30% 이상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경영전략 내 컨설팅 외에 고도성장기에 있는 여행업, 해양레저업, 해양관광업 등 실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선별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멘토링 제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제도와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홍보 및 마케팅, 상품개발, 고객 응대, 안전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 전문 컨설팅 제도 마련: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및 영업, 재무 및 회계 분야 전문인력 구축
- 전문 멘토링 제도 마련: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5. 인력지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문인력 부족, 전문인력 양성의 애로사항 등과 관련한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일반관광 분야와는 다르게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 자격은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은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하계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인력유지에 대한 어려움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산·관·학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은 지정 인증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전 분야에 있어 인력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 인력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정규 교육기관의 학과 개설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기존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와 함께 관광 관련 학과는 관광경영, 호텔경영뿐 아니라 컨벤션, 카지노, 크루즈 등 다양한 세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도 해양관광학과, 해양레저학과 등의 새로운 전공 분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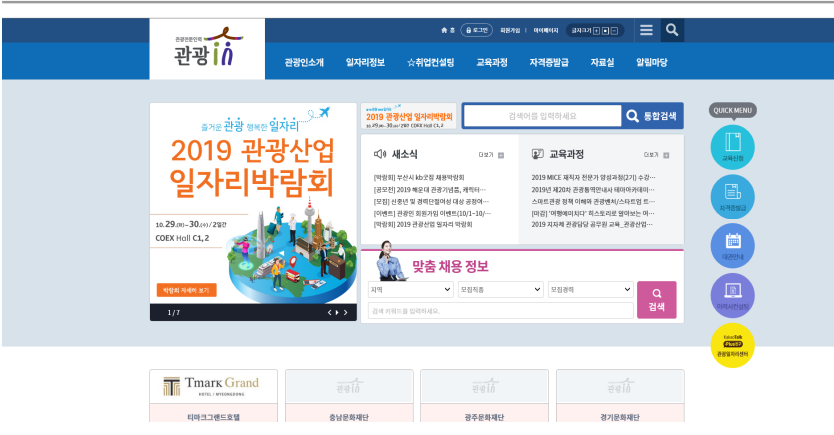
또한 지역대학의 체육학과, 전문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 대학생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비용 지급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지역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십에 참여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향후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청년고용증대세제’⁵²⁾ 정책과 같이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취업 포털 사이트 구축이다.

52)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인적자원의 수급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구직자의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 전문인력 사이트인 ‘관광인’을 운영 중이다.

〈그림 5-8〉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 전문인력 사이트 관광인



자료: 관광전문인력 관광in(검색일: 2019. 10. 22)

웹사이트에는 관련기관과 협회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관련 자격증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및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5-3〉 한국관광공사 운영 관광전문인력사이트 관광인 제공 서비스

제공서비스	내용
일자리 정보	인재찾기, 일자리 찾기, 이력서 컨설팅
교육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조회), 맞춤 교육찾기, e-learning
자격증 발급	발급신청(조회, 수수료 결제), 자격증 확인
자료실	자료실, 시장동향, 관광분야 직업 멘토링
알림마당	새소식, 관광인 뉴스레터

자료: 관광전문인력 관광in(검색일: 2019. 10. 22)

따라서 해양레저관광 분야 취업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산업계와 인력의 연계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양레저관광 분야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추진과제〉

- 산·관·학 연계 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정규 교육기관의 학과 개설 방안 마련: 해양관광학과, 해양레저학과 등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업체 인센티브 제공, 청년고용 세제혜택 마련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취업 포털 사이트 구축: 산업계와 인력의 연계채널 구축

6. 연구기술개발 지원

경제성장과 함께 서비스산업 분야의 R&D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연구기술개발 지원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간 R&D 투자에 대한 논의는 제조업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R&D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6년에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2017년에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2018년에 「서비스 R&D 추진전략(서비스산업혁신 I)」 등을 발표하고 실천과제와 투자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⁵³⁾ 그러나 아직 까지도 서비스산업 분야의 R&D 투자는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R&D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양산업 분야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요성, 해양레저관광서비스의 영세한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53) 정윤정 외(2018), p. 7.

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도입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R&D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R&D의 중요성, 해당 분야의 개념 및 영역 설정, 법·제도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R&D 후보 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관광서비스 분야 R&D는 혁신적인 관광서비스의 개발과 관광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⁵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는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R&D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업계의 R&D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R&D 분야를 파악하여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R&D 기획과제 선정절차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의 연구주제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하고 산업계, 연구원, 학계, 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상품 및 브랜딩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연구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영세한 사업체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4) 문화체육관광부(2013), p. 16.

〈추진과제〉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R&D 개념 및 정책 영역 설정
- 산업계 R&D 수요조사 실시
- 산·관·학·연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기업체 대상 해양레저관광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수행

제3절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유형별로 창업과 사업추진상의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해양레저관광 부문의 사업체 유형은 본 연구의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분류된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유람선 운영업, 크루즈운영업, 낚시터/낚시선박 운영업 중에서 해양레저 대중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마리나업과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및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들 서비스 업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대중화 정책에 따라 「마리나항만법」, 「수중레저법」 등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등장하여 창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람선 운영업이나 크루즈업 등과 비교할 때 소규모 자본투자와 신규 창업이 자유로운 업종에 속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틀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기존의 제도권이나 해양공간 활용에서는 어려운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산업 유형별 정책 추진과제는 사업체 실태조사 및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창업, 서비스 공간, 인력 및 자격기준, 안전관리 환경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1. 마리나업

마리나업은 요트나 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대여와 보관·계류 및 마리나선박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10년 제정된 「마리나항만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5년 도입되었다. 마리나업은 개인소유의 마리나선박이나 타 선박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다. 마리나업 창업의 촉진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간의 확보, 영업 공간의 마련, 서비스 인력 및 자격 기준 부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비스 시설과 공간 확보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 대중화와 마리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마리나업을 위해서는 레저선박과 영업을 위한 선석, 마리나선박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사무실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선박에 있어서는 사업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임차선박이 필요하며 타인의 선박을 이용할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4계절 내내 영업을 하기는 어려우며 신규 사업자의 진출과 퇴출을 고려할 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고 별도의 선석을 확보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마리나항만 내 레저선박 포화에 따른 여유선석 부족과 지역이나 민간 사업자에 의한 별도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마리나항만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영업선석 확보는 신규 사업자 진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리나업의 도입 취지가 해양레저관광의 대중화와 레저선박을 활

용한 창업 촉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레저선박 및 영업선석의 임차기간 설정은 1년이나 단기임대 기간 설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에서 조성하는 마리나항만은 창업 촉진을 위한 영업선석을 별도로 확보하고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공공선석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레저선박 및 선석확보의 제약과 함께 국내 마리나항만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전무하며 레저선박 탑승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관광객 편의제공과 해양레저관광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마리나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홍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개선사항〉

- 마리나업 등록기준 개선을 통한 계절형 사업자 창업 요건 완화로 단기 임대계약조건 마련
- 마리나업 사업자를 위한 공유선석 도입 및 공동 탑승공간 마련
- 마리나선박 탑승자를 위한 공동소유 공간 마련(정보센터), 해양레저 홍보 및 안전교육 공간 확보

〈그림 5-9〉 국내 요트대여업 공간(좌, 중)과 해외 마리나업 공간(우)



자료: 연구자 촬영(촬영일: 2019. 6. 3)

2) 영업내용과 구역 설정

마리나업은 레저선박 탑승자들에게 경관감상이나 선상에서의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업범위는 선박 등록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마리나사업자가 등록한 선박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 또는 유도선에 의한 관광유람선 영업인지에 따라 영업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지역 내 관광유람선이나 도선사업 등에 따른 영업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선박별로 영업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요트나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의 특성상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시간 운항이나 선내에서의 파티 및 음식제공, 도서지역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허가 범위의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도심권 내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의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은 야간 경관감상이나 선상파티, 이벤트 등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해양레저관광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야간 항행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 항행이 가능하고 사전에 신고를 한 경우 원거리 항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마리나업에 도입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24시간 영업은 레저선박의 안전점검과 탑승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리나항만 주변의 레저활동 구역에서 야간 항행장비를 갖춘 선박에 한하여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营业을 허가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야간/일출 경관감상 및 선상파티나 이벤트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레저선박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사항〉

- 마리나선박 야간항행규정 마련: 영업선박의 운항시간 확대, 영업구역 지정
- 선상 파티나 경관감상, 식음료 제공기준의 정비: 선박에서의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유도

〈그림 5-10〉 국내 마리나업 상품(좌)과 해외 상품(우) 비교

운항 정보
TOUR INFORMATION

운항시간: 1시간 ※ 운항시간 추가를 원하는 경우, 프라이빗 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00	13:00	15:00	17:00
18:00	19:00	20:00	21:00

※ 발원시간은 날씨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일기 18시, 19시 동행기 16시, 17시)
 ※ 계절에 따라 첫항차(11시)는 13시로, 마지막 항차(21시)는 20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항차 정보는 내이버 예약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프라이빗 요트동행에는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동행시간 제한 가능합니다.

자료: (좌상, 좌하) 요트탈래; (우상) Charter croatia; (우하) Sailing Directions Internationa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0. 21)

3) 서비스 인력의 확보

마리나업은 선상 레저관광 프로그램의 운영과 선박운항을 위한 항해사와 관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선박 운항에 있어서는 선박의 크기(선박 등록 기준)에 따라 1급 조종면허/요트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 면허나 선장(6급 항해사),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등이 각각 1명이 필요하며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도 필요하다. 레저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선박의 관리를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지만 실제 연안 항해사나 6급 기관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요트나 모터보트를 운항해 본 경험자나 선원 교육기간 동안 레

저선박 운항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서비스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레저선박 운항을 위한 서비스 인력 확보는 크게 2가지 제약요인을 내포한다. 우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만을 가지고 마리나업에 활용하기에는 실제 운항경험 및 영업능력이 부족할 경우 선박운항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반면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증 보유자는 일반 상선이나 어선 운항경험은 풍부하지만 레저선박의 특성 및 운항방식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인력수급 및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다. 따라서 마리나업과 관련된 서비스 인력은 교육과정 및 자격기준에 요트나 모터보트 운항 부분을 포함해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선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운항경험(실무자격 기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정기 안전교육 이수
- 해기사 면허: 교육과정에서 요트나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 운항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 (소형선박 부문)
- 선원인력 포털 마련: 마리나선박 운항인력 수급 및 안내

2. 수중레저업

수중레저사업은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나 장비의 대여, 활동공간까지의 이동,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중레저활동 촉진을 위해 2017년 「수중레저법」 제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었다. 「수중레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교육업이나 장비 대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운송수단의 제약과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

되면서 「수중레저법」이 신설되었다. 한편 수중레저업은 레저활동 공간과 영업을 위한 시설확보 등에서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1) 서비스 시설과 공간 확보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법」 제정 이전에도 ‘리조트’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등을 위한 영업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어촌지역에서는 어촌체험마을사업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중레저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해상이동을 위한 선박확보, 선박 대기공간 및 서비스 공간 마련 등과 관련하여 어촌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압가스를 이용한 공기통 충전 및 안전시설확보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해양레저관광 활동의 다변화 및 어촌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촌과 어항의 유희공간 활용, 어촌지역 관광사업 도입을 통한 어촌소득 다변화가 모색되면서 수중레저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중레저사업은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해중경관과 해양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과 제주도 서귀포의 해중경관지구지정, 경북 울진의 해중전망탑 조성 등으로 수중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중레저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기통 충전이나 안전시설(고압가스 안전 및 검사장비)을 갖추고 이들 시설 주변지역의 수중레저 사업자들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어촌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시설을 수중레저 사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에 이용

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수중레저활동 공간까지의 해상이동을 위해서는 이동 선박의 탑승 및 대기 장소가 필요하지만 마리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초 인프라를 개인 사업자가 별도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항공간 내 여유 선척이나 사로, 유티 창고시설 등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창업 공간 및 선박보관 공간, 탑승대기 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에 수중레저사업을 포함해 어업인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연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함께 정비,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면 어촌지역의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유티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사항〉

- 어촌 유티시설 활용: 어항공간/선박 접안시설의 민간사업자 제공을 통한 수중레저 창업 기회 마련 및 관련시설 관리, 어촌뉴딜 300 사업 활용
-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확대: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해양레저거점 사업을 통한 수중레저 인프라 지원 및 공동 활용
- 어촌체험마을 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수중레저 프로그램 교류: 지역 수중레저 사업자와의 연계

〈그림 5-11〉 일본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수중레저사업장



자료: 연구자 촬영(촬영일: 2012. 5)

2) 영업공간의 확보

수중레저사업자의 창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된 제약요인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어업인과의 마찰이다. 수중레저사업자는 활동을 위한 다이빙 공간의 부족을, 어업인들은 활동을 통한 어장 훼손 및 수산물 절취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 수중레저활동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27건 중 불법 수산물 채취가 14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갈등은 수중레저업 사업자 및 어업인 간의 자율적 협약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중레저법」에도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즉, 어촌계의 체험어장사업에 수중레저활동 공간을 명시하고 수중레저사업자는 어촌계가 지정하는 공간에서 수중레저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며 어촌계의 수산물을 구매하고 숙박, 식당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와 지역어촌계의 협력모델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어촌뉴딜 300 사업이나 어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을 확대하여 인프라 시설 지원 이외에도 실제 해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역별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중레저사업자의 영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5) 경기일보(검색일: 2019. 10. 18)

〈개선사항〉

- 수중레저활동 공간 지정: 어촌계 유어장 지정 및 다이빙사업자와의 자율적 협약 확대, 자율적 협약 확대 지역에 대한 어촌관광지원사업(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 뉴딜 300 사업) 우선 지원
- 해중경관지구 지정: 우수 해중경관 확보 지역에 대한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다이빙포인트 확대
- 다이빙포인트 해상 무어링 시설 지원: 해중경관지구에 대한 해상 무어링 부이 시설 지원 및 안전표지판 지원

3. 수상레저업

수상레저사업은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는 사업으로 수상레저사업자는 하천이나 해변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최근 해변이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서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교육을 위한 창업이 부산, 강원, 제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핑업은 마리나업이나 수중레저업과 달리 사업자의 선박 확보, 장비구매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해변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장비임대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서비스 및 영업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1) 서비스 시설과 공간 확보

수상레저사업 중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관,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심과 인접한 해변이나 해수욕장을 영업 공간으로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은 배후 주차공간이나 해변에 임대시설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유수면의 점사용이나 사용허가를 얻는 과정이 용이하지 못하며 임시 서비스 시설의 설치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우수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은 우선 초기 창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가능한 공간과 허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해변이나 해수욕장에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및 장비 보관을 위한 영업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인력이 함께 배치되도록 하여 일반 해수욕과 수상레저가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이나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수상레저장비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수욕장 운영주체가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사항〉

- 해변/해수욕장 수상레저서비스 공간 확보: 해수욕장 정비 및 해변 편의시설 설치사업 지원
- 해변/해상 공유수면 이용정보 제공: 해수욕장 관련 정보 사이트 활용을 통한 공유수면 이용 및 점사용 절차 안내

〈그림 5-12〉 국내 해변 서핑서비스 공간과 해외 서핑대여 공간(일본)



자료: 연구자 촬영(촬영일: 2019. 6)

2) 영업공간의 확보

수상레저사업은 해상 레저활동 구역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상레저업 중 서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업자 인터뷰 분석 결과 레저활동 공간에 대한 지역 상권과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활동자 간의 마찰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해양레저관광 행태 변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임대 외에 서핑이나 카누, 카약 등을 위한 영업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당사자 간 인식하고 이들 활동을 위한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은 파도와 바람, 수온 등의 영향을 받으며 기상변화에 따라 영업조건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별 해변에 대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사항〉

- 수상레저 영업공간 확보: 서핑,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전용 해변 지정, 해상 안전구역 표기해변
- 해안 기상정보 시스템: 수상레저 기상정보(바람, 수온) 및 풍랑정보 제공, 풍랑경보 및 안전/구조 정보

〈그림 5-13〉 해외 수상레저기구 영업공간·구역과 기상 정보(미국)



자료: 연구자 촬영(촬영일: 2015. 3)

4. 크루즈운영업

국내 크루즈관광시장 활성화 정책은 2011년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크루즈방문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항지의 관광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루즈 홍보·마케팅, 제주와 부산, 인천지역에 크루즈터미널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관광서비스 여건 개선 등 크루즈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 등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크루즈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크루즈산업법」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국내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행사 참석 및 개최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14〉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규모: 대경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간: 2018~2022년
- 양성분야: 선내 데스크, 식음료 및 객실 프론트 오피스, 엔터테인먼트 등 크루즈 서비스 분야 중간관리자 양성
- 교육방안: 기초소양, 크루즈 운영 실무, 외국어 교육, 선원교육, 현장학습 및 해외 교육
- 추진체계: 해양수산부는 양성기관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관리,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정 및 고보기금 지원
- 지원규모: 고용보험기금 지원(1인당 약 8백만 원)

자료: 대경대학교 관광크루즈승무원학과(검색일: 2019. 10. 21)

국내 크루즈시장은 중국의 단체관광객 제한조치의 여파로 2017년 이후 크게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크루즈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세와 함께 국내 관광시장 경쟁력 강화정책에 따라 향후 크루즈관광시장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크루즈운영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크루즈관광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단기지원정책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승무원 양성과 함께 크루즈 전담 여행사 인력, 통역인력, 크루즈 선용품 공급 관련 서비스인력 등의 양성을 통해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크루즈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의 지속적 추진, 국내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지원,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등이 요구된다.

〈개선사항〉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승무원양성과 함께 크루즈전담 여행사, 크루즈선용품 업체, 크루즈관광 통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 국내 크루즈 시장수요 확보: 크루즈홍보사업 추진, 국내 연안크루즈관광상품 개발 지원,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5. 낚시관광업

최근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바다낚시는 활동공간을 기준으로 자연해안선이나 갯바위, 해상낚시공원에서의 활동이나, 선박에서의 낚시활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선박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업으로는 어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과 유람선을 이용한 유선업으로 구분되어 이용자들은 낚시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따라 낚시활동을 즐기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박을 이용한 바다낚시 활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선내 음주, 영업구역 위반, 수산자원 남획 등의 문제가 언론에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낚시관광에 대한 이용문화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서비스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낚시관광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낚시관광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낚시관광을 보다 대중화, 고급화하도록 하고 낚시관광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선상낚시 예약, 장비임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낚시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한 낚시환경 구축과 수산자원 관리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개선사항〉

- 관광낚시업 육성: 낚시관광 사업자 교육(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낚시관광 콘텐츠 개발(선박 예약, 장비임대), 낚시교육 매뉴얼 작성
- 낚시관광 캠페인: 낚시안전 교육, 수산자원 보호 캠페인, 바다낚시 대회 개최

6. 기타사항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창업 촉진과 함께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활동 행태 및 트렌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해양레저관광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해양레저기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경우 안전 문제가 우선시되어 금지행위로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

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활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해양레저관광활동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협회나 업계에 제공하고 이것이 창업으로 연계될 경우 산업분류 및 관련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 ‘확대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통하여 관광산업 지원정책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관광시장은 주52시간 근무제도 시행,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레저관광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업종이 신설되고 분화되는 등 산업이 고도화되었으나 해양레저관광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위한 정보를 얻거나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해양레저관

광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지원정책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정책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정책 및 해양레저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해양레저관광 수요 트렌드 및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정책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 인력, 기술, 판로, 창업, 산업적 특성에 맞춘 법·제도적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지원 정책 또한 일반적인 산업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에 한정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지원정책은 ‘해양관광벤처 창업지원 사업 공모전’ 등 창업과 경영지원에 편중되어있어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지원 규모 및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자료와 해양레저관광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양수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사업체는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업체별 특성, 강한 계절성 등으로 인하여 인력, 금융, 홍보 및 마케팅,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23.7%로 나타났고, 이

중 대부분이 금융지원과 시설 및 공간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데 비해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성장 잠재력에 부합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문별·성장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함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타 부처와의 협업,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지원 정책의 부문별·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으로 창업, 금융, 판로, 경영, 인력,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으로 산업의 유형별 창업 및 서비스 활동 공간, 인력 및 자격기준, 안전관리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 및 협업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같은 다부처 협력·통합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문별·성장단계별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산업 통계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의 수요 증가, 트렌드 변화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산업 특수분류 등 관광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를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다양한 산업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부처의 소관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마리나 서비스업, 수중레저사업, 크루즈산업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 신규 업종은 개별법별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전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확보는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재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부재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연·정이 정례적인 회의를 마련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의 부문별·성장단계별·유형별 산업지원 정책은 아래 <표 6-1>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분류체계 마련, 창업 전담팀 신설, 정책자금 확대 및 민간 투자유치 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의 거점 공간 확보 및 창업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여건상 우선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 및 융자방안 마련, 레저장비에 대한 담보설정 방안 마련, 기금 조성, 민간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해양레저관광 브랜드 개발, 정부 인증 브랜드 개발, 국내·외 산업박람회 확대 및 참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 컨설팅 제도, 우수 해양레저관광기업을 활용한 멘토링 제도, 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산·관·학 전문인력 양성, 정규기관 교육과정 개설, 지역 대학 인턴십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해양레저관광 취업 포털사이트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기술개발 지원으로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의 R&D 개념 및 정책 영역 설정, 산업계 R&D 수요조사 실시, 산·관·학·연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기업체 대상 해양레저관광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수행 등이 필요하다.

유형별 산업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사업공간 및 시설 마련, 영업활동 공간 확보,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마리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한 레저선박 임차기간 축소, 선박 항행규정 정비,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 다음으로 수중레저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촌 유희시설의 활용,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확대, 수중레저활동 공간 및 해중경관지구 지정, 다이빙포인트에 대한 해상무어링 시설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상레저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변/해수욕장 내 수상레저서비스 공간의 확보, 공유수면 이용정보 제공, 영업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크루즈 운영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국내 연안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지원, 국적크루즈선사 육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낚시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낚시 활동자 및 낚시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문화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업종 외에 향후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신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제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6-1〉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제시

구분	내용
부문별·성장단계별 산업 지원 정책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업종 분석 및 산업분류체계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 전담팀 신설
	정책자금 확대 및 민간 투자유치 방안 마련
	기업 상담 창구 상시 운영을 통한 경영지원 전략 마련
	해양레저관광서비스 기업 거점 공간 확보
	해양레저관광서비스 분야 창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구분	내용
	자금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인력지원
	연구기술개발 지원
유형별 산업지원 정책	<div>마리나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업 등록 기준 개선: 계절형 창업 활성화 유도 → 「마리나항만법」 개정(레저선박 임차기간 축소) • 마리나항만 공유선석 확보: 공공마리나항만 내 창업활성화 유도를 위한 영업 선석 확보 → 거점형 마리나항만/마리나비즈니스터 조성사업 포함 • 마리나업 창업공간/서비스 공간 정비: 공공마리나, 요트장 등 레저선박 탑승자 서비스공간 확보, 해양레저/안전정보 교육 공간 제공 → 거점형 마리나항만/어촌 마리나역 조성사업 포함 • 마리나선박 항행규정 정비: 마리나관광 프로그램(야간/새벽/선상파티) 운영에 따른 선박 항행규정 정비 → 「마리나항만법」 정비를 통한 선박 항행규정 정비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인력 확보: 마리나선박 운항, 관광서비스인력의 자격 기준 정비를 통한 인력확보 여건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직원법」상의 항행인력에 대한 레저선박 운항교육 프로그램 개선
수중레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레저 기반시설 확충: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충전시설, 선박대기공간의 활용방안 모색 → 「수중레저법」 활용(자율적 협약)을 통해 어촌유희시설 활용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뉴딜 300 사업 내 수중 레저시설 정비 수중레저공간 정비: 수중레저활동 공간 및 해상 정박공간 마련을 통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조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확대,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레저활동 공간 지정
수상레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 서비스공간 확보: 수상레저장비의 탑승, 임대, 서비스공간 제공을 위한 공간임대 조건 개선 → 「해수욕장법」 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전용 비치 지정 및 전용공간에 따라 해수욕장 정비사업 추진 수상레저 활동공간 및 안전정보 제공: 해수욕 이외에 수상레저활동 구역지정 및 기상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 해수욕장 안전정보 사이트 개선
크루즈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승무원 양성사업 확대를 통한 크루즈 전담 여행사/선용품 업체/통역인력 양성사업 추진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양수산부) 확대 개편 크루즈홍보사업, 연안 크루즈상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낚시관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관광업 육성: 낚시관광 사업자 교육(서비스/안전 교육), 낚시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 해양수산부 낚시전문교육사업 확대, 해양관광콘텐츠 발굴 사업 확대 낚시관광 캠페인: 낚시안전/수산자원 보호/바다낚시대회 확대 지원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레저활동 트렌드 변화 및 신규 해양레저장비 기구 정보 제공 신규 해양레저서비스 창업에 따른 규제정보 및 창업 안내 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경종수·이보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업성장단계별 차별화 방안」, 『중소기업연구』, 32(4),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7. 12. 1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 서 찾겠습니다」, 2018. 7. 1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2019. 4. 2.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2011.

기획재정부, 「2019년도 기금현황」, 2019.

김경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지원 정책효과 연구: 기술혁신 정부지원 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14, 28(2).

김기준, 「21세기에도 산업정책은 필요한가?, OECD 산업혁신위원회 워크숍 주요 내용요약」, 지식경제부, 2011.

김덕기·김현주,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김상욱,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특징 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1, 11(1).

김용재·염수현,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3.

류광훈·김희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서비스 R&D 중기 기획과제 개발 연구」, 2013.

_____, 「국민여행실태조사」, 2017.

_____,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2018a.

- _____, 「국민여행실태조사」, 2018b.
- _____, 「2017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c.
- _____,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III)」, 2018d.
- _____, 「관광진흥개발기금 2019년 상반기 용자지원지침」, 2018e.
- _____,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보고서」, 2019.
- 박상원,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및 지원체계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
- 변대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비스산업 정책 고찰과 핵심기술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연구, 2018, 8(1).
- 부산관광공사 보도자료, 「부산관광의 미래를 위해 스타트업!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 2019. 8. 13.
- 산업연구원,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업 정책연구: 산업별 혁신과 경쟁」, 2019.
- 안승구·이선명·이관훈·김권식,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 안희자, 「관광 창업기업 육성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임소진, 「IPA 분석을 통한 성장단계별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장정인·정수빈·김태진·김성은·이현동·고병욱,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KMI 동향분석』, 제133호, 2019. 8.
- 정윤정·정성문·김대호·김병진, 「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 창업진흥원,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2013a.
- _____,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2013b.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201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레저 실태조사』, 한국어촌어항협회, 2016.

____, 「해양관광 실태 자체조사」, 201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
2019. 5. 14.

해양수산부,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

____,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03.

____,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4.

____,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0.

____,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2013.

____,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2017; 2018; 2019.

____, 「2018 주요통계」, 2018.

____, 『해양관광 이용실태조사』, 2018.

____, 「해양관광 관련산업 및 해양관광자원조사」, 2019a.

____,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19b.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2018.

홍장원·장정인·윤인주·이정아, 『해양레저관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국외 문헌〉

Aiginger, K., Industrial Policy for a sustainable growth path, OECD Policy Paper, 2014.

NOEP, State of the U.S. Ocean and Coastal Economies. 2016.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각 연도.

OEC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l Strength, Global Reach, 2000.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Pelkmans, J., European Industrial Policy, Bruges European Economic Policy Briefings, 2006.

UNWTO, UNWTO Tourism Highlights 2018.

Warwick, K., Beyond Industrial Policy: Emerging issues and new trends. OCE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2, 2013.

〈인터넷 자료〉

경기일보, “스쿠버로 멍게 잡다 덜미…해경, 불법 수중레저 27건 적발(2019.8.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460> (검색일: 2019. 10. 18)

관광기업지원센터, <https://www.tourventure.or.kr/biz/counsel/homepage/list?level=2&menuNo=6&searchType=content&searchWord=%ED%95%B4%EC%96%91> (검색일: 2019. 10. 17)

관광벤처사업, <http://www.tourventure.co.kr/main.kto> (검색일: 2019. 5. 8)

관광전문인력 관광in, <https://academy.visitkorea.or.kr/mainHome.do> (검색일: 2019.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5. 8)

내일신문, “[이제는 ‘관광산업’이다 | ② 떠오르는 ‘융복합 관광산업’] 혁신적 관광벤처 기대 모은다… 문체부 육성사업 500개 발굴(2019.2.2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4808 (검색일: 2019. 5. 8)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http://www.agrocrowd.kr/> (검색일: 2019. 10. 18)

대경대학교 관광크루즈승무원학과, http://dkcruise.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 (검색일: 2019. 10. 21)

베니키아 Best Night in Korea BENIKEA HOTEL, https://benikea.com/file/joinguide/benikea_introduce_kor.pdf (검색일: 2019. 10. 25)

벤처확인·공식시스템,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
(검색일: 2019. 10.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rtbusan2/221570227332>
(검색일: 2019. 10. 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1.kmdc> (검색일: 2019. 10. 21)

요트탈래, <https://www.yachttale.com/publictour> (검색일: 2019. 10. 2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검색일: 2019. 5. 8)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검색일: 2019. 5. 8)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2013년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A_C30005&vw_cd=MT_STOP_TITLE&list_id=142_MT_BTITLE_C_03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STOP_TITLE (검색일: 2019. 9. 20)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ims.go.kr> (검색일: 2019. 5.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8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8S&conn_path=I2 (검색일: 2019. 9. 20)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개인사업체’,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cd=SL3945 (검색일: 2019. 9. 20)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단독사업체’,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4032&sT=단독사업체 (검색일: 2019. 9. 20)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검색일: 2019. 5. 8)

201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http://www.seastartup.kr/bbs/bbs_list.php?code=gallery (검색일: 2019. 7. 22)

해양수산부, <http://coast.mof.go.kr/coastNews/board/noticeBoardView.do?se>

q=6787(검색일: 2019. 10. 18)

Charter croatia, <http://chartercroatia.net/provide-services-yacht-charter-holiday> (검색일: 2019. 10. 21)

NAICS, <https://www.census.gov/eos/www/naics/> (검색일: 2019. 5. 8)

Oxford Dictionary of Economics,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198759430.001.0001/acref-9780198759430-e-1576?rskey=H61Jo5&result=1>(검색일: 2019. 5. 8)


Sailing Directions International, www.sailingdirections.com/crewed-charter-yacht/sea-boss (검색일: 2019. 10. 21)

Stats NZ(2017). Tourism satellite account: 2017.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tourism-satellite-account-2017> (검색일: 2019. 5. 8)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wttc.org/economic-impact/> (검색일: 2019. 5. 30)

부록

1. 설문조사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실태조사

2019061402-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실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고자 하여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 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 7~8

설문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061-797-4727)		
조사문의 사항	㈜리서치앤리서치 김원미 차장 (02-3484-3087)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	--------------	--------------	-------------

※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이란 관광객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및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공받게 되는 유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SQ1	귀사는 현재 해양관광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 종료
SQ2	귀사가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해수면입니까? 내수면입니까?	① 해수면 ② 해수면 + 내수면 ③ 내수면 ※ 설문 종료
SQ3	귀사는 다음 중 어떤 산업에 해당되십니까? (정확히 분류하기 힘들다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마리나업 ② 수중레저업 ③ 수상레저업 ④ 유람선 운영업 ⑤ 크루즈 운영업 ⑥ 낚시터 운영업 ⑦ 낚시선박 운영업 ⑧ 기타수산레저관광업

PART A. 사업체 운영현황

Q01. 다음은 귀사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1. 사업체명			2. 사업체번호	□□□□ - □□ - □□□□□□	
3. 대표자명			4. 사업체 설립년도	□□□□□□ 년	
5. 대표전화	() - () - () - () - () - ()		6. 현재 업종 시작년도	□□□□□□ 년	
7. 소재지	_____ 시 _____ 도 _____ 군 구 _____ 읍 면 동 (이하 주소:)				
8. 조직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외법인 ④ 비법인단체		8-1. 벤처기업 인증 ① 인증 ② 미인증 8-2.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점(점), 영업소 등 * 8-1, 8-2는 8. 조직형태 ②, ③ 응답자만 응답		
9. 대표자 경영형태	① 창업 ② 동업 ③ 가업승계 ④ 인수 ⑤ 전문경영인 ⑥ 기타()				
10. 대표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1. 대표자 연령	□□□□□□ 세	
12. 연간 영업 개월 수	()개월, ()월부터 ()까지				

Q02. 2018년(2018년 1월~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귀 사업체의 사업내용(서비스)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 (합계 100%)
해양레저관광산업 중 주사업		%
해양레저관광산업 중 부사업		%
해양레저관광산업 외 기타사업		%
합계		100%

Q03. 2018년(2018년 1월~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귀 사업체의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고용 인원, 최성수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만 몇 명인지 응답 부탁드립니다.

	① 대표자	② 상용 근로자	③ 임시 및 일용 근로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⑤ 기타 종사자	합계 (①+②+③ + ④+⑤)	월평균 종사자수
(1) 연간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최성수기에만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연간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연간 고용하시는 인원의 총합계입니다.

예) 2018년 7월에 5명 고용, 8월에 10명 고용, 이 중 중복은 5명 = 5명 + 10명 - 5명 = 10명

Q03-1. 귀사의 대표와 상용 종사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____년 ____개월

Q03-2. 귀사의 최근 3년간의 인력 수급 상황과 향후 인력 수급 전망을 말씀해주세요.

구분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최근 3년간 인력 수급 상황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인력 수급 전망	①	②	③	④	⑤

Q04. 2018년 한해, 귀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창업 시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비용 중에 인건비와 홍보비는 총 영업비용 중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단위:천)

구분	현액	백액	십액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2018년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액					
(2) 영업비용						
①인건비	급여, 복리후생, 퇴직금 등 인건비성 비용					
②재료/장비구입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성격의 재료구입 비용					
③임차료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비용					
④세금과 공과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합계					
⑤홍보비	영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홍보 마케팅 비용					
(3) 영업이익	(1)매출액-(2)영업비용					
	현액	백액	십액	억	천만	백만
(4) 귀사 창업 시 소요 비용						

Q05. 귀사는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0% 이상	-50%	-40%	-30%	-20%	-10%	2018년 동일	+10%	+20%	+30%	+40%	+50%	+60%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Q13. 귀사가 지원받은 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의 사업입니까?(중복응답)

- ① 해양수산부 ② 문화체육관광부 ③ 중소벤처기업부
④ 산업통상자원부 ⑤ 해당 지자체 ⑥ 모름 ⑦ 기타()

Q14. 귀사가 지원 받은 사업 종류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참여하여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1. 구분	2. 경험유무	3. 지원 횟수	4.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1) 창업 관련 교육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2) 시설 및 공간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3) 컨설팅 및 멘토링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4) 금융지원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5) 판로/마케팅/홍보 등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6) 네트워크 구축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회	①	②	③	④	⑤

Q15. (지원을 못 받은 사업체만) 귀사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②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③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 ④ 지원사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선정평가 요인이 까다로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⑥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없어서
⑦ 지원받아도 금액 등 혜택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⑧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필요성이 없어서
⑨ 기타 ()

Q16. 현 정부의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기 창업단계 ② 성장단계 ③ 성숙단계 ④ 안전성장단계 ⑤ 구조조정단계

Q17. 앞으로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기 창업단계 ② 성장단계 ③ 성숙단계 ④ 안전성장단계 ⑤ 구조조정단계

Q18. 다음 정책 중 귀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2순위()→3순위()

정책	내용
① 자금지원	자금 및 대출 지원, 보증지원 등
②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육성, 창업 유도/발굴, 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재창업 지원, 창업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 R&D 및 협력연구 지원, 기술보호 등
④ 수주확대(판로) 지원	내수확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확대, 전동시장 활성화, 경쟁입찰/계약 지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
⑤ 세제지원	세금 감면 등
⑥ 경영지원(회계, 법률 등)	세무 회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법률가 자원, 전문가 경영상담 등
⑦ 인력지원	기업간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 및 주택공급 등 지원, 대학연계 인력 양성 및 취업 촉진 등
⑧ 해외시장 확대지원	해외진출 사전지원,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⑨ 기타 ()	확인증 발급제도 및 선정제도, 기업간 공유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등

Q18-1. 앞으로 귀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위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 () ()

Q19. 다음은 귀사의 경영전략 및 조직의 문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우리 업체는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와 시설을 근대화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경비절감과 원가통제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새로운 시장개척보다는 고정비 절감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우리 업체는 경쟁사 대비 서비스 및 상품의 차별화를 중요시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6) 소비자와 경쟁자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우리 업체는 고객 욕구를 파악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경쟁사에 비하여 다양하고 많은 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 우리 업체는 참여와 친화를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 우리 업체는 집단의 사기와 응집성을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 우리 업체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 우리 업체는 상호협조 및 신뢰감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우리 업체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 우리 업체는 엄격한 입재과정을 통한 전체의 통솔과 통제를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 우리 업체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우리 업체는 문서화, 책임, 정보관리를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Q20. 다음은 귀사의 결월성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우리 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우리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향상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 우리 업체의 지출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4) 우리 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5) 우리 업체를 찾는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7) 고객들의 불만이 감소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우리 업체에 대한 고객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9)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 우리 직원들의 직무몰입도가 향상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중소기업벤처부 분야별 지원 사업

1. 관광 부문

1) 금융분야

〈표-1〉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자금 및 대출 지원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협약보증	• 최근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기업에게 저금리 금융지원	2,000억 원
	장기분할상환해지 협약보증	• 생업이 어려운 창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에 대한 10년 만기 장기 분할상환 지원제도	1,650억 원
	청년고용특별자금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2,475억 원
	성장촉진자금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에 대한 융자 지원	3조 7,200억 원
	창업기업자금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지원	2조 1,300억 원
	투융자복합금융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2,000억 원
	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1,8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8,800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 지원	2,300억 원
	긴급경영안전자금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1,000억 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임대보증금 지원	2018년 지원금액 565백만 원 ('18.12기준)
	일반경영안전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5,225억 원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전용 자금	•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200억 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3,000억 원
	성공불용자 (생활혁신형 창업사업 연계)	•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450억 원
	재도전특별자금	•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현 제도상 자금 지원 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100억 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지원	1조 원
보증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지원	3,733억 원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	46조 원 (보증잔액)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 발급	20.9조 원 (보증잔액)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 제공	12조 원 (보증공급)/ 21.5조 원 (보증잔액)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 지원	21.4조 원 (보증잔액)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전용보증 지원	150억 원
	플러스 모바일 보증	• 생업유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 지원	11.7조 원 (보증공급)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종결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한 후 보증지원	100억 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11.7조 원 (보증공급)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 제공	1.05조 원 (보증공급)/ 7,779억 원 (보증잔액)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20조 원 (보험인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
구자 정리

2) 창업분야

〈표-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인력 양성	청소년비즈쿨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76억 원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기술 교육 제공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지원	102억 원
발굴· 육성 및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시제품개발, 제품판매 등 사업화과정 및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	922억 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활동 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및 육성하여 여성의 창업 촉진	-
	장애인창업육성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우수아이템 발굴·포상,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20억 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170억 원
	대한민국 창업리그	•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후속지원	28억 원
	K-스타트업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 종합 제공	-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	1,621억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창업 지원	48.8억 원
	메이커문화 확산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의 창작활동과 메이커 모임,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	6,187백만 원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1,010.5억 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 대상의 융자 지원	발굴 19.07억 원/ 연계자금 450억 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3억 원
	아이디어 온라인 멘토링	• 국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온라인상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	44.3억 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및 R&D 자금 등 연계지원	100억 원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 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지원	61.64억 원
성장 및 활성화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 투자회사 등록 및 사후관리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24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창조경제혁신센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379억 원
	엑셀러레이터 등록제도	• 유망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전문 보육 및 투자역량을 갖춘 엑셀러레이터의 등록을 지원	-
	포스트 팁스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우수 졸업 TIPS 창업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 원 지원	100억 원
	실전창업교육	•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교육과 MVP제작 비용 등 지원	57억 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 지원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 지원(리모델링, 운영비, 보육역량강화)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	142억 원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육성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	6.5억 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사무공간 지원, 데모데이, 상금 등 지원	-
	개인투자조합 등록 제도	•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는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	-
재창업	창업도약패키지	•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등 지원	840억 원
	재도전성공패키지	• 재도전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재기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178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재창업패키지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에게 교육 및 멘토링 지원	75억 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기 컨설팅, 장려수당 등 지원	327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닦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제공에 대한 지원	-
기반 구축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기술 등 기업의 각종 경영·기술애로에 대한 무료 상담제도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의 등록 및 변경을 지원	-
	스타트업 파크 조성	•다양한 창업혁신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클러스터 조성	126억 원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업종별 창·폐업, 인구, 집객시설 등 53종의 상권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정보 제공	-
	창업에듀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28.95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3) 기술분야

〈표-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일부지원	38억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1,588.5억 원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사업	• 중소기업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21억 원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43.8억 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과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및 자금 지원	194억 원
	재도전기술개발사업 _사업전환R&D	•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사업전환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	8억 원
	소상공인제품·기술 가치향상	• 소상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	39.2억 원
R&D 및 협력 연계 지원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 R&D 지원	85억 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R&D 기획·개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53억 원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과 R&D 활성화 지원	123억 원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101억 원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바우처로 지원	242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 R&D 지원	291억 원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120억 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바우처	• 지역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한 후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업 R&D 서비스 지원	203억 원
	연구기반활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및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원	125억 원
부리 기술	부리기업 지원사업_부리기술 전문기업지정	• 핵심 부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부리기업을 부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
	부리기업지원사업_부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현장중심형 부리기술아카데미),	• 현장의 니즈, 기업별 업무환경, 개별 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부리기술, 자동화 설비운영, 기술보호 등) 제공	-
	부리기업지원사업_부리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부리기술 코칭)	• 부리산업 코칭전문가(교수, 연구원, 부리기술 명장 등)의 핵심공정별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재직자의 기술 역량 강화	4억 원
	부리기업지원사업_부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지원	20억 원
기술 보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_기술보호 상담·자문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_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 운영	-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_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해결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해결비용(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
	기술보호 역량강화 _기술지킴서비스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를 위해 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등 지원	-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지원과 보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장애인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0.8억 원
스마트 공장 및 신기술 지원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40억 원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3,125억 원
	중소기업스마트화 역량강화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전략수립,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문 컨기관의 컨설팅·자문지원	30억 원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지원	•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위해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로봇 활용교육 등 지원	90억 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경영혁신 교육·활동을 통한 적립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활용되는 마일리지 제도운영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
구자 정리

4) 인력분야

〈표-4〉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 CEO 간의 네트워크 지원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 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 지원	-
	여성최고경영자과정	•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한 분야별 전 문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여성기업지원 전문인력매칭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및 상담·교육 등 지원	-
제도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소기업 재직 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 으로 공급	-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 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 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 책성 공제 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 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 성 공제 지원	-
인력 양성 및 유입 촉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 생 발굴,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 심의 직업교육,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지원	338.5억 원
	기술사관 육성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취업연계 등 지원	2,472백만 원
	중소기업계약학과 사업	• 대학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학위과정 을 설치하고 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 지원	114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 우수기업 발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홍보 등 지원	2억 원
	대학연계 중소기업기술인력 양성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기업-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28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5) 수출분야

〈표-5〉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해외 진출 사전 지원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지원	106.5억 원
	수출바우처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홍보·광고 등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	985억 원
	수출바우처사업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985억 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후,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을 우대 지원	-
	수출 컨소시엄 사업	•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 간의 수출 컨소시엄 구성과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155.5억 원
해외 진출 지원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지원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스타기업 육성, 온라인수출 교육 강화 및 공동물류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	381억 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참가 등을 지원	115.75억 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
구자 정리

6) 내수분야

〈표-6〉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기업부 내수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교육 및 컨설팅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위기대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해당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연계 지원	64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반형 맞춤형 서비스 지원	865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역량 강화	•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35억 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지원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납품업 지원센터 설치, 교육·판로정보 제공·MRO구매 시스템 등 지원	5억 원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체계, 브랜드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멘토링, 홍보 등 지원	-
	백년가계육성사업	•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 소상공인(소기업) 발굴 및 추가성장을 위한 컨설팅·교육·금융 등 지원	-
홍보· 마케팅	성능인증제도	•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에 대한 인증 제도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증 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별 연계, 홍보 및 브랜드 재정비 등 지원	-
판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 지원,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및 입찰실무교육 지원	-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TV홈쇼핑판매지원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 발굴 및 홈쇼핑 입점 지원	-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공인의 국내 외 판로(온라인몰, 전시회, 마케팅, 인 중 등) 지원	80억 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 신제품 시범구매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약 정한 금액만큼 해당제품 구매지원	-
	정책매장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정책매 장(아임쇼핑)'을 통해 창업 및 우수기 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 지원	31억 원
	온라인시장진출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쇼핑몰, 홈쇼 핑 등) 진출을 위한 판매관리·시장연 계·홍보 등 지원	20억 원
	오프라인기획전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망 및 지자체 등과 연계, 특별판매 전 개최 등을 통한 판촉·홍보 지원	6억 원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A/S 시스템을 제공하여 기 업의 판로확대 지원	63억 원
	공영홈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 위 주로 편성된 TV홈쇼핑에 대한 입점 지원	-
	장애인기업 국내외 국제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용 지원	1.3억 원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 른 입찰정보 제공과 온라인 전시물을 통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	0.5억 원
	마케팅대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홍보강화, 비즈니스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전시 회 개최	8억 원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 팅 및 해외파견 지원	2.4억 원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홈쇼 핑 입점 지원	75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지원 및 운영	• 장애인기업 경쟁력 제고 및 공공구매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판로 컨설팅 및 기업인증 지원	2.3억 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 품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	-
	혁신제품 유통플랫폼 (아임스타즈)운영	•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 발굴·전시·데이터베이스화하는 유통 채널 제공	8억 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 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 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지원	254억 원
전통 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 과 노후시설의 개선 지원	1,237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 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 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 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1,424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 여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 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 제공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 지원	91억 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 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바우처 지원	-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시장)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시장 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및 종합컨 설팅 지원	361억 원
	청년물조성 및 활성화지원사업	•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볼 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물 조성에 관한 지원	신규조성 37억 원/기존청년물 지원 37억 원 /도약지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27억 원/ 협력지원 16억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	2,458백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132억 원
경쟁 입찰· 계약 지원	중기간 경쟁제품·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입찰하는 제도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
	적격조합 확인제도	•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 지원	-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 가격 5,000만 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반 및 인프라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지원	-
	나들가게 육성	• 자생력 있는 동네슈퍼를 위해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	36억 원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작 비용 지원	5.6억 원
	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전시장·장비실·창고·교육장 등의 공동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115.2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상권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주변환경개선, 테마공간 조성 등 지원 	5년간 8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7) 기타분야

〈표-7〉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분야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상담 지원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기업마당)	•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기업애로사항 상담 등 지원	-
	중소기업움부즈만 제도	•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움부즈만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처리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담·연계 등 지원	-
	거래공정화	• 불공정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상담 등 지원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 기업경영 애로를 겪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구조개선·회생절차 등 진로 컨설팅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전문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11.5억 원
	중소기업회생컨설팅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전문가 상담 지원	25억 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에게 특화개발·규제대응·정보보안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63.42억 원
	역량Jump-up프로 그램	•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점프업컨설팅 및 연계 지원	2억 원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마케팅·점포운영·경영진단·세무·수출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78.8억 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1억 원
	소상공인경영교육	•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문기술·경영개선훈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44억 원

구분	사업명	내용	규모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소공인의 교육·컨설팅·특화사업 등 지원	129.5억 원
	이노비즈 확인제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발굴·선정하여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
	메인비즈 확인제도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을 발굴·선정하여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 녹색경영 선도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을 발굴·선정하여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장기간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기업홍보 지원	-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지원하는 제도	-
	성과공유제	•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	-
	동반성장 개방형플랫폼 구축·운영	• 대·공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 정보 공유·참여기회 제공	-
	벤처기업확인제도	•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요청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육성을 지원	-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제로페이)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공	6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2. 해양레저관광 부문

1) 경영분야

〈표-8〉 해양수산업 주관 중소기업부 경영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경영-컨설팅	해양수산업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R&D의 성공률 제고와 이를 통한 해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업 실용화 R&D 사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컨설팅 지원 -수요조사에 기반하는 R&D 기술연계 컨설팅 우선 지원 -경영, 마케팅, 투자 등에 대한 전문가 연계 지원 병행	-해양수산업(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 중 해양수산업실용화 과제*를 수행 중인 모든 사업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 수산업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경영-컨설팅	2016년 해양수산업 분야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업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	-신청 대상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본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지원 대상: 해양수산업 신산업 분야 • 지원대상분야 예시: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수산양식,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서비스, 선박평형수, 마리나, 해양헬스케어, 친환경 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나노, 그 밖에 유망 해양수산업 신산업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경영-컨설팅	2016년 2차 해양수산업 분야 투자희망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업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신청 대상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본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하 의 신청금액 내에서 최대 38백 만 원 지급	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 (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지원 대상: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 지원대상분야 예시: 해양바이 오, 해양심층수, 수산양식, 해양 에너지, 해양플랜트서비스, 선 박평형수, 마리나, 해양헬스케 어, 친환경 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나노, 그 밖에 유망 해양수 산 신산업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경영- 컨설팅	2017년 투자희망 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 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 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 (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경영- 컨설팅	2017년 2차 투자희망 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 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 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 원 이 내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 (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경영- 컨설팅	2017년 3차 해양수산 분야 투자희망 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 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 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사업	건 기업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경영-컨설팅	2017년 4차 해양수산 분야 투자희망 기업 지원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 (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제주] 2017년 4차 해양수산 기업 비즈니스 모델 시범적용 사업 (수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제주지역 기업 간 업종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주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매출, 고용, 수출, 생산성 등 증대하기 위해 해양수산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제주 해양수산기업 회원사 및 제주도 내 해양수산관련 기업 -협업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1개사 10,000천 원) 지원	-제주 해양수산기업 회원사 및 제주도 내 해양수산관련 기업 -지원제외대상 *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p>(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p> <p>②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 공동박람회 지원, 컨설팅 지원등)</p> <p>· 외부 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p>
경영-컨설팅	2017년 해양수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p>-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별 필요사항에 따른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p> <p>-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양수산 중소기업 대상</p> <p>-기업 당 최대 2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p>	<p>-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양수산 중소기업</p>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
경영-컨설팅 기술-기술사업화/이전/지도 창업-사업화지원	2018년 해양수산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	<p>-국내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경영·마케팅 컨설팅 및 기술·R&D 컨설팅 지원</p> <p>-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p> <p>-기업당 최대 5백만 원 가량 컨설팅 지원</p>	<p>-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p> <p>*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p> <p>-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경영-컨설팅	2018년 3차 투자희망 기업(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경영-컨설팅	2018년 5차 투자희망 기업(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사업)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 보조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경영-컨설팅	2018년 해양수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별 필요사항에 따른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양수산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상당 컨설팅 지원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양수산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2019년 투자희망 기업(해양수산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신청대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p>컨설팅 비용 지원</p> <p>-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유망사업)</p> <p>-컨설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 보조</p>	<p>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본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p> <p>• 대기업은 제외</p> <p>-지원 대상: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18.8)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유망사업</p> <p>• 8대 해양수산 전략 신산업 분야: ① 해양에너지, ② 해양자원 개발, ③ 첨단 해양장비, ④ 해양바이오, ⑤ 수산식품가공, ⑥ 스마트양식, ⑦ 스마트해산물류, ⑧ 친환경선박</p>
경영-컨설팅 금융-펀드/ 투자	2019년 해양수산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p>-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및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투자 컨설팅, 현장방문행사(팜투어), 기업IR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p> <p>-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p> <p>-투자 컨설팅, 현장방문행사(팜투어), 기업IR 및 투자자 네트워킹 지원(중복 신청 가능, 사업비용은 전액 무료)</p>	<p>-투자컨설팅: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30개사</p> <p>-현장방문행사(팜투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6개사</p> <p>* 상하반기 각 3~4개 기업씩 선정하여 방문, 정부 관계자 및 투자자 직접 방문</p> <p>-기업IR 및 투자자 네트워킹: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10개사</p> <p>* 분기별 2~3개 기업씩 선정하여 협의회 실무자 회의에 소개 및 네트워킹</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2) 창업분야

〈표-9〉 해양수산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신규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 -개별 사업화자금 2,250만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18.1.24 기준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 ·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직업, 연령 제한 없음(단, 창업 7년 미만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자 2011. 1. 24~2018. 1. 23 내 기업만 참가 가능) -참가형태: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창업-사업화 지원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기술 사업화/이전/지도	2018년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대상 -교육·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자금, 투자 활성화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컨설팅·멘토링 • 기술창업 교육: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투자교육: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 기업 역량 강화 컨설팅: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 해양수산 창업지원단 · 기술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멘토링: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초기 기반 구축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 해양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 투자심사역
창업-사업화 지원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2019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총 9,0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창업-사업화 지원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2019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 성장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1,900백만 원, 100개사 내외 지원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창업-사업화 지원 내수-홍보지원	2019년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해양관광에 IT 등 he 기술이나 서비스를 융합한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참가시 사업화 자금, 홍보마케팅 비용 등 지원 -해양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사업자당 2,250만 원 지원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직업, 연령 제한 없음. 단 창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p>7년 미만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2. 1. 23~2019. 1. 22 내 기업만 참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사항: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제 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해양관광벤처부문'으로 접수 • 참가형태: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개인 또는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우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1980. 1. 23. 이후 출생자)는 1차 서류심사 시 가점(1점) 부여 <p>※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의 경우 가점 대상자에 해당</p>
창업-사업화 지원 수출-시장개척 기술-기술 사업화/이전/지도	2019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모집 공고	<p>-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함</p> <p>-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대상</p> <p>-경영역량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p>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엑셀러레이터 •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창업 7년 이내 기업 ② 창업멘토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② 해양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이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차보전: 전담기관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 기업 • 투자 활성화 ① 해양수산 투자유치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②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 투 자심사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3) 금융분야

〈표-10〉 해양수산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금융- 융자 경영- 컨설팅	해양수산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지원사업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 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및 IR 자료 컨설 팅 지원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등 외부 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 산분야의 중소기업(해양수산분 야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 업도 신청 가능)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등 외부 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 산분야의 중소기업(해양수산분 야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 업도 신청 가능)
금융- 융자- 운전 기술- 기술사 업화/ 이전/ 지도	2017년 해양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사업	-해양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 해양기술의 산업화 및 국내 우수 해양기술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 해 저리의 사업화 자금 융자 지원 -해양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신청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	-해양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4) 인력분야

〈표-11〉 해양수산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인력 창업- 창업공 간지원	제2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해양수산부장관상, 한국해양과 학기술진흥원장상, 한국문화정 보원장상 등을 수여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양 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 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他 경진대회에 입상한 아이디 어는 신청 불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5) 기술분야

〈표-12〉 해양수산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기술- 단독기 술개발	2017년 미래해양산 업기술개발 사업(해양중 소벤처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p>-해양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기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제품화·사업화를 위해 실용화 기술 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p> <p>-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p> <p>-과제당 2.5억 원 이내 지원(1년)</p>	<p>-해양분야 단기 사업화를 위하여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p>※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필수</p> <p>-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각 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6) 내수분야

〈표-13〉 해양수산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내수분야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지원분야 및 대상
내수- 홍보지원	제5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촉진 과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이용활 성화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여 우 수 아이디어 시상 -해양수산 공공·빅 데이터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 나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부문별 우 수 아이디어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공공·빅 데이터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 나 ※他 경진대회에 입상한 아이디어 는 신청 불가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 델을 발굴하고, 민간 창업 촉진 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아이 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우수 아이디어 시상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 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제품) 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총 상금 1,000만 원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 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제품) 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 他 경진대회에 입상한 아이디 어는 신청 불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19. 5. 8) 참고하여 재작성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업 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경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언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환경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10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박상우
11	지역 해양수산 역량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황재희
12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	박성준
13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차보관 의무 도입방안 연구	임병호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을 중심으로 -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화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인 쇄 | 2019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영진피앤피 (02-734-3713)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